

전략과제 2016-22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박춘섭 외

발 간 사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시행된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는 꾸준히 성장하여 왔고, 우리 사회의 중요한 대안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지만 아직 사회적경제조직의 대부분은 영세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기존 기업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반면에, 사회적경제조직은 영리 추구하고 함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장애를 가진 사람을 일부러 고용하고, 생산성이 떨어지는 어르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만드는 일들은 사회적경제조직으로 하여금 효율을 높일 수 없게 하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게 합니다.

그렇다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가지는 이러한 한계는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쉽게 혁신적 아이디어만 있다면, 그리고 호혜와 연대로 뭉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는 사람들의 선한 양심으로, 또는 개인의 혁신적인 아이디어로만 작동하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는 경제시스템으로, 각 경제주체들에 맞는 다양한 지원제도와 인프라를 필요로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한 지원제도는 인건비 지원 등 직접 지원입니다. 이러한 보조금 형태의 직접 지원도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큰 힘이 되지만, 보조금은 양날의 검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조금과 같은 직접 지원 외에 다양한 형태의 지원제도와 인프라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는 이러한 고민을 풀기 위한 실마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 실마리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겪는 자본조달 어려움에서 찾았습니다. 연구는 왜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이 필요한지에서 시작하여, 충남형 사회적금융 체계의 비전과 장·단기 정책과제까지 자세히 논술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금융을 고민하는 정책입안자, 사회적경제인, 연구자 및 일반시민들께서 이 연구를 참고하신다면 많은 도움을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 연구를 수행한 박춘섭 사회적경제연구센터장을 비롯한 전지훈, 이홍택 연구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와 함께 외부 전문가로 참여하여 본 연구의 질을 높여준 김종수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상임이사님과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주) 대표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31일
충남연구원장 강현수

연구 요약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영역의 확장을 위한 금융 분야의 구축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는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대안으로 여겨지지만, 역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부의 창출과 분배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며 사회적경제는 소외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경제활동으로, 그 운영원리는 사회적 배제 등 공공영역을 포함한다. 하지만 사회적가치의 추구하고 대안경제의 움직임의 특성상 시장경제에서 작동하는 원리만으로는 사회적경제는 작동되기 힘들다. 특히 시장경제 속에서 작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금융문제에 있어서 다른 경제조직들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금융은 기업성장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될 때, 그 가치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적절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과연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탐색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사회적경제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 금융, 즉 사회적 금융은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형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2)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1)사회적금융 이론검토 및 사례분석, 2)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실태 및 설문조사, 3)관계 전문가 회의 등을 진행하여 충남지역의 사회적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 제안하고자 한다.

2. 연구의 주요 내용

1) 사회적 금융이론과 사례검토

구체적인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들과 활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사회적인 목적지향성이 강한 금융으로 다른 금융과의 차별점을 도출 가능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금융을 현재의 경제시스템에 있어서 사회적가치와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대출 및 투자의 부문들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의 시스템으로 사회적금융을 바라보고자 한다.

사회적금융의 특성은 가치 지향성, 관계 지향성, 임팩트 지향성의 3가지를 거론할 수 있으며 사회적금융의 운영원리는 ① 마이크로 파이낸스, ② 지역개발금융, ③ 사회목적투자, ④ 관계형 협동금융의 4가지 운영원리가 있다. 사회적금융의 체계와 시스템을 살펴보자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하는 조직에게 자본을 투·융자하는 금융체계이며 이를 위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금융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결국 기능적으로 보자면,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의 자금조달이라는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금융적, 경제적 활동들에 제공되는 자금의 흐름이라는 다양한 지원체계가 있고 이러한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자들에 의한 공급체계가 있다.

이러한 사회적금융의 사례를 살펴보기 위한 본 연구는 국내 사례중에서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사례를 검토하였고 국외 사례중에서 영국 사례, 미국 사례,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의 사례를 검토하였다. 국내의 중앙정부나 서울시의 사회적금융은 대부분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해 정부지원제도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자조적인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한계를 일정 부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외 사례에서 영국은 우리나라가 가장 벤치마킹하기 적절한 사례로 여겨지며 정부차원에서 제도적 기반 구축을 통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유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시장경제의 불평등 해소를 위한 법제도적 마련이 특징적으로 ‘지역개발금융기관법’과 ‘지역사회재투자법’이 특징적이다. 방글라데시 그라민은행은 사회적금융의 가장 대표적 사례로 거론되는데 대표적인 무담보 마이크로크레딧제도를 정착시킨 사례이며 대출에 있어서 공동책임제, 소통 및 사회적자본의 적극적 활용이 특징적이다.

2) 사회적금융 현황과 수요조사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다음과 같은 유형으로 구분한다.

첫째,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의를 바탕으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그리고 마을기업을 거론할 수 있는데 마을기업은 아직 법적 근거는 없지만 2010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자립형공동사업으로 시작하여 2011년 마을기업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이다.

다음으로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금융과 관련된 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충청남도는 지방자치법 142조의 규정에 따라 13개 기금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그중에서 충청남도의 사회적금융관련하여 참고 가능한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이다. 이와 함께 충남의 사회적금융 관련된 공공기관으로는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존재한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사회적기업을 위한 특별 보증하고 있다. 운영 목적은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보증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있다.

본 연구는 충남의 사회적금융을 위해 이와 관련된 수요자인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대상으로 사회적금융의 수요를 조사하였다. 조사대상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을 대상으로 현재 실제 사업을 운영하며 상시근로자를 채용하고 있는 98개 조직을 선별하여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응답기업들은 사회적금융에 있어서 정부자금과 같은 공적재원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자금조달 현황에서도 정부 정책자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충남의 사회적금융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사회에 가치있는 사회적 활동과 성과를 위한 금융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수요자들은 3천만원-5천만원 정도의 소액자금을 5-10년 정도의 장기간 대출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규모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의 보증이나 심사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회적 성과나 가치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3. 충남 사회적금융 구축방안

1) 사회적금융 구축과 주체의 역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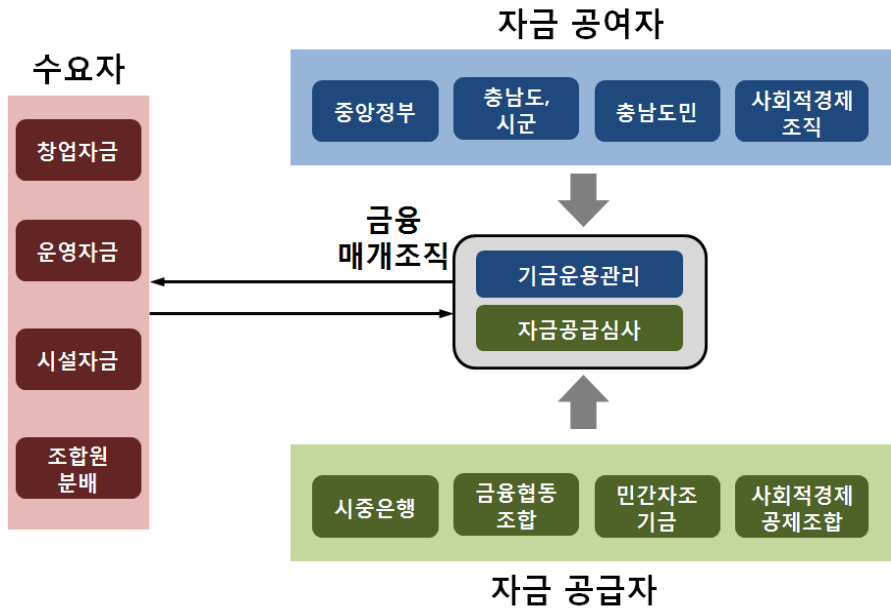
충남의 사회적금융의 구축과 실행을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사회적금융의 주요 주체와 이들의 지향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로 공급자 주체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해 경제적, 정량적 평가만이 아닌 정성적, 가치적 평가에 주목해야 한다. 이와 같이 정성평가에 대한 전환적 사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자금공급자로서 위험성(risk)을 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자금공급자가 사회적 가치성과의 정성평가방식을 인정하고, 동의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넘어선 가치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둘째, 수요자 주체는 사회적경제 주요 원리인 사회적가치추구를 지향해야 한다. 이는 동어반복의 형태일 수 있지만 실제 사회적금융 실태조사 결과 사회적금융의 재원과 운영에 있어서도 높은 공공 의존도가 나타남에 따라 과연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에 대해 동의하는지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수요자와 함께 지원의 주체인 정부 또한 사회적경제조직 보조금제도 재검토와 함께 사회적금융의 구축은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자조에 대한 노력, 연대의 필요성을 재정립하도록 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속성의 문제에 있어서 사회적금융은 투·융자시 잃을 수 있는 기회비용 또는 손실에 대한 보완이 없이는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으로,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누가 그리고 어떻게 위험을 안고, 감내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사회적금융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담보할 수 없다.

2) 충남 사회적금융의 구축방향 제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충남의 사회적금융 구축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충남 사회적금융의 특징은 지역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안전장치)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금융의 원칙을 실현해 나간다.

그리고 이러한 충남의 사회적금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수요자, 공급자, 매개자의 거버넌스 체계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충남 사회적금융의 거버넌스 체계〉



이러한 충남에서 사회적금융의 제도적인 설계와 구축과 함께 지역사회를 위한 새로운 금융시스템 또한 필요하다.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은 사회적금융의 또 다른 모색이 될 것이며 대표적인 방법은 지역화폐이다. 충남에서는 홍성의 ‘딸’이라는 지역화폐와 서천에서 실험적으로 이루어진 ‘서천레즈’를 거론할 수 있겠다. 비록 충남이나 국내의 지역화폐 운동은 미약하지만 유럽에서는 지역화폐의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경제회복의 방안으로 지역화폐를 주요 정책으로 삼아 유럽연합 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은 400만유로를 출연하였다. 이 자금을 통해 지역화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그중 브리스톨과 운드(사회적기업 운영)가 가장 활발하다.

3) 충남 사회적금융 구축 위한 정책과제 제시

본 연구는 충남에서 사회적금융의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장단기 과제를 구분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우선 단기과제로는 3가지를 제안할 수 있는데 첫째는 ‘충남 사회적금융 공급자’ 시범사업 실시하는 것으로 이 정책사업은 1~2개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되,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협동조합이 적절할 것이다. 둘째는 ‘충남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제조합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부상조(연대)를 기반으로 하므로, 사회적금융을 논하기 앞서 필요한 자조의 노력이다. 이러한 자조의 노력은 정책대상자인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사회적경제의 원리를 학습케 하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셋째는 ‘충남 사회적경제X클라우드펀딩’ 시범사업 실시로 대출형 클라우드펀딩은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다. 충남 사회적경제X클라우드펀딩 시범사업은 사회적금융 공급자 시범사업자와 연계하여 추진 가능하며, 시너지 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5년 이상의 중장기 과제로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충남 사회적금융 공급자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충남 사회적금융 공급자를 확산하여, 다양한 사회적금융이 생기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사회적금융의 노하우(성공과 실패의 경험)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금융 공급자를 선정하되, 1단계(~3년)에는 권역별(2~3시군) 공급자를, 2단계(3년~)는 시군별 공급자를 선정한다.

둘째, 충남 사회적금융 공급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사회적금융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축한다. 협의회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의견교환의 창구이자, 사회적금융 시책협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셋째, 민간의 자조활동을 위해 ‘충남 사회적경제은행’, ‘사회적경제펀드’ 구축을 지원한다. 충남 사회적경제은행(이하, 사회적경제은행)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비영리민간금융기관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펀드는 일반시민에게 자금을 모아, 개인, 단체, 프로젝트 등에 투·융자하는 금융조직이다.

마지막으로 ‘충남 사회적경제협력기금’을 구축한다. 앞서 제시한 과제들을 추진하게 되면, 다양한 사회적금융조직과 사회적금융상품들이 구축되었을 것을 판단된다. 이제 남은 정책과제는 이러한 기반에 충분한 자금(seed money)을 조성하고 배분하는 공공기금을 구축하는 것이 마지막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기금은 다양한 사회적금융 공급자에게 충분한 자금을 유통시키는 임브렐라기능, 즉 사회적금융의 기금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기금은 ‘(가칭) 충남 사회적경제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을 제안한다. 이러한 협력기금 설치를 위해 공공기금은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행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9조 1항에 기금 조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명확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며 기금운영위원회를 설치가 필요하다.

목 차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3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5
제3절 선행 연구 검토	8
 제2장 사회적금융의 이론과 사례 검토	12
제1절 금융시장의 구조	12
1. 금융시장의 이해	12
2. 단기금융시장 구조	14
3. 자본시장의 구조	18
제2절 사회적금융의 이론	19
1. 사회적금융의 개념과 특성	19
2. 사회적금융의 분류	29
3. 사회적금융의 형태와 모델	39
제3절 사회적금융의 사례검토	44
1. 국내 지원사례 검토	44
2. 국외 사례 검토	56
 제3장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금융수요	69
제1절 사회적경제 지원제도의 현황	69
1.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현황	69
2. 충남 사회적경제관련 금융제도 현황	77

제2절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수요 실태조사.....	88
1. 조사설계	88
2. 사회적금융 인식실태 조사결과.....	91
3. 실태조사 분석소결	105

제4장 충청남도 사회적금융 구축과 실행방안 108

제1절 충남 사회적금융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108
1. 공급자: ‘의지가 있는 자금’의 필요	108
2. 수요자: 자립의지와 사회적경제 원리에 대한 동의	109
3. 지속성: 위험(Risk)분산 시스템	110
제2절 충남 사회적 금융의 구축방향	112
1. 공급측면	112
2. 수요측면	113
3.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 및 운영방향.....	116
4. 새로운 금융시스템 탐색: 지역화폐	119
제3절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 구축.....	121
1. 단기과제(~5년).....	121
2. 중장기과제(5년~).....	124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29

제1절 요약과 결론	129
제2절 정책제언	130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132

참고문헌	133
[부록 1] 전문가FGI 자료.....	135
[부록 2] 금융 수요조사 설문지	146

표 목 차

[표 1] 주요 연구내용	5
[표 2] 사회적금융 개념의 지역별 비교	20
[표 3]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유형	23
[표 4]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투자 현황	36
[표 5]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투자방식	38
[표 6] 국내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제도의 현황	44
[표 7] 사회적기업 대출사업 내용	46
[표 8] 사회투자기금 사업 운영 현황('13~'14, 단위: 백만원)	55
[표 9]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이유	58
[표 10]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자금유통 수단	59
[표 11] CDFI의 이용 대상자	62
[표 12] 사회적경제 .유형 구분	71
[표 13] 사업개발비 유형별 지원내용	72
[표 14]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73
[표 15] 충청남도 기금 운용의 현황	78
[표 16] 농업6차산업화 육성사업 지원내용	80
[표 17]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81
[표 18]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 종류와 내용	82
[표 19]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지원제도 현황	84
[표 20] 설문조사 주요내용	88
[표 21] 설문 응답기업의 특성	90

그림 목 차

[그림 1]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13
[그림 2] 금융시장의 구조	14
[그림 3] SIB의 투자 자금 흐름	25
[그림 4] 사회적경제 활동의 구성요소와 구조	28
[그림 5] 사회영향채권(SIB)의 구조도	30
[그림 6] 은행의 대출 프로세스 비교	33
[그림 7] 사회적금융 공급주체의 투자기회	34
[그림 8] 해외사례의 사회적금융 비교	34
[그림 9] 생애주기별 이용가능 금융옵션	37
[그림 10] 사회적금융의 기능과 역할	40
[그림 11] 사회적금융 형성의 모델	43
[그림 12] 농업6차산업화 사업시행 절차	80
[그림 13] 신용보증 지원제도 기본구조 및 지원절차	83
[그림 14] 클리블랜드재단의 기금 배분사업(2011년)	86
[그림 15] 조사대상기업들의 연평균 매출규모	91
[그림 16] 조사대상의 사무공간 형태	92
[그림 17] 조사대상의 자금조달 방법	93
[그림 18] 조사대상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	93
[그림 19] 조사대상의 자금상환기간	94
[그림 20] 조사대상의 자금조달의 어려움	95
[그림 21] 조사대상의 외부자금조달 필요성	96
[그림 22] 조사대상의 선호하는 자금조달	96
[그림 23] 조사대상의 자금조달규모	97
[그림 24] 조사대상의 조달자금 용도	97
[그림 25] 조사대상의 자금상환기간과 자금필요분기	98
[그림 26] 조사대상 물적담보 제공 여부와 수준	99
[그림 27] 조사대상 이자상환 부담금리	99

[그림 28] 조사대상의 인적보증제도의 의견	100
[그림 29] 조사대상의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 정도	101
[그림 30] 조사대상의 사회적금융 특징 인식	101
[그림 31] 조사대상의 사회적금융의 최우선 목적활동	102
[그림 32] 조사대상의 사회적금융의 역할과 기금활용의 의견	103
[그림 33] 사회적금융의 가장 효과적인 재원마련 응답결과	104
[그림 34] 충남 사회적금융 재원마련 위한 이상적인 방법 조합	104
[그림 35] 사회적금융 지원조직의 운영 형태 응답결과	105
[그림 36] NPO 원기지원loan 대출 및 보증심사 흐름도	115
[그림 37] 충남 사회적금융 구축의 체계	117
[그림 38] 충남 사회적금융의 거버넌스 체계	118
[그림 39] 클라우드펀드 흐름도	123
[그림 40] 팝펀딩의 금융기관 제휴모델	124
[그림 41] 사회적경제은행 흐름도	126
[그림 42] 사회적경제펀드 흐름도	127
[그림 43] 충남 사회적금융의 체계	130

제1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사회적경제는 급격한 사회변화 속에서 등장한 사회적·경제적 필요를 새로운 방식으로 해결하려는 경제활동들이라는 특징을 가진다. 사회적경제의 첫 시작으로 일컬어지는 로치데일공정개척자협동조합이 그러했고, 우리나라의 사회적기업이 그러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시작을 1848년의 로치데일공정개척자협동조합¹⁾의 성공으로 보며, 로치데일협동조합은 당시 영국자본주의가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시기에 노동자들의 생활을 지켜내고자 한 소비자협동조합 형태의 시도였다. 이러한 시도는 유럽 대륙으로 전파되었고, 소비자협동조합만이 아닌, 농업협동조합, 금융협동조합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경제조직으로 분화하게 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의 시작을 1)두레 또는 계와 같이 마을공동체활동, 2)해방후 1950년대 신협 및 마을금고운동으로 보고 있지만,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화두가 된 것은 아마도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부터가 아닐까 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 육성책의 시작을 살펴보면, 1997년 IMF의 구제금융 이후 대규모 실업사태를 해소하기 위한 일자리 창출사업이 그 태동이다. 이것은 사회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회를 안정화하기 위한 조치였고, 대응활동이었다. 그러므로 사회적경제를 단순히 일자리 창출의 연장선에 있는 정책으로, 또는 일종의 사회운동의 흐름으로서 파악해서는 안 된다.

사회적경제는 명확한 사회적 목적을 가진 경제시스템으로, 단순히 몇몇의 특수한 이익에 복무하는 기업들의 집단으로 봐서는 안 된다. 또한 사회적 경제는 운동

1) 일종의 소비자협동조합으로, 당시 기업주의 횡포로 저질식료품을 공급받은 것에 반발하여, 공장직공 28명이 1파운드씩을 출자해 밀가루, 버터, 설탕을 공동구매, 판매하는 협동조합이다. 예를 들어, 이용배당원칙, 공정가격원칙 등 로치데일의 원칙은 오늘날 협동조합의 원칙에 큰 영향을 주었다.

체(결사체)적인 성향을 띄기에, 사회운동으로 파악하기도 하지만, 결사체적 성격과 기업체적인 성격을 함께 가진 조직들로 구성된 경제시스템으로, 단순 사회운동으로 봐서도 안 된다. 사회적경제는 시장을 통해 생존하고, 시장원리로만 작동하지 않는 경제(박찬임외, 2014)이며, 시장이 실패한 영역에서의 경제활동으로 일반 경제와는 다른 기준이 필요함은 물론,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한다.

사회적경제 역시 시장에서의 경쟁을 통한 부의 창출과 분배를 추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는 소외된 것들을 지키고자 하는 경제활동으로, 그 운영원리는 사회적 배제 등 공공영역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시장경제에서 작동하는 원리만으로는 사회적경제는 작동되기 힘들다. 예를 들어 장애인고용을 목적으로 한 사회적경제기업이 일반 기업과 경쟁하여 시장에 살아남는 것은 용의한 일이 아니다.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시장에서 성장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2007년 이후 정부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취약계층 일자리지원에 집중되어 있어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경제가 시장에서 성장, 생존하기 위해서는 금융공급이 절실하다.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행정자치부 ‘마을기업’, 복지부 ‘자활기업’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등 각 부처별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가장 다양한 지원책을 가진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건비 지원, 사회보험료 지원, 경영컨설팅 등 시책이 활성화되어 있지만, 금융지원에 대해서는 실효성이 높일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의 보조금 방식의 문제점 해소와 새로운 형태의 협동조합과 소셜벤처들의 금융지원의 수요 급증 등의 이유로 그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다(박종현외, 2015)

금융은 기업성장에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공급될 때, 그 가치가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가 가진 특성 때문에 일반 금융기관에서는 적절한 공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4년 서울시 한국사회투자의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일반 금융기관 대출(17.9%)보다는 특수관계인의 차입, 즉 대표자와 같은 개인차입(31.4)이 두배 가까웠다. 이는 경제조직으로서 금융서비스를 받기 어렵다는 것을 보여주는 수치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 또는 마을기업과 같이 제도권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이 아닌, 협동조합의 경우 금융기관의 도움을 거의 못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기획재정부 조사에 따르면, 협동조합의 4.4%만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달받았다.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적절한 금융공급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필수 불가결하다. 그러나 단지 금융공급적인 측면만이 아닌, 사회적경제에 대한 금융지원은 급격한 사회변화의 동인(動因)인 글로벌 자본주의 시스템의 대응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겠다.

2. 연구의 목적과 구성

그렇다면, 과연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은 무엇일까?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이것이 탐색하고자 하는 주제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1)사회적경제의 특수성을 전제로 한 금융, 즉 사회적 금융²⁾은 어떤 특성을 가지며, 어떤 형태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2)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 시스템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서 1)사회적금융 이론 검토 및 사례분석, 2)사회적경제 조직 등에 대한 실태 및 설문조사, 3)관계 전문가 회의 등을 진행하여 충남지역의 사회적금융이 활성화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도출, 제안하고자 한다.

우선 2장에서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사회적금융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한다. 최근 사회적경제를 위한 금융, 즉 사회적 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연구와 시책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사회적금융에 대한 이해가 떨어지는 상황이다. 사회적금융의 등장 배경과 정의, 운영원리 등을 검토함과 동시에, 금융시장에서의 사회적금융을 살펴봄으로써 시스템적인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제 특성에 따른 사회적금융의 분류를 통해 다양한 사회적금융의 제공 방식의 이해하고,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에 적합한 금융공급에 대해 다양한 정책 조합을 검토한다. 또한 사회적금융의 다양한 사례를 통해 사회적금융 실제를 검토한다. 국내 및 영국, 미국 등 해외 사례 분석을 통해 사회적금융의 실제를 검토한다. 국내 사례의 경우, 아직 기금 설치 및 운영에 집중된 반면, 해외 사례는 금융기관, 기금, 투자 등 다양한 사회적금융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다. 다양한 사례 검토를 통해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의 시사점을 도출한다.

3장에서는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지원제도와 함께 관련된 금융지원제도의 현황을 검토한다. 그리고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의 실태 및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여 분석한다.

2)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금융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대출·투자 등을 포괄하는 금융으로 정의

이를 통해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기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금융의 수요를 파악할 뿐만 아니라 실제 겪고 있는 금융의 어려움을 확인한다. 이를 바탕으로 지역차원의 사회적금융 체계 제시를 위한 기초 실태자료를 제시한다. 4장에서는 이상과 같은 이론분석, 사례 및 실태조사를 통해 얻어진 결과와 시사점을 바탕으로 충남의 사회적금융 체계를 구축의 방향과 거버넌스의 틀을 제시하고 실제 충남에서 어떻게 사회적금융을 실행할 것인지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1. 연구내용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3가지 시각을 설정하여, 다면적인 분석을 시도한다. 이를 통해 현실성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① 공급자 시각(사회적금융 사례분석): 금융시장 및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자금 조달과 금융지원을 위한 다양한 기관 활동과 지원정책을 파악, 분석

② 수요자 시각(충남의 사회적자금 및 금융시스템에 대한 수요조사): 설문조사와 관련 조직 간 워크숍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요구하고 필요로 하는 자금 수요 및 금융 시스템 대해 분석

③ 전문가 시각(충남의 사회적금융 체계를 구축의 방안 수립): 공급자·수요자 시각에서 분석된 내용을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충남 사회적금융 시스템 구축방안으로 도출, 제안

[표 1] 주요 연구내용

공급자 시각	수요자 시각	전문가 시각
국내·외 사회적금융 체계 사례조사	충남의 사회적금융 수요 및 인식조사	충남 사회적금융 지원 시스템 구축

2. 연구방법

1) 문헌조사 및 조사자료 분석

사회적 금융에 대한 개념과 작동 원리 및 운영체계에 대한 이론분석과 문헌검토를 실시한다. 국내외의 사회적경제 지원 기금과 금융체계들에 대한 사례 조사를 실시하여 다양한 재원조달방법, 재정지원방법,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금융지원체계 등의 현황들을 분석한다.

2) 전문가 FGI(Focus Group Interview)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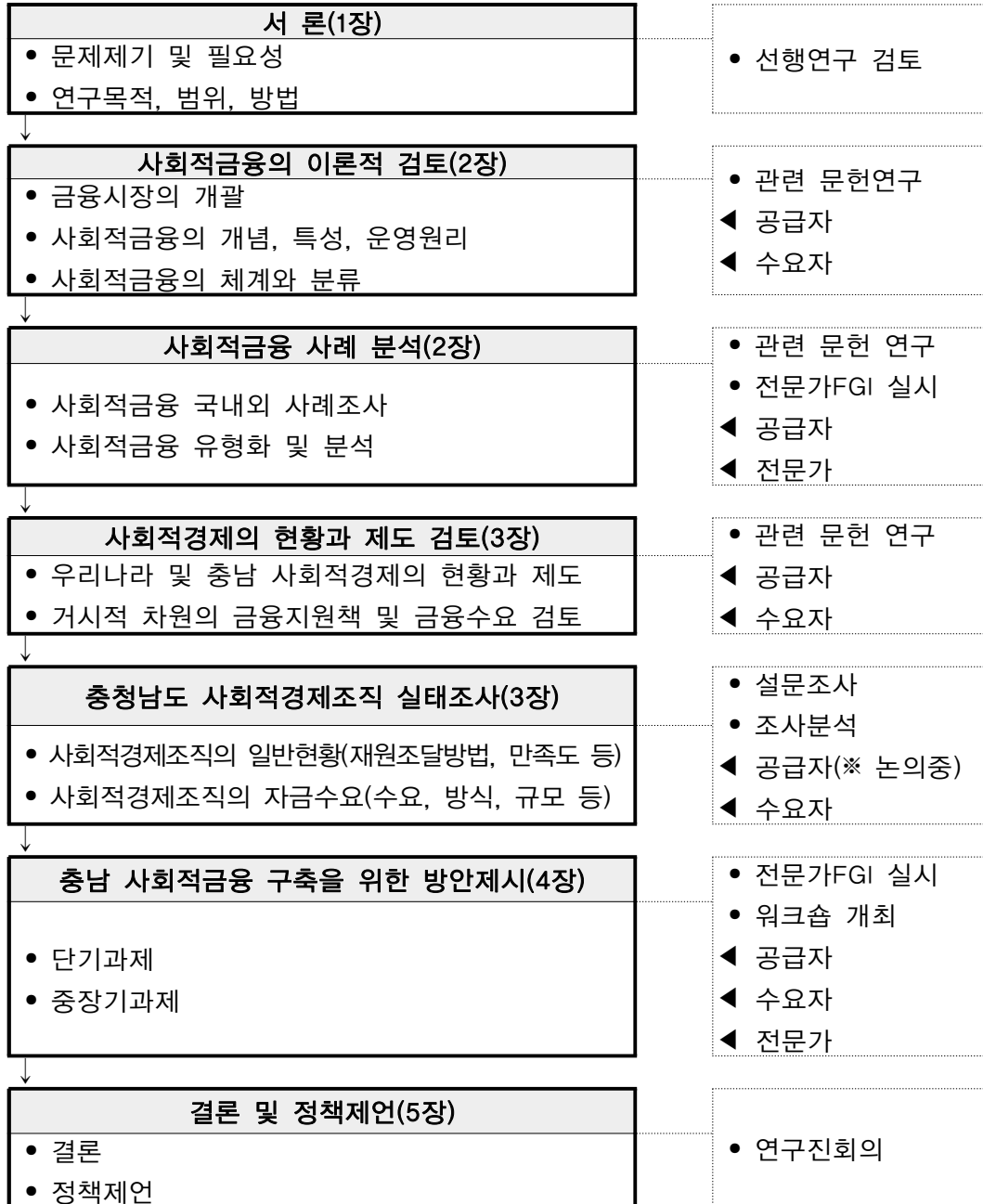
사회적금융 관련 전문가 FGI를 실시하여 충청남도 사회적 기금 운용과 금융체계의 방향에 대한 자문과 견해들을 분석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 등 대상 실태조사 실시

사회적금융의 다양한 이론과 현황조사를 토대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사회적 기금과 금융시스템에 대한 수요조사를 설문조사의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한다. 설문방식으로 조사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재원조달 방법과 현황
-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자금 수요 조사
- 사회적금융의 인식과 수요

3. 연구 흐름도



제 3 절 선행연구 검토

1. 사회적금융의 이론적 논의

사회적금융이라는 주제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아직 국내에서 미흡하며 신용협동조합처럼 협동조합의 금융기관이나 기존 제도권 금융을 중심으로 한 자금조달 및 재원조성의 연구들이 소수 존재하고 있다. 본격적인 사회적금융에 관련된 이론과 전략들에 대한 소개는 문진수 한국사회적금융연구소장에 의한 단행본의 문헌들을 발견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선행연구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장구보·이혜정(2015)은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연구」를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원조달의 필요성의 이론과 사례의 분석을 바탕으로 인천지역 사회적기업들의 사회적금융이용 및 조달 실태분석 실시하였다.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론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자금조달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들로 자금조달 접근성과 다양성 향상을 위한 사회적금융기관 활성화 제시하였다.

문진수(2013)는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를 통해 사회적금융의 시스템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적 검토를 통해 다양한 대안금융들의 방안들을 제시(마이크로파이낸스, 사회목적투자, 지역금융, 협동금융)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방안들을 바탕으로 한국의 사회적금융 생태계 구축의 전략과 방안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종수·유병선 외(2013)의 「보노보 은행」은 사회적금융 및 대안금융의 구체적인 해외사례들의 검토(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미국, 이탈리아, 캐나다, 미국)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해외사례들의 시사점을 중심으로 국제적으로 사회적금융의 다양한 혁신적인 시도들에 대한 사례위주의 검토하고 있다.

2. 사회적금융의 현황 및 역할의 연구

다음으로 사회적금융의 다양한 형태에 대한 현황의 소개와 이를 통한 한국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장종익·박종현(2013)은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의 연구를 통해 사회적금융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의 검토와 선진국에서 사회적경제의 지원금융체제 발전 사례들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검토를 통해서 지역금융체제의 주요 주체를 중심으로 한국의 사회적금융 발전을 위한 과제들을 제시한다.

박정희(2014)는 「협동조합금융기관은 소득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연구를 통해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 재무자료의 수신 현황을 기반으로 지역의 소득불평등의 해소(GINI 계수 활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실제 협동조합금융기관이 저소득층 금융접근에 도움을 주고 미약하지만 경제적 평등에 기여한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이를 지원하는 협동조합금융기관 설립 허용 등의 정책적 방안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박관훈(2014), 「금융소비자 보호와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를 통해 자본주의 4.0의 시각에서 사회적경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관련성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투자와 지원방식을 검토하고 특히 크라우드 펀딩의 방법을 활용하여 수익과 함께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새로운 움직임에 주목하고 있다.

박종현·장종익(2014)은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조직모형과 한국적 시사점」 연구를 통해서 마이크로파이낸스의 등장 및 주목에 대한 배경과 운영적 현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해외사례(그라민 은행)들을 검토하여 신탁모델 등의 대안적인 한국적 마이크로파이낸스 모형을 검토하였다.

라준영(2014)은 「사회적 자본시장과 성장자본」을 통해, 세계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사회영향투자(Impact investing)의 시장 확대에 주목하고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보조금 연계형 사회영향투자를 제안하였다. 그는 사회적경제조직을 유형별로 나누고, 유형에 따른 다양한 투자모형이 정립되지 않으면 사회적 자본시장은 성장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박찬임·박종현·장종익(2014)은 「따뜻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펀드 활성화 방안」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 특히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초점을 두고, 자금 수요현황, 지원금융체계, 사회적금융생태계 및 금융지원방안을 검토하였다. 금융지원방안으로 1)사회적기업 개념의 재정립과 법적근거 마련, 2)사회적투자 활성화 정책마련, 3) 투융자자금 중개기관 설립, 4) 지역개발금융기관(CDFI) 설립을 제시하였다.

3. 사회적금융 구축을 위한 방안 연구

그리고 다음으로는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금융의 구축을 위해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금융 도입 및 구축의 연구들을 수행하였다.

이인우(2015)는 「경기도 사회적금융기금 도입운영방안 연구」를 통해 경기도의 파복공동체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의 개념화를 시도하였다. 그리고 경기도 파복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기금의 도입과 운영방안들을 다양한 국내외 사례조사와 경기도 사회적경제의 현황분석을 통해 사회적금융기금을 어떻게 도입할 것인지의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민병길(2015)은 「경기도 도민은행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를 통해 자율적이고 선순환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경기도의 지역금융시스템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주요 선진국의 지방은행에 대한 역할과 현황을 살펴보고 경기도의 관련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과 금융기관 간 파트너십을 통해 거래보다는 관계금융 강화를 중심으로 정보비대칭성 완화의 노력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이준호(2015)는 「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 연구」를 통해 최근 한국사회에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도도입의 필요성과 함께 관련 사례검토와 정책 및 법률검토를 하였다. 그는 정책개발에 선행하여 법적근거와 제도설계의 기반 조성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박종현·김낙현(2015)은 「경남지역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국내외 경상남도의 사회적경제 및 지역현황을 파악하고 자금조달의 문제점을 중심으로 하여 경상남도 지역에 있어서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방안들을 도출하고 있다.

서봉만·서희원(2014)은 「인천시 사회적 금융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인천시에서 사회적금융의 논의가 대두된 배경과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고 이론적인 검토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미국을 비롯한 서구 국가들의 사회적금융 작동방식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의 사회적금융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인천광역시에서 사회적금융 도입을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안하였다.

4.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위에서 소개한 선행연구들은 다음과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역할로 분류된 선행연구들에서는 사회적금융 해외사례들의 검토가 주 내용을 이룬다. 특히 마이크로파이낸스, 사회목적투자 등 지엽적인 전략부분을 검토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거시적인 시각에서 사회적금융의 당위적인 함의를 도출하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박찬임외(2014)의 경우, 사회적금융 전반에 대한 분석과 분류, 활성화 방안까지 도출하고 있으나,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금융의 제안까지는 이끌어 내지 못하였다. 지역적 차원의 사회적금융 구축방안에 대한 선행연구들 또한 경기, 인천과 같은 각 지역적 특색에 적합한 사회적금융구축을 위한 정책적 제언을 위한 사례 및 현황검토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박종현·김낙현(2015)은 경남지역의 사회적금융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실제 경남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수요, 방식, 만족도 등을 기초한 수요자의 시각이 포함되지 않은 한계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에서 지적된 한계들을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밝힘으로써 모색하고자 한다.

우선 사회적금융의 이론 검토 및 사례분석을 통해 ①거시적인 사회적금융체계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동시에 ②기능별 분류와 조합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금융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공급 위주의 검토에서 벗어나, 수요자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전문가의 시각을 반영하여 현실성 있는 지역의 사회적금융체계의 상(像)과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2장 사회적금융의 이론과 사례 검토

제 1 절 금융시장의 구조³⁾

1. 금융시장의 이해

경제주체들은 국민경제 내에서 끊임없이 부(wealth)를 생산하고 분배함으로써 경제활동을 영위하는데, 이를 위한 기구(mechanism) 혹은 제도를 경제제도(economic system)라고 한다. 경제제도내 기본적으로 생산요소시장, 생산물시장, 금융시장의 세가지 유형의 시장이 존재한다.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이란, 기업, 가계, 정부등 경제주체들이 금융상품⁴⁾을 거래하여 필요한 자금(부족자금)을 조달하고 여유자금(잉여자금)을 운용(투자)하는 조직화된 장소(place)⁵⁾를 말한다. 금융시장에서는 자금의 공급자(투자자)는 대부자금에 대한 대가로 약속증서 즉 금융청구권 등의 형태로 받는다. 자금공급자는 현재소비를 장래 특정시점으로 연기하고 위험을 부담하는 대가로 추가적 소득을 얻는 것을 기대한다.

금융시장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금융기관들이 자금잉여집단으로부터 자금을 모아 자금부족집단에게 필요한 자금을 대여해 준다. 은행 등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을 하면 간접금융이고, 증권시장에서 직접 주식발행(또는 채권발행)으로 조달하면 직접금융으로 분류한다.

②금융시장은 저축자(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저축(투자)기회와 자금운용수단을 제공하고, 차입자에게는 다양한 차입수단(금융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실패투자를 촉진한다. 그 결과 국가경제의 자본형성을 촉진하며 금융상품의 수요와 공급을 균형있게 조절한다.

3) 이요섭, '금융시장의 이해', 2015을 참조 정리하였음

4) 금융상품이란, 현재 또는 미래의 현금흐름에 대한 법률적 청구권을 나타내는 화폐적 증서를 의미함

5) 조직화된 장소는 증권거래소나 선물거래소와 같은 일정한 거래규칙과 구체적 형태를 가진 거래소시장은 물론 점두 거래 등 장외시장 등 모든 시장을 포함한다.

③금융시장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융상품의 신속한 가격결정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거래당사자들로 하여금 완전경쟁시장에서의 가격수용자로 임하도록 유도한다. 만약 금융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금융상품가격 결정시 비용과 시간이 들 수 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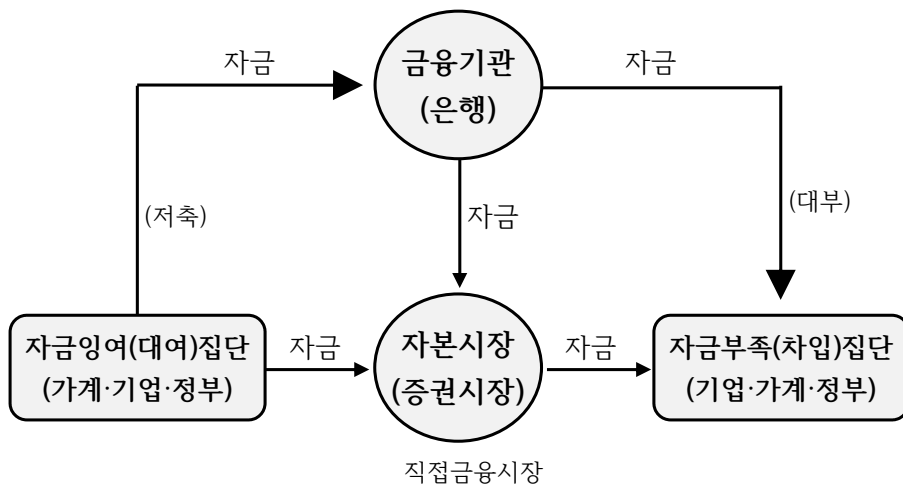
④금융시장은 금융자산 보유자들에게 유동성을 신속히 제공하여 급작스런 필요자금을 활용가능하게 해 준다.

⑤금융시장은 여러 형태의 시장참가자들에게 그들의 위험선호도(risk preference)에 따라 다양한 파생금융상품의 거래기회를 제공하고, 위험관리 기능을 한다. 위험선호도에 걸맞는 자금운용을 하게 한다.

금융시장은 ① 매개자의 유무에 따라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 ② 거래장소 및 통화에 따라 국내금융시장과 국제금융시장, ③ 청구권의 성격에 따라 부채시장, 주식시장, 복합형시장으로, ④발행단계에 따라 발행시장과 유통시장으로, ⑤만기기간에 따라 화폐시장(1년이내)과 자본시장으로 나뉜다.

특히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은 직접금융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볼 수 있는데, 아래와 같은 흐름을 나타낸다. 직접금융조달은 필요금액을 사전적으로 확정해서 조달하며, 간접금융조달은 중개금융기관(은행, 보험사)이 불특정다수의 저축자(자금공급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소정규모로 분할하여 차입자(자금수요자)에게 대부하는 흐름을 나타낸다.

[그림 1] 금융시장의 자금흐름



자료: 이요섭 (2015)

금융시장은 복잡하고 다양한 시장이 존재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에 맞추어 전통적 금융시장의 단기금융시장과 자본시장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기로 한다.

[그림 2] 금융시장의 구조



자료: 이요섭 (2015)

2. 단기금융시장 구조

1) 화폐시장

화폐시장은 가장 전통적인 금융시장으로, 통상 만기 1년이내의 화폐자산 거래시장을 의미한다. 정부, 공공단체, 비금융기관 등 자금부족집단에게 단기자금을 대여하고 금융기관 및 비금융기관등 자금 잉여집단이 이들 거래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는 금융시장으로, 금융시장은 거래자금의 만기를 기준으로 단기금융시장인 화폐시장(money market)과 장기금융시장인 자본시장(capital market)을 구분로 구분한다.

화폐시장에는 콜시장⁶⁾, 단기정부증권시장(Treasury Bill), 통화안정증권시장⁷⁾, 기업어음시장(CP), 양도성예금증서시장(CD) 등이 있다.

2) 은행금융시장

은행금융시장은 예금상품과 대출상품, 환업무상품이 거래되는 시장을 말한다.

예금(deposits)은 은행이 수많은 불특정다수의 예금고객으로부터 여러가지 형태의 예금자금을 예탁받아서 원하는 기간 동안 맡아주면서 여기서 집합된 자금을 원천으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대출이자수입중 예금자 지급이자 차감후 차액으로 은행을 운용하는 원천적 예탁금을 의미한다.

대출(loan)은 은행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차입자에게 약정기한인 만기에 원리금의 상환을 확정하고, 필요자금을 차입자에게 일정조건하에 빌려(대부)주는 것을 말한다.

3) 비은행시장

전문적인 여신금융을 주업으로 하는 비은행금융시장은 리스시장, 팩터링시장⁸⁾, 신용카드시장, 할부금융시장, 벤처캐피탈시장 등이다. 1998년 여신전문금융법 제정된 후 단일 법률로 운영되고 있다.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은 모험기업을 창업하거나 모험기업의 사업확장에 여기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 투자하여 나중에 그 기업이 성공한 후 투자원금 회수와 함께 자본가치 상승으로 높은 자본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기업 또는 투자그룹을 말한다.

벤처기업이란 우리나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르면 창업투자회사의 투자액이 자본금의 10%이상이거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5%이상인 것을 말하지만, 미국 중소기업투자법에서는 위험성이 크나 성공할 경우 높은 수익이 기대되는 신기술 또는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영위하는 신생기업이라 규정하고 있다.

6) 주로 금융기관간 초단기자금, 1주일 또는 수일의 차입대여 시장

7) 통화량 조절을 위한 한국은행이 일반,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발행하는 단기증권시장

8) 팩터링(factoring)이라 함은 금융(신용)공여자인 팩터(factor 금융기관)가 고객이 보유한 매출채권을 구입, 고객에게 간접적으로 금융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팩터는 원래 수수료를 받고 위탁상품을 대신 판매해주는 판매대행인이었으나, 이런 기능은 없어지고 매출채권의 매입을 통한 신용공여자로서 변모하였다.

4) 자산운용시장

자산운용시장은 은행신탁, 증권투자신탁, 부동산투자신탁, 증권저축 등 모든 금융자산의 관리, 운용, 처분 등을 목적으로 거래되는 전문시장을 말한다.

신탁이란 위탁자(맡기는 자)가 금전 또는 재산 등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맡은 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로 하여금 위탁자(혹은 수익자)의 이익을 위해서 그 재산을 관리하게 하거나 처분하게 하는 제도를 말하고, 수탁자는 수탁업무 수행에 따른 서비스 제공의 대가로 신탁수수료를 위탁자로부터 받는 것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규정을 따르게 하고 있다.

증권저축이란 일반 소액투자자는 투자정보나 투자기술 등이 부족하고 소액의 자금을 운용하여 직접 증권투자가 어렵기 때문에, 증권저축취급기관이 이들의 소액저축금을 모아서 증권을 투자하고 관리를 대신하는 제도를 말한다.

증권저축시장 중 종업원지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가 있는데, 이는 회사의 종업원 자신이 회사의 주주가 되어 수익배분에 참가하는 제도를 말한다. 매년 급여의 일정액 또는 미리 정한 금액을 종업원지주신탁에 출연하고, 동 신탁에서는 자사주 50% 이상 및 다른 주식에 투자하여 종업원 퇴직시에 퇴직금으로 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종업원지주제도⁹⁾는 확정각출형 기업연금의 일종인데, 이 제도의 기본 취지는 종업원들 스스로가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을 갖고 기업경영 및 이익에 참여함으로써, 노사관계의 개선을 통해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근로자들의 재산형성을 촉진하여 퇴직 후 노후보장을 한다는 것이 주요 목적이다.

5) 종합금융시장

종합금융시장이란 특정업무(지급결제업무, 보험업무, 가계대출업무 등)을 제외하고 기업금융업무의 대부분을 영위하는 금융시장을 말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시장, 벤처캐피털시장, 보증 및 인수시장, 금융부대서비스시장 등이 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PF)은 항만건설, 고속전철건설 등 초대규모급 프로젝트 투자사업을 중장기간 수행하면서 수반되는 공사발주 등 전반적으로 총괄관리하면서

9) 한국의 종업원지주제도는 우리스주조합을 통해 운영되고 있다. 특히 상장기업의 경우는 기업공개 또는 유상증자시 의무적으로 일정비율을 종업원에게 우선배정토록 하고 있으며 주식취득자금에 대해서는 기업자체, 한국증권금융(주), 은행 등에서 일부지원 또는 대출해주며 주식취득가액의 일정액을 종업원의 소득세액에서 공제해 주고 있다.

완공후 발주청과의 계약에 따라 일정기간 프로젝트 사업의 운영관리를 통해 발생하는 수익금으로 투입자금을 회수하는 종합프로젝트 사업을 말한다.

보증¹⁰⁾ 및 인수시장이란, 금융기관의 보증 또는 인수는 신용력이 약한 고객에게 금융기관의 신용을 이전하는 여신행위의 일종이다. 대출과 다른 점은 자금을 당장 지출하는 것에 대해 보증인수는 직접적인 자금부담을 수반하지 않고 부담사유가 발생시에만 실행되는 조건부 채무행위이다.

금융부대서비스시장이란, 금융시장의 거래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업무분야를 체계화한 것으로, 서비스로는 신용평가, 자문서비스, 유가증권의 관리대행, 현금관리서비스 보호예수업무 등이 있다.

금융부대서비스중 신용평가는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회사채를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발행기관의 신용평가등급이 채권의 금리를 결정하는 것으로, 신용평가회사의 존재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의 완화하고, 금융시장의 효율성을 증대시킨다는 점이다.

6) 보험 및 연금시장

보험은 동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다수의 사람들이 일정한 대가(보험료)를 지불하고 위험을 제3자(보험회사)에 전가하여 피해를 복구시켜주는 경제제도로써 위험관리의 한 수단이다. 개별적인 손해를 다수인이 공동의 힘으로 회복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제도라 볼 수 있다.

연금제도(annuity)는 소득생활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국가 또는 소속 직장에서 운영하는 기금에 소득 중 일정액을 정기적으로 각출·납부하여 퇴직 후 또는 미리 정한 연령에 도달한 후부터 일정한 금액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여 노후생활의 안정을 기하고자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10) 보증채무라 함은 주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인이 채권자에 대해 이를 대신 이행하여야 하는 채무를 말한다.

3. 자본시장 구조

1) 증권(주식)시장

증권시장(securities market)은 증권상품¹¹⁾이 거래되는 시장으로, 1년 이상의 장기 기업자본을 직접 조달하는 것을 주내용으로 하는 발생시장과 발행상품을 매매유통을 주로하는 유통시장으로 나뉜다.

증권시장은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으로 구분한다. 이는 광의의 자본시장으로 불리며, 자본시장은 장기자본의 조달과 유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은행상품, 자산운용상품, 비은행금융상품 등의 단기금융시장과 구별된다.

2) 채권시장

채권(bond)은 정부, 공공기관, 특수법인, 주식회사 형태의 기업 등 발행주체(자금부족집단)가 일반대중과 법인투자자 등(자금잉여집단)으로부터 거액의 장기자금을 일시에 대량으로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일종의 채무증서로, 채권을 발행할 수 있는 기관과 회사는 법률로서 정해진다.

일반적으로 채권은 증권거래법에 정하는 바에 의해 채권발행주체가 증권회사를 통해 유가증권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어 유동성과 편의성이 보장되는데, 회사채를 발행하려면 엄격한 신용평가제도를 거쳐야 한다.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등급에 따라 회수가가능성정보가 제공되므로 회사채 발행금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11) 증권(securities)는 유가증권의 줄임말로, 권리유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발행된 재산적 권리가 표창된 유가증권을 말한다. 광의로는 화폐증권, 상품증권, 투자증권 자본증권을 말하지만, 협의로는 투자증권 또는 자본증권을 지칭한다.

제 2 절 사회적금융의 이론

1. 사회적금융의 개념과 특성

1) 사회적금융의 등장배경과 정의

2008년 세계 금융위기는 시장만능주의자들의 맹신과 1980년대 확산되기 시작한 구조화금융(structured finance) 금융버블이 맞물려 촉발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사회적금융조직들이 주목받기 시작하였다.

시장자본주의에 기반한 금융공학 신뢰의 추락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분노는 2011년 월가(wall street)의 시위로 촉발되었다. 대안으로 미국과 영국 등 선진금융국가들을 중심으로 윤리은행, 신용협동조합, 지역 풀뿌리 금융기관 등 소위 '사회적금융' 조직들이 부상하기 시작하였다.

사회적금융은 공동체, 지역사회의 가치를 중요시하고 시장자본주의와 개인주의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세계경제 차원에 있어서 대안금융의 필요성에 의한 사회적금융의 배경과 함께 미시적인 차원에서 살펴보자면 사회적금융은 시장자본주의의 금융시스템에 있어서 구조적으로 배제되어왔던 금융소외의 극복 방안으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European Commision(2008)에서 금융소외는 과거 금융서비스의 물리적 접근성 개념에서 벗어나 사회적 접근성의 개념으로 확장되고 있으며 주로 개인들의 필요에 의해 속한 사회에서 정상적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금융서비스와 상품을 사용하거나 접근하는데 소외되는 현상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즉 사회적배제와 밀접한 관련성을 강조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의 빈곤층대상으로 금융소외의 개념으로 주로 접근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박동규(2010), 오윤해(2013)의 논의처럼 관계금융과 지역밀착형 금융에 관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다. 그리고 김군수 외(2014)는 지역공동체 차원에서의 금융소외를 접근하고 있는데, 지역금융기관의 수가 감소한 지역에서 중소기업 대출 비중의 감소에 주목하였고 금융구조 선진화가 수도권을 중심으로 형성되면서 지방에서는 지역금융기관을 통한 서민금융지원을 촉진하기 어려운 구조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소외에 대해서 사회적금융기관은 개인(주주, 고객)만의 이익에서 벗어나 공동체와 지역사회를 위해 존재하며 이와 관련된 사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대안적인 금융기관들로 인정받는다. 사회적금융에 대해 다양한 정의가 존재한다.

문진수(2013)는 사회적금융에 대해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에 돈을 투·융자하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통칭하는 개념이라 하며, 지역사회와 국가가 직면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필요한 금융서비스를 개발·적용하는 금융방식을 제시하고 있다. 박종현·김낙현(2015)은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창출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자금의 중개기능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돕거나 국민경제의 장기적 발전에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좋은사회(Good Society)’를 만들고자 분투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민병길 외(2015)는 일반적으로 상업적 목적보다는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주로 정부나 민간이 주도하여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효과적인 금융서비스(영국), 금융시스템(미국, 한국), 자금지원(이탈리아) 등으로 정의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표 2] 사회적금융 개념의 지역별 비교

구분	유럽	미국	한국
핵심역할	금융서비스/자금지원	금융 시스템	금융 시스템
지원 대상	자선단체,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조직(단체)	사회적경제(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등)
역할주도	정부, 비정부조직	민간	정부
목 표	사회적 문제의 개선과 사회적 가치 증진		
구성 범위	수요주체, 공급주체, 중개주체		

자료: KB금융경제연구소 참조하여 수정

Nicholls & Pharoah(2007)는 사회적금융에 대해서 사회적경제 활성화나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목적조직들의 자금조달 요구에 부응할 목적으로 제공되는 일련의 자원흐름들 또는 사회적 수익과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는 다양한 경제적 활동들에 제공되는 일련의 자금 흐름들로 정의하고 있다. 이준호(2015)에 의하면 사회적금융은 전통적 금융의 개념에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편익이 추가적으로

가미되면서, 전통적 개념이 갖고 있는 재무적 수익(Financial Benefit)을 유지함과 동시에 개념적으로 가미된 사회적 가치와 사회적 편익을 추구하는 금융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적 금융의 영역과 개념들은 각 지역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고 정의되고 있음을 알 수 있지만, 사회적금융의 본질적인 목적은 일부 투자자의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공공을 위한 사회적 목적과 가치에 이바지하기 위한 활동을 지원하는 금융의 서비스와 체계들로 이해할 수 있다.

구체적인 사회적금융의 방법이나 실행전략에 있어서는 금융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지만 사회적 가치와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들과 활동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의미에 있어서 사회적인 목적지향성이 강한 금융으로 다른 금융과의 차별점을 도출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금융을 현재의 경제시스템에 있어서 사회적가치와 목적 지향적인 활동을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대출 및 투자의 부문들을 포괄하는 금융지원의 시스템으로 사회적금융을 바라보고자 한다.

2) 사회적금융의 특성과 운영원리

앞서 제시한 바처럼 사회적금융의 개념이 통일되지 않은 상황에 있어서 사회적 금융의 특징에 대한 논의는 개념적 틀을 보다 명확히 하는데 있어서 의미가 있다. 사회적금융의 연구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특성을 갖고 있다(서봉만·서휘원, 2014; 이준호, 2015).

① 가치지향 금융

사회적금융은 기본적으로 금융이 개인과 사회의 의미있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공헌해야 한다는 가치를 지향한다. 반면에 기존 시장자본주의 금융시장은 양적 지표로 대변되는 가치중립성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투자가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 가치를 명시적으로 지향하고 추구하는 의미에서 새로운 금융의 역할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② 관계 지향 금융

사회적금융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를 분명하게

지향하기 때문에 금융방식의 거래를 통해 교류하는 주요 주체들(투자자, 대출자, 중개자 등)의 관계를 금융을 도구로 한 공동의 사회적 책임의 주체로서 바라보고 실행한다. 따라서 상호협력적이고 투명한 거래의 관계맺음을 통해 이들 간 사회적 연대를 강화함으로써 공동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금융의 시스템은 주체(사람)들간의 관계를 지향하는 금융시스템의 특징으로 보인다고 할 수 있다.

③ 임팩트 지향 금융

사회적금융의 주된 특징은 사회적 변화와 혁신을 위한 임팩트 투자를 지향하는 금융이라는 점이다. 임팩트는 경제적 성과로 측정할 수 없는 사회적·문화적·환경적 영향을 포괄하는 의미로 쓰인다. 임팩트 투자는 사회적인 문제해결과 투자자의 성격을 모두 지닌 것으로 단순한 기부나 융자와는 다르다. 따라서 사회적금융이 임팩트 투자를 지향한다는 것은 자본과 경제적 영역의 임팩트를 통해서 사회적 혁신을 추구한다는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사회적금융의 작동방식, 즉 운영원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역시 명확한 합의가 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문진수(2013)에 따르면 ① 마이크로 파이낸스, ② 지역개발금융, ③ 사회목적투자, ④ 관계형 협동금융의 4가지 운영원리가 있다.

① 마이크로 파이낸스

금융에서 소외된 사회 취약계층에게 무담보 신용 대출방식으로 소액의 창업자금을 빌려주고, 교육훈련 등 경영지원 서비스를 통해 자립과 자활을 돕는 금융기법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무하마드 유누스가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설립한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을 거론할 수 있다.¹²⁾ 유럽연합은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유럽 경제발전을 위한 주요정책중 하나로 거론하며 세부적인 실행프로그램을 운영중에 있다. 이에 따라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적으로 소득감소, 실업증가 등의

12) 유누스가 고안한 그라민은행의 마이크로파이낸스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들만을 대상으로 삼아 리스크가 높은 남성 차입자들을 배제하였다. 둘째, 분할상환기법으로 하여금 고객들이 규칙적으로 저축하는 습관을 형성시키고 목돈을 갚아야 한다는 심리적 부담감을 덜어주며 원리금 상환이 축적됨에 따라 심리적 자긍심을 복돋아 상환의지를 강화한다. 셋째, 공동대출기법은 그라민은행의 기법중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동료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그 피해서 나에게 전가되므로 구성원들은 채무이행여부와 관련하여 은행과 강력한 이해관계를 공유하게 된다. 넷째, 한해 동안 원리금을 성공적으로 상환한 차입자에게는 다음 해에 더 많은 대출금을 제공해주는 누진대출프로그램 또한 차입자들의 상환 인센티브를 강화하였다(Yunus, 2003; 박종현·장종익, 2014)

경제악화의 상황에 있어서 이에 대한 대안으로 마이크로크레딧을 활용하고자 UN에서는 2005년을 마이크로크레딧의 해로 지정하고 육성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제적 취약계층까지의 상업은행의 무분별한 진출로 수익편향성이 극대화나 전문 운영기관과 인력부족등의 한계에 직면한 것도 사실이다(문진수, 2013).

이러한 마이크로파이낸스를 운영하는 기관들은 각 지역이나 국가의 사회적 환경과 맥락의 특성에 따라 금융수요자를 대상으로 유형이 구분되고 있다. 이러한 마이크로 파이낸스의 유형에 대해 Zeller(2001)에 따르면 신용협동조합 형태, 집단 연대대출형태, 마을은행 형태, 마이크로은행 형태, 연계형 모델로 구분하고 있다. 신용협동조합 형태는 데자르탱이나 라이파이젠과 같은 마이크로파이낸스가 처음 개도국에 도입되었을 때 시도된 형태이다. 집단연계대출은 앞서 살펴본 그라민은행의 형태이며 마을은행모델은 마을주민중심으로 구성되어 운영되는 신용저축결사체이며 집단연대모델과 유사한 협동조합모델이다. 연계형모델은 비공식적 자조집단과 공식적 금융기관의 결합하여 모델로 자조집단이 제도적 은행과 계약을 맺어 금융 서비스를 제공받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마지막으로 개인활동에 기반한 마이크로은행의 형태는 은행과 고객사이의 계약에 근거하지만 담보 대신에 고객의 저축, 신용도 등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전통적 은행과 구별된다. 이러한 마이크로파이낸스 유형을 정리하면 다음 <표-3>과 같다.

[표 3]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유형

	지역 조직규모	주요 자금원	상환보증 유형	의사결정	조직구조	경영
신협	100-200인	구성원 저축	저축	민주적, 1인1표	피라미드형 연합체	관리직원, 선출 조합원
마을은행	30-50인	외부대출, 구성원 저축	저축, 구성원 압력	민주적, 상향식구조, NGO협의	마을차원의 분권화	선출 회원
마이크로 은행	개별대출	고객저축, 기부, 차입, 보조금	전통적 담보 새로운 담보	하향식 구조	집권화, 지역 지점	관리직원
집단연대 대출	5-10인 구성	차입, 구성원 저축	집단 압력	하향식 구조	피라미드형	관리직원
연계 모델	비공식집단		저축, 집단압력, NGO연계	하향식과 상향식 혼합	마을차원의 분권화	관리직원, NGO직원

자료: Zeller & Johannsen(2006); 박종현 · 장종익(2014)

② 지역개발금융

지역개발금융은 지역사회공동체에서 제기되는 사회적배제나 경제적양극화의 문제를 지역금융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것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달되었다. 특히 지역경제의 공간적 순환이 확대되면서 개발 이익의 역외 유출이 심화되고 중심 지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효과성을 인정받고 있다(서봉만·서희원, 2015).

미국에서는 지역재투자법(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통해서 대형은행들에 지역사회의 저소득층에 대한 투융자 등의 금융서비스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에 있어서 지역개발금융기관법(CDFI Law)과 지역개발기금(CDFI Fund)을 조성하여 지역금융을 활성화하고 있다. 그리고 영국은 이러한 지역금융활성화를 위한 미국의 CDFI 정책을 적극 수입하여 활용하고 있는데, 다음의 3가지 유형에 따라 구분한다.

첫째는 Business-lending CDFIs로서 담보가 없거나 사업실적이 빈약해 주류금융기관으로부터 도움받기가 힘든 지역 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유형이며 둘째는 Civil Society Lending CDFIs로서 비영리 자선단체나 사회적기업과 같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관들에 자금을 제공해주는 형태이고 셋째는 Personal Lending CDFIs로서 신용불량자와 같은 개인들을 대상으로 소액의 생활자금을 대출해주는 형태이다. 하지만 이러한 구분은 사업의 수요자에 대한 기능적 분류이며 실제로는 대부분의 CDFI는 세가지 영역을 함께 수행한다(문진수, 2013).

③ 사회목적투자

사회목적투자(Social Impact Investment) 유형은 사회문제의 해결의 차원을 넘어서 투자유인행위를 통해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사회목적투자는 주로 노인, 교육, 청소년, 범죄, 실업, 금융소외 등 긴급한 재정투입을 요구하는 분야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다(서봉만·서희원, 2015). 이러한 사회목적투자는 가치와 수익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이차방정식이고 사회적가치와 재무적 가치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화학적융합의 과정으로 묘사되는데 기부가 갖는 일회성 지금의 공여 한계를 극복하고 지속적인 투자를 통해 사회적가치와 경제적 수익을 동시에 추구한다는데 의의가 있다(문진수, 2013).

최근 이러한 세계적으로 이목이 집중된 대표적인 사회목적투자 수단으로는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을 거론할 수 있다. 김갑래(2012)에 의하면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정부가 공공사업 성과목표 달성을 민간 전문 사업자와 약정하고 사회적 성과(social outcome)목표가 달성된 경우 해당 사업의 예산절감효과에 비례하여 지급청구권이 발생하는 채권계약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사회적성과와 재무적성과를 연동시킴으로서 자본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한 사회혁신을 달성한다는 점에 있어서 의의가 있다. 구체적으로 이러한 사회성과연계채권의 구조를 살펴보자면, 외부 민간조직이 정부기관에 공공서비스 완수를 약정하고 민간투자를 유치하여 그 재원으로 공공사업을 집행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정한 사회적 성과목표를 달성하면 정부기관이 공공재원에서 약정한 수익을 성과정도에 따라 투자자에게 지급하는 계약구조를 갖는다(김갑래, 2012).

[그림 3] SIB의 투자 자금 흐름



출처: Jeffrey B. Liebman, Social Impact Bonds (2011)

위의 <그림-4>자금흐름은 아래와 같은 SIB투자의 단계를 의미한다.(김갑래, 2012)

- 자금조달 단계: SIBIO는 민간 투자자에게 사회성과연계채권을 발행하고, 민간 투자자는 SIB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자금을 공급한다.
- 자금운용 단계: SIBIO는 서비스제공자에게 운용자금을 공급하고, 서비스 제공자는 약정된 사회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 성과평가 단계: 독립평가인이 사회성과를 측정하고, 약정된 성과가 달성된 경우 정부는 SIBIO에게 투자원금 및 성과금액을 지급한다.(성과가 달성되지 못한 경우에는 정부의 지급의무가 없다).
- 성과배분단계: SIBIO는 투자기간 만료 후 사회성과가 달성된 경우 투자원금과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

이러한 사회목적투자방식의 사회적금융은 영국에서 활발하게 진행중인데, 우선 2012년 4월에 출범한 큰사회기금(Big Society Capital)은 6억파운드(1조원)규모로 출범하여 사회적경제의 현장과 밀착한 중개기관들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는 간접 투자를 지원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사회목적투자 시장의 구성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 활동하는 기업의 자본조달을 위한 플랫폼으로 ‘사회적증권거래소(SSE)’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의 지원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투자실험을 할 수 있는 자금 중개기관들의 설립을 지원하여 전통적 자선단체부터 사회적 벤터캐피털까지 50여개의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문진수, 2013).

④ 관계형 협동금융

협동금융은 사회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가며 공동체를 위한 활동을 위해 십시일반 자본을 모으는 일반적 행위들로부터 시작되어 사회적금융의 형태중에서 가장 오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진수(2013)는 사회적으로 다양한 계모임, 공제회 등 다양한 형태의 상호부조(Mutual Aid)조직도 넓은 의미에서 협동금융에 포함되며 각각 독립적 주체들이 모여 외부에 의존하지 않고 서로의 목표와 이익을 추구한다는 면에서 협동금융을 연대금융(Solidarity Finance)라 부른다고 보았다. 그중 가장 보편화된 협금융의 형태는 협동조합 금융조직들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현대적 의미에 있어서 관계형 협동금융은 협동조합의 생성과 발전의 역사와 함께한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 몬드라곤 복합체의 핵심기관인 노동인민금고나 캐나다 퀘벡의 대표적 신탁인 데자르탱, 무이자 은행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야크은행 등이 대표적인 협동조합 은행들이다.

이러한 협동금융은 일반적으로 구성원들이 거주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역적 기반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기반의 관계밀착형 성향이 강하다. 이러한 협동금융의 기원은 1849년 독일의 라이파이젠 신용협동조합으로 볼 수 있으며 우리나라도 1960년대 초반 부산에서 시작된 신용협동조합운동을 찾아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협동조합의 관제화가 지속되다가 2012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의 시행으로 자유로운 설립과 운영이 가능해졌으나 여전히 ‘금융업’과 ‘보험업’ 분야의 설립을 금지하고 있어서 협동금융의 저변확산이 매우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이준호(2015)가 제시한 바처럼 우리나라의 협동금융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선진국 사례처럼 보다 진일보한 협동금융을 추진하기 쉽지 않으며 근본적인 협동금융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힘들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제도적인 제약

사항 안에서 협동금융을 운영해야 하는 상황이다.

3) 사회적금융의 특성과 사회적경제와 관계

사회적금융은 각 국가와 사회가 처한 상황에 따른 다양한 유형과 운영방안들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재무적인 목적과 함께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고 달성하기 위한 목적이 주요한 사항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사회적금융이 공유하는 보다 실제적인 의미파악을 위해 사회적금융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의 특성들을 제시하면 다음 세 가지가 있다(이종수·유병선 외, 2013; 서봉만·서희원,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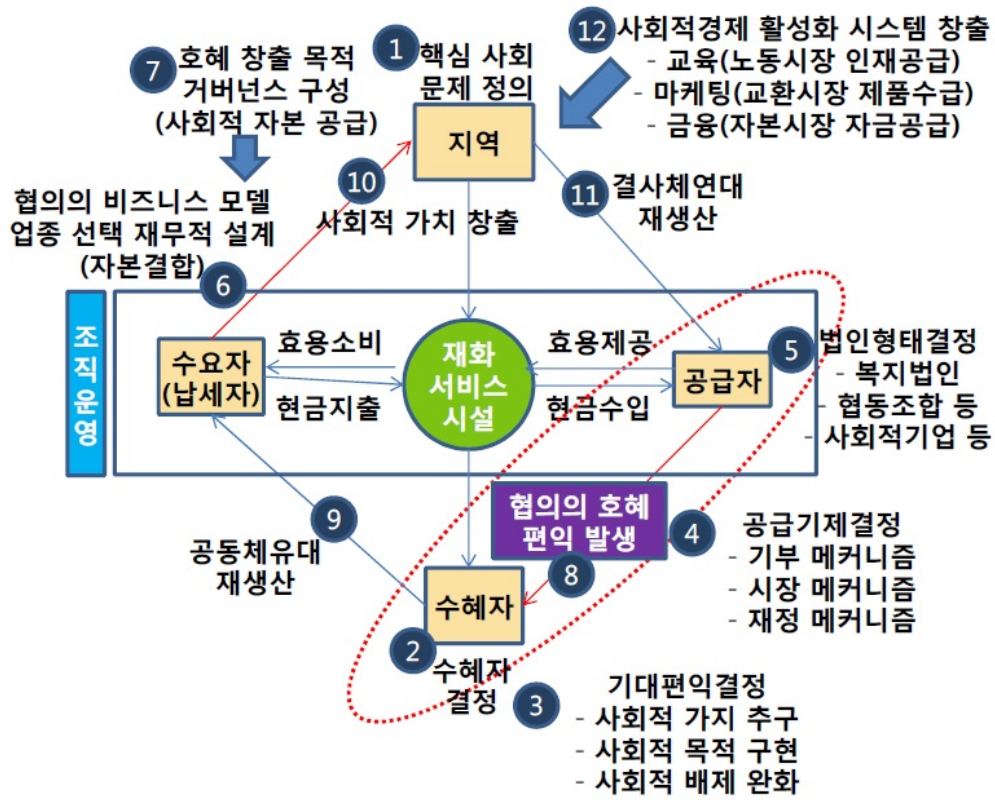
첫째로는 가치지향금융의 특성으로 사회적금융은 개인과 사회의 의미있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며 탈가치적이고 가치중립적인 현재 주류 금융시장의 활동들의 한계를 지적하면서 사회적·환경적 가치를 분명하게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의 역할을 제시한다.

둘째로는 관계지향금융의 특성으로 금융거래 관계의 예금자·투자자·대출자 사이의 관계를 넘어서 금융을 통한 공동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는 관계로서 사회적금융을 규정한다. 결국 구성원간 사회적 연대를 강화하여 공동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면에 있어서 사회적금융은 사람과 사람을 매개하는 관계지향적 금융으로 볼 수 있다.

셋째로는 사회적인 가치지향을 통해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사회적금융은 임팩트 지향의 금융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사회적금융은 단순한 사회적 약자의 지원과 복지적 차원이 아니라 경제적 지원과 영역의 활동에 관한 임팩트를 통해서 사회발전을 위한 혁신을 지원하는 것임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사회적금융의 시스템은 시장경제와는 다른 사회적경제의 가치추구의 형식성과 운용원리에 의한 활성화의 체계가 요구되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적 문제의 가치지향성과 수요자와 공급자간 관계의 호혜적 편익, 그리고 사회적 가치창출을 통한 임팩트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금융의 특징은 사회적경제의 본질적인 운용원리와 맞닿아 있는 체계적 구조를 제시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스템적 구조에 대해 이인우(2014)는 다음과 같은 <그림-4>를 제시한다.

[그림 4] 사회적경제 활동의 구성요소와 구조



자료: 이인우(2014) 사회적기금구축포럼 발표자료

우선 사회적경제는 시장경제와 달리 지역의 핵심사회문제의 정의에서부터 활동이 시작되어 수혜자에게 편익을 전달하기 위한 매커니즘을 만들고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핵심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 수혜자에게 편익이 전달되기 위해서는 호혜창출이 목적인 사회적 자본의 공급이 필요하며 이로인한 호혜의 발생은 공동체유대의 재생산이 되어 사회적가치가 창출되는 순환적 매커니즘이 지속된다. 사회적금융은 이처럼 시장경제에 비해 활동의 동기와 원천이 매우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되지만 자원배분의 매커니즘이 존재하기 때문에 금융지원의 수요와 공급방식은 존재하기 마련이며, 시장자본주의의 금융시스템과는 다른 사회적경제를 위한 차별화된 금융시스템이 요구됨을 보여주고 있다.

2. 사회적금융의 분류

1) 금융시장에 따른 사회적금융

전술한 바와 같이 금융시장의 자금흐름이 중개금융기관을 거쳐 흐르느냐에 여부에 따라 직접금융시장(자본시장)과 간접금융시장으로 나눈다. 직접금융조달은 필요금액을 사전적으로 확정해서 조달하는 것에 반해, 간접금융조달은 중개금융기관(은행, 보험사)이 불특정다수의 저축자(자금공급자)로부터 모은 자금을 소정규모로 분할하여 차입자(자금수요자)에게 대부하는 흐름을 나타낸다.

자본시장에 거래가 되는 상품은 주식(Equity)과 채권(Bond)이다.

주식은 기업의 소유권과 부를 투자자에게 이전하는 수단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기존 자본시장의 폐해에 대한 반발에서 출발했다는 기원이 있어 그 도입이 쉽지 않지 않은 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자본의 확보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있어서 재정 및 경영지원의 측면이 있다.

채권은 장기자금을 일시적으로 대량조달하기 위한 금융방법이지만, 회사채(무보증)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제도를 거쳐야 하는 의무가 있다. 신용평가는 기업의 장기적 신용도에 초점을 맞추어 원리금의 지급능력을 평가, 신용등급화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은 영리기업보다 낮은 수익력과 취약한 재무구조를 가지고 있어 어려움이 존재한다.

최근 자본시장에서 유용한 사회적금융 수단으로 사회성과연계채권¹³⁾(Social Impact Bond:SIB)가 각광을 받고 있다. SIB는 외부투자자를 투자모형에 포함시켜, 사회적 해결문제를 정부와 투자자, 사회적기업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이 힘을 합쳐 해결해 가는 ‘성과 기반형 프로그램’이다(노희진,2014)¹⁴⁾.

약정된 사회적 성과 달성시, 이와 연계된 지급을 정부와 계약하는 것으로, 사회적 성과가 발생하면 투자자는 투자원금과 이윤을 돌려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영국의 피터버러(Peterborough) 교도소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st Giles Trust 등 4개의 사회적기업과 2010년 SIB과 관련 계약을 맺고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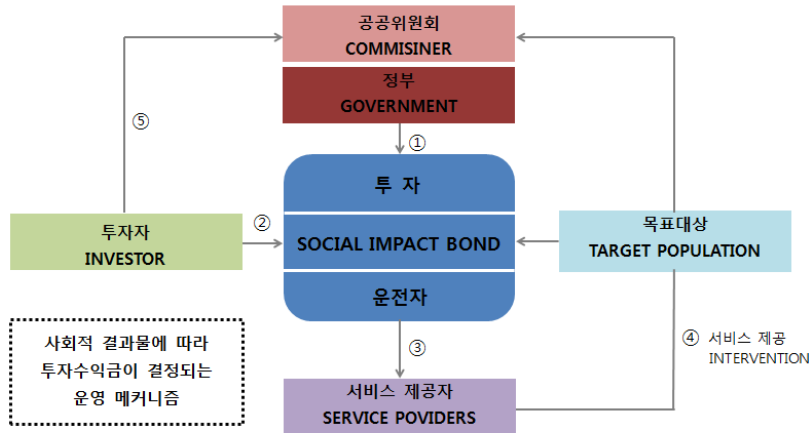
13) 또는 사회공헌채권으로도 번역

14) 사회성과연계채권은 임팩트 투자기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임팩트 투자는 결과-성과-사회공헌의 연결고리를 강조하는데, 결과는 사회적기업에게서 서비스를 받은 사람숫자, 성과는 재범률하락, 사회공헌이란 치안안정, 예산절감을 의미한다(Social Finance, 2011)

하였다¹⁵⁾. 국내에서는 서울시에서 2014년 그룹홈 학생들의 학습능력과 사회적응도 향상프로그램으로 도입 추진 중에 있다.

SIB가 자금조달의 이점과 사회서비스의 효율적 제공이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운영 및 성과측정, 사업실패 등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제도의 필요가 있다

[그림 5] 사회영향채권(SIB)의 구조도



자료: 노희진·천창민·안수현·조영복(2013):박찬임외(2014)

본격적인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주식투자를 위해서는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해주는 플랫폼, 즉 주식거래소(시장)가 필요하다. 이것이 사회적 주식거래소(Social Stock Exchange)이다. 사회적 주식거래소는 정보탐색비용을 낮추어 투자유동성을 높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조달원 역할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시장가격결정 메커니즘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가치평가하는 방식으로는 적합하지 않으므로 이에 맞는 사회적 책임과 윤리적 문제에 맞는 평가방식에 따른 거래소의 형태가 필요하다.

사회적 주식거래소에는 규제형과 조성형이 있다(박찬임외, 2014). 규제형 거래소(regulated exchange)의 경우, 사회적금융 공급주체들에게 해당 사회적기업들이 투자적격대상임을 보증하고, 투자 수익을 회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초기단계의 자금조달에 큰 기여가 기대된다. 영국의 Social Stock Exchange, 싱가포르

15) 영국의 피터버리의 경우, SIB 1차 평가결과 성과지급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운영계획을 조정하였고, 또한 2014년 말부터 보호감찰과 재활서비스 개혁프로그램 시행을 결정함에 따라 예정했던 지급기간을 축소했다. 정치적리스크 및 정확한 성과평가의 한계등이 나타났다.

의 Impact Investment Exchage Asia가 대표적이다. 조성형 거래소(facilitating exchange)의 경우, 투자자와 지역 사회적기업을 연결시키는 데 초점을 맞춘 거래소다. 이 거래소는 상대적 소액투자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등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여 주민들이 투자할 수 있게 해준다. 뉴욕의 MIssion Markets, 캐나다의 Toronto Social Venture Exchange 등이 있다. 간접금융조달은 은행 등과 같은 금융기관을 통한 조달로, 대출과 융자, 투자 등 다양한 금융이 이루어진다. 대표적인 사회적금융기관은 트리오도스 은행, GLS은행, 이탈리아 윤리은행 등과 같은 은행, 몬드라곤의 노동인민금고, 퀘백 데잘덴신협과 같은 금융협동조합이 있다(박찬임외, 2014).

트리오도스은행(Triodos Bank)은 네덜란드 제이스트에 본부를 두고, 벨기에, 영국, 스페인, 독일 등에 지점을 두고 있는 은행으로, 2011년 현재 자산규모는 10조원가량이다. 트리오도스 은행은 예금과 대출, 자산운용, 프라이빗 बैं킹 세분야에 나뉜다. 기업경영은 사람과 환경, 이윤에 두고, 대출 심사때 사업에서 창출되는 사회적 부가가치에 가장 큰 관심을 둔다. 대출대상 사업의 절반이 신재생에너지, 유기농사업 등 환경관련 사업이며, 대출액의 30%정도는 사회적기업 또는 비영리단체에 할당된다. 성공요인은 ① 실물자산 근거해 사회적 편익을 제고할 수 있는 곳만 자금지원하여 이윤은 크지 않지만 위기에 강하였다는 점, ②경영의 투명성. 이를 통해 고객의 돈이 어떻게 쓰이는 확인할 수 있어 고객충성도가 높음, ③ 정책적 지원. 상업은행으로는 규모미달이나 금융감독의 인가허락, 세제혜택, 1995년부터 신재생에너지분야의 투자에 대한 지원으로 성장이 거론된다.

노동인민금고는 세계최대의 협동조합 복합체으로 유명한 몬드라곤그룹의 금융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의 상호금융역할을 수행하면서 발생한 수익금을 활용해, 조합확장이나 새로운 조합설립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하였다. 특히 협동조합 컨설팅과 인큐베이팅 기능과 함께, 몬드라곤 그룹의 협동조합의 재무상태의 정보를 기초로 협동조합간 기획 및 조정, 자원배분의 기능을 담당했다. 이러한 금고의 기능 때문에 몬드라곤그룹이 성장하였다고 보고 있다.

최근 인터넷을 활용한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이 각광을 받고 있다. 특히 자금 수요자의 창의성과 사업성을 다수가 평가함으로써 금융시장에서 조달이 어려운 개인과 기업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조달받을 수 있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2013년 말 현재 51억달러의 규모로 추정하고 있으며, 제도적으로 정착시키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나라 역시 크라우드펀딩 사이트가 증가추세로, 머니옥션, 개미스폰서, 오마이컴퍼니 등이 있다.

2) 금융수단에 따른 사회적금융

금융수단에 따라 보조금(Grant), 인내자본(Patient Capital), 대출(Loan), 위험 투자(Risk Capital) 지분(Equity) 등으로 나누며, 각 사회적경제조직의 업종, 성장 단계, 조직형태 등 다양한 특성에 따라 하나의 금융수단을 활용할 수도 있고, 여러 수단들의 상이한 배합을 통해 필요를 채울 수 있다.

보조금(Grant)은 재무적 수익 대신 사회적 수익과 공익적 목표를 추구하는 자금으로 정부보조금, 기부금 등이 속하며, 대표적인 예가 사회적기업의 인건비, 사업 개발비 지원을 들 수 있다.

인내자본(Patient Capital)은 수익이 시장 수익률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장기적인 투자를 지향하며, 영리자본과는 달리 회수기간을 20~30년뒤로 정한다(이원재외, 2015). 대표적인 예는 캐나다 퀘백주의 총 5,250만달러(연방 정부 연기금+노동조합 기금)의 인내자본(Fiducie)로 퀘백주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차입자금으로 150만달러, 15년간 원금상환없이 8% 고정금리로 차입가능하다. 이외 컨설팅 등의 노력으로 퀘백주의 협동조합의 생존률은 5년, 10년이후 다른 기업생존률의 2배이며, 협동조합의 일자리는 일반일자리보다 4배 가까운 성장률을 보였다.

대출(Loan)은 중개금융기관이 불특정 다수의 저축자(자금공급자)로부터 모든 자금을 소정규모로 분할하여 차입자(자금수요자)에게 대부하는 것을 말한다. 문제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대출을 받기 어렵다는 점에 있다. 이는 전통금융기관이 설정한 기준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전통금융기관의 기준과 프로세스를 따르지 않고, 가치지향, 관계지향, 임팩트지향의 기준과 프로세스를 추구하는 금융이 사회적금융이다. 예를 들어 미소금융 소액대출, 사회연대은행의 성장지원사업등이 있다. 다음은 트리오도스 은행과 영리은행의 대출프로세스의 비교이다.

[그림 6] 은행의 대출 프로세스 비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최종단계
토리온도스은행	자금지원 대상 프로젝트가 지속가능 발전 기여 분야인지 규명	재무목표 이상의 사회·문화·환경적 이익 창출 가능성 선별	대출고객의 대출용도에 따른 대출금 사용여부 면밀하게 검토	선별 프로젝트의 은행 지속가능성 기준 부합여부 검토	최종 선별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사후관리
일본영리은행	소요자금 규모의 적정성과 자금조달 방안의 타당성 규명	소요자금의 성향 파악, 운전자금보다 시설자금에 상대적 가산점 부여	자금용도와 상환능력 고려, 여신기간 결정	차입자의 영업위험, 경영위험, 재무안정성, 현금흐름 등을 감안, 재무상환능력 분석→채권보전 강화 및 여신 감축활동 여부 설정	최종 선별 프로젝트에 자금 지원	사후관리

자료: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2013, 사회적금융의 운영현황과 시사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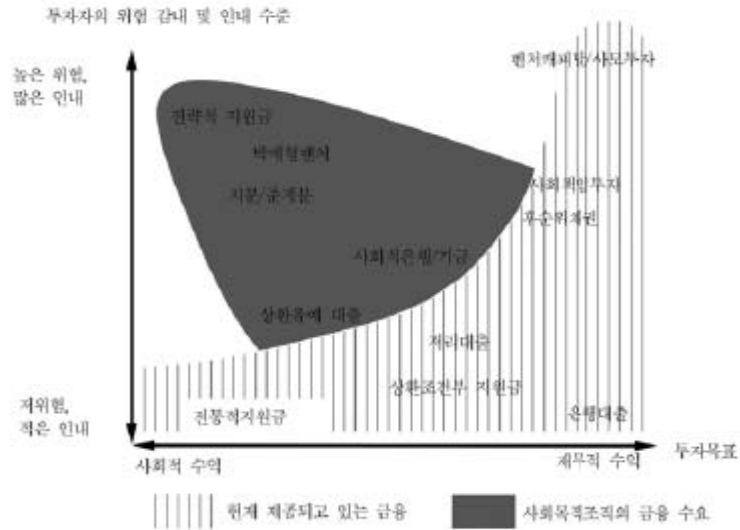
위험투자(Risk Capital:모험자본)는 손실위험이 높지만 미래가치에 기대하는 투자를 말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투자대비 수익률이 높지 않아 이러한 투자는 잘 이루어지지 않다. 그러나 위험투자는 스타트업 시기에 필요한 자금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에게도 꼭 필요한 자금이다.

영국 Big Society Capital(BSC)은 이러한 위험투자(모험자본)의 필요성을 인지, 금융시장에 이러한 사회적금융이 제공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삼고 있다. BSC는 ① 직접 혁신적인 사회적경제 상품에 투자하거나, ② 모험자본을 공급하는 혁신적 금융상품, 펀드의 개발지원하는 인수보증을 강화하거나, ③ 인수보증 또는 후순위채권 보증 등을 통해 위험을 감소시켜 다른 투자자의 참여를 촉진, ④ 파일럿 상품개발 및 검증을 통해 시장에 신뢰를 주는 등 위험투자(모험자본)의 조성에 힘쓰고 있다.

지분(Equity), 즉 주식투자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가장 받기 힘든 자금조달이다. 특히 사회혁신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경우, 구상 및 창업단계에서의 투자는 매우 중요하다. 방식으로는 비영리재단의 시장형 미션투자¹⁶⁾나 자선형 벤처의 사회적 벤처투자 등 있고, 근본적인 제도구축은 사회적 주식거래소의 설립이 필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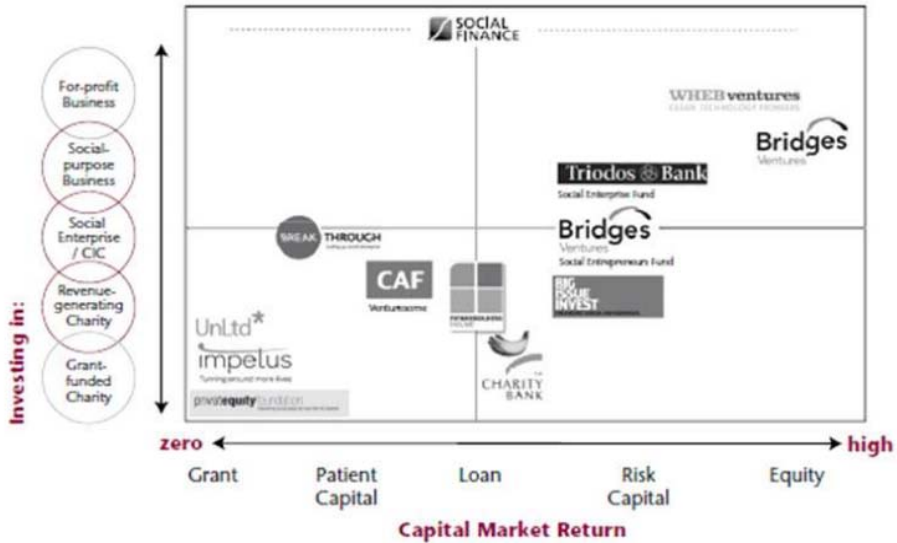
16) 미션투자(Mission-related Investments:MRI)는 비영리기관에 지원하는 재단들이 보유자산을 투자 등을 통해 얻은 수익금을 가지고 기부 또는 지원을 하였는데, 이에서 벗어나 목적사업에 용자와 투자를 통해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회수하는 방식을 말한다. 미션투자는 프로그램투자와 미션투자로 나누는데, 프로그램투자는 재단자선 기부요구율로 인정되는 투자이고, 시장적 미션투자는 시장금리수준의 투자이익을 기대하는 투자를 말한다.

[그림 7] 사회적금융 공급주체의 투자기회



자료: Nicholls and Pharoah(2008); 박찬임 외(2014)

[그림 8] 해외사례의 사회적금융 비교



자료: The Social Investment Task Force(2010)

3) 기업성장단계에 따른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조직은 성장단계에 따라 필요한 자금과 규모의 차이를 갖는다. 성장 단계를 나누면, ①아이디어 개발 및 검증, ②시장진입(창업), ③규모확대(발전), ④경영합리화(성숙)의 단계로 나눌 수 있다. 각 단계별 필요한 금융조달은 다르다.

아이디어 개발 및 검증단계: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단계에서는 보조금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정부지원금) 또는 소셜벤처 경진대회를 통한 보조금 또는 보조금성 자금을 취득이 가능하다.

시장진입 단계: 자기자본 등을 통한 창업이 주로 이루어진다. 자기자금(출자금)과 외부 투자금, 후원금과 같은 자금조달이 가능하나, 우리나라의 경우 위험투자나 지분투자는 활발하지 않지만, 사회적기업투자조합(1호인 경우, 총 42억, 고용부 25억원, 민간출자 17억원)이 활동하고 있다. 2012년 8월현재 운용기간 7년(투자4년, 회수3년)을 목표로 4개 기업 12억원을 투자하고 있다. 투자방식은 부채형(전환사채¹⁷⁾)가 4건 중 3건이고 한건은 프로젝트투자(공연)이다. 아직 지분투자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래는 투자현황이다.

17) 전환사채란, 회사주식으로 전환가능한 사채로 투자자에게 투자위험을 줄여주고 주가 오르면 이득을 제공. 불안으로 인해 비용이 높은 회사에 유리. 회사채 발행이 곤란한 기업의 유용한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된다.

[표 4] 사회적기업 투자조합 투자 현황

시기	회사명	회사 개요	특정 및 사업 내용	투자 규모 및 형태
2011 . 12.	메자닌 아이팩 (주)	○ 설립연도 : 2008년도 * 인증사회적기업(일자리제공형) ○ 대표자 : 박상덕 ○ 소재지 : 경기 파주시 아동동 ○ 매출액 : 30억원 ○ 직원수 : 30명	•박스 제조 •새터민 직업교육 ※임직원의 40%가 새터민으로 구성 ※취약계층 고용 비율 63%	•규모: 3억 원 •형태:전환사채 *설비투자자금으로 활용
	(주) 트래 블러 스맵	○ 설립연도 : 2009년도 *인증 사회적기업 (기타형) ○ 대표자 : 변형석 ○ 소재지 :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 매출액 : 4.9억원 ○ 직원수 : 27명	•공정여행 기획 진행 -지역 문화 및 환경 보존을 위한 여행 상품 제공을 통한 지역경제 환원 •탈학교 청소년 대상의 대안학교 '로드스콜라' 운영	•규모:2억 원 •형태:전환사채 *운전 자금으로 활용
2012 . 7.	(주) 오르 그닷	○ 설립연도 : 2009년도 * 인증사회적기업(기타형) ○ 대표자 : 김방호 ○ 소재지 : 서울 광진구 중곡동 ○ 매출액 : 6.7억 원 ○ 직원수 : 13명	•친환경 의류 생산 -친환경 상품 생산율 60% 이상 유지 •그린 디자인 프로젝트 -친환경 원료 사용하여 에코백 제작 •윤리적 패션산업 확산을 위한 지원 -청년디자이너 창업 지원 및 친환경 소재 제공 ※ 취약계층 고용 비율 46%	•규모: 3억 원 •형태:전환사채 *운전 자금으로 활용
	(주) 엔터 테인 먼트 즐거움 의 숲	○ 설립연도 : 2007년도 * 서울형 예비 사회적기업 ○ 대표자 : 신정화 ○ 소재지 : 서울 강남구 논현동 ○ 매출액 : 5.2억 원 ○ 직원수 : 9명	•문화·예술공연 사업 -소외계층 무료 공연 관람기회 제공 ※12,400여 명, 1억8천만 원 상당의 관람기회 제공 •소외 청소년 뮤지컬스쿨 운영 -고교생 중 87% 이상이 문화·예술 분야 진학	•규모:4억 원 •형태: 프로젝트 투자(뮤지컬 온 에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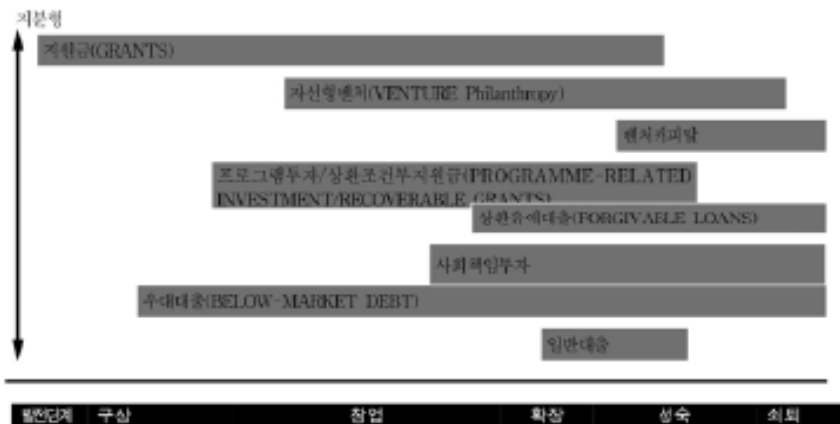
자료 : 고용노동부(2013).

규모확대 단계: 창업후 일정한 수준의 매출발생, 규모화를 통한 수익창출을 위한 노력 가속화가 필요한 경우이다. 일반적인 벤처기업의 경우, 이 단계에서 가능한 것은 신주발행을 통한 투자자 유치, 전환사채 발행 등을 모색해 볼 수 있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담보없는 신용대출도 고려할 수 있다.

경영합리화 단계: 기업의 성장이 완만하거나 오히려 후퇴하면서 사업전환, 내부 경영 및 재무구조 합리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시기이다. 일반적으로 투자자들은 M&A, PEF(사모투자펀드)를 통해 지분취득하고 이후 취득지분을 매도하면서 자본 차익이 가능하다.

[그림 9] 생애주기별 이용가능 금융옵션



자료: Nicholls and Pharoah(2008); 박찬임 외(2014)

4) 기업유형에 따른 사회적금융¹⁸⁾

라준영(2014)은 사회적경제조직이 창출한 사회적 가치가 시장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사회적금융(사회적 자본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들어 낸 사회적가치를 구매하여 보상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사회적 영향과 재무성과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5가지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유형을 분류하고, 적절한 투자수단을 제시하였다.

혁신형은 사회적 영향과 재무적 성과가 뛰어난 기업으로, 사회경제혁신을 가져오면서 자본비용을 회수하기 충분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므로, 자본의 유입이 용이하여 위험자본과 지분투자가 가능하다. 대표적인 예로서 그라민의 그라민폰(Grameen Phone)을 들 수 있다.

18) 라준영(2014), '사회적 자본시장과 성장자본'의 97페이지를 참조 인용하였다.

상업형은 사회적 영향은 중간정도이지만, 재무적 성과가 큰 기업으로, 혁신형과 같이 민간자본조달이 용의하다. 대표적인 예가 (주)딜라이트로 제조혁신을 통해 저렴한 보청기를 소외계층 청각장애인에게 제공하고 높은 이익률을 올렸고, 최근 대기업 대원제약이 인수하였다.

지속가능형은 사회적 영향이 크지만 경제적으로는 자본비용을 회수할 만큼의 이익을 확보하지 못하고 회계적 이익에 머무는 기업이다. 이러한 유형의 기업은 자본비용을 충분히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민간자본의 투자유치가 어렵고, 인내자본의 유치가 적합하다.

위탁형은 사회적 영향은 중간 이상이지만, 재무구조가 좋지 않은, 정부위탁형 사회서비스 기업이 대부분 여기에 속한다. 영업활동을 통해서 변동비는 회수할 수 있지만, 고정비는 지원없이 어려운 경우이다. 보조금(Grant) 또는 장기저리의 융자를 필요로 한다.

복지형은 사회적 영향은 크지만 재무구조가 매우 취약한 사회적경제조직이 여기에 속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대표적이다. 이 경우에는 영업활동을 통해 변동비도 회수하지 못하기 때문에 보조금, 인내자본, 사회성과연계채권 등이 필요하다.

[표 5] 사회적기업의 유형과 투자방식

	사회적 기업의 유형				
	복지형	위탁형	지속가능형	상업형	혁신형
사회적 영향	상	중	상	중	상
재무적 성과	하	중하	중	상	상
변 동 비	영업부분회수	영업회수	영업회수	영업회수	영업회수
고 정 비	외부지원	외부지원	영업회수	영업회수	영업회수
이익여부	손실	회계적 이익	회계적 이익	경제적 이익	경제적 이익
투자수단	보조금, 채권, 인내자본	보조금, 대출	대출, 채권, 인내자본	위험자본 지분투자	위험자본 지분투자

자료: 라준영 (2014)

3. 사회적금융의 형태와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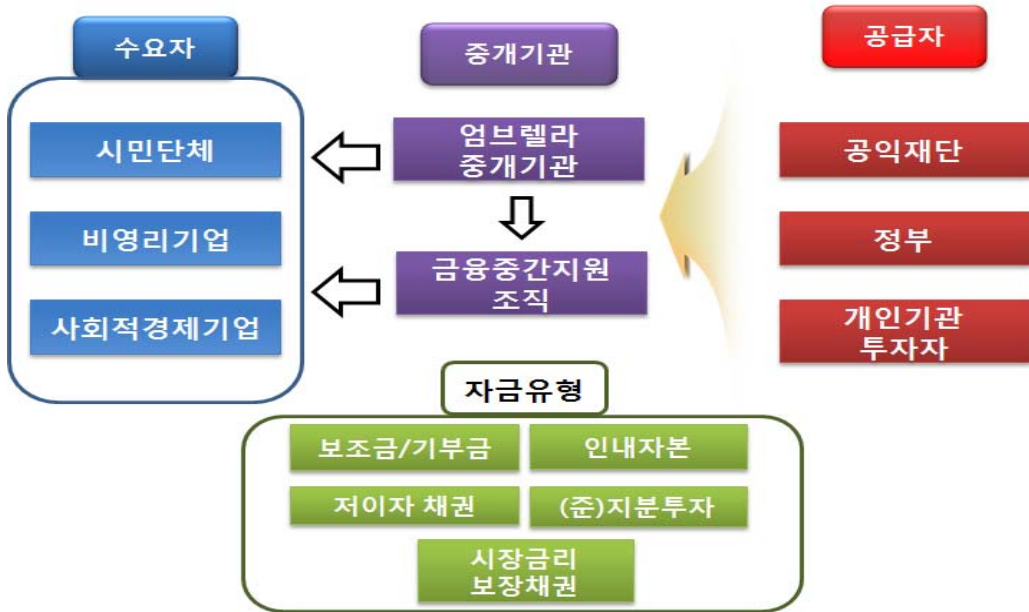
1) 사회적금융의 형태

사회적금융은 앞서 제시한 개념적 정의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활동을 하는 조직에게 자본을 투·융자하는 금융체계이며 이를 위한 금융자본을 조성하고 금융서비스를 개발 적용하는 활동들을 포함한다. 결국 기능적으로 보자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들의 자금조달이라는 목적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양한 금융적, 경제적 활동들에 제공되는 자금의 흐름이라는 지원체계가 있고 이러한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공급자들에 의한 공급체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금융은 사회적 가치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기업과 조직들이 필요로 하는 자본을 공급하기 위한 금융시스템이며 사회적금융을 위해서는 자금을 공급해주는 주체들이 필요하게 된다. 사회적 활동의 수요자들과 금융자본을 공급하는 투자자나 정부기관과 같은 공급주체들이 존재하게 되며 이러한 수요주체와 공급주체를 매개하는 주체와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한다. 따라서 이러한 주체들과 제도를 형성하는 다양한 도구들과 전략들은 사회적금융의 체계를 형성하게 된다.

이처럼 각 주체들에 의한 사회적금융의 형태를 살펴보면 장종익·박중현(2013)이 제시한 바처럼 [그림-10]로 나타낼 수 있다.

[그림 10] 사회적금융의 기능과 역할



우선 수요자들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사회적금융이 지원하려는 조직의 특성은 사회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사회혁신을 지향하며 경제적 성과 또한 지향한다는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현실에 있어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이러한 복합적인 성격의 활동을 실제 얼마나 내재하고 있으며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해당 조직의 재화나 서비스의 성격 조직 목표 및 문화적 요인 등에 좌우되는 특성을 보인다 (Nicholls & Pharoah, 2007).

공급주체의 특성에 있어서는 사회적금융의 자본과 재원을 공급하는 주체들로서 현재까지 국내 현실에 있어서는 정부 및 공공기관의 역할이 주도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공급주체인 정부와 공공기관들은 과거에는 보조금을 통해 특정 사업들을 직접 지원하거나 민간위탁하는 방식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최근에는 앞서 제시한 사회공헌채권과 같은 보다 다양한 형태의 금융 시스템들을 통한 재원 공급의 방법들이 발생한 것이 특징적이라 볼 수 있다. (박종현·김낙현, 2015).

특히 사회적금융의 공급주체와 금융생태계의 조성자로서 정부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의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사례로서는 미국과 영국을 거론할 수 있겠다. 위 국가들은 정부가 민간 금융기관과 협력속에서

대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이와 관련된 사회적금융 중개기관을 출범시켜서 현장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필요와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제도적인 금융기관들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을 위한 사회적금융의 공급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데 미국 등 금융선진국이 대형 은행을 중심으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는 반면 국내의 금융기관 참여는 미미한 편이다. 대표적으로 우리은행의 ‘사회적기업 지원 전용상품’, 기업은행의 ‘IBK 사회공헌대출’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이용이나 활용실적은 크지 않으며 독자적이기 보다 대부분 정부기관과 협약을 통해 공동으로 실행되고 있다.

개인이 직접 공급자로서 참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요즘 주목받고 있는 것은 크라우드 펀딩 제도이다. 인터넷 발달로 인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기부, 후원, 융자, 지분투자 등 형태로 자금을 모집하는 크라우드 펀딩은 사회적금융의 유효한 자금공급 수단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현재 크라우드 펀딩 자체로서 파급력은 떨어지는 것이 사실이며 금융기관이나 신용협동조합등의 다양한 관련주체와의 조합을 통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이처럼 사회적금융의 주체로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사회적금융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두 주체간의 매개와 중개의 역할을 수행하는 주체가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공급자의 측면에서 보다 많은 자금이 사회적금융분야로 유입되기 위해서는 자금의 회수가능성과 기대수익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수요자의 측면에서 실제 필요한 자원과 금융의 정보 및 상품과 함께 사회적가치와 활동에 대한 가치와 평가를 통한 사회적금융의 진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원해줄 수 있는 중개기관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 유형의 공급자들로부터 자금을 모집하고 이를 사회적경제 사업체들에게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주업무이며 이는 업무의 규모와 단계에 따라 도매형 중개기관과 소매형 중개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도매형 중개기관은 자금모집과 새로운 금융상품 개발에 주력하고 모금한 자금을 작은 규모의 중개기관에 제공하여 사회적금융 생태계 조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도매형 중개기관(임브렐러형 중개기관)의 대표적인 국내기관으로는 한국사회투자를 거론할 수 있다. 그리고 소매형 중개기관은 사회적 경제사업체에 대한 대출과 사후관리에 주력하면서 사회적경제 현장조직과 일상적인 접촉을 수행하는 금융중간지원조직으로 보기도 한다. 이러한 금융중간지원조직은 사회연대은행, 신나는조합, 함께일하는재단 등을 거론할 수 있겠다(박중현·김낙현, 2013).

2) 사회적금융의 형성 모델

사회적금융의 개념적 유형과 주체들의 역할을 통한 운영체계에 대한 검토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회적금융시스템의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다음과 같은 3가지 방향으로 구분될 수 있다.

①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스스로의 욕구와 필요에 의해 협동조합 공제조합이나 자조금융 등 금융활동을 조직하고 이후에 이에 필요한 시스템의 구성요소들을 형성하고 점진적으로 개량하여 정착시켜 나가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② 사회적경제조직과 지역사회의 외부효과를 통해 형성하는 방법인데, 특히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금융시스템을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요인들을 갖추어 나가는 의존적인 모델이 있다.

③ 현재까지 금융시스템까지 발전되어 있지는 않지만 존재하고 있는 대안금융의 형태들을 활용하여 이들을 규모화하고 체계화하여 지역에 활용가능한 사회적금융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개발하여 나가는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지역사회에서 사회적금융에 대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할 때에는 결국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생태계적 관점에서 내부적인 여건과 외부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와 욕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충족할 수 있는 모델을 설계하는 것이 필수적이라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사회적금융의 모델은 앞서 제시한 금융조성을 주도하는 주체들의 역할에 따라서 개념적으로 연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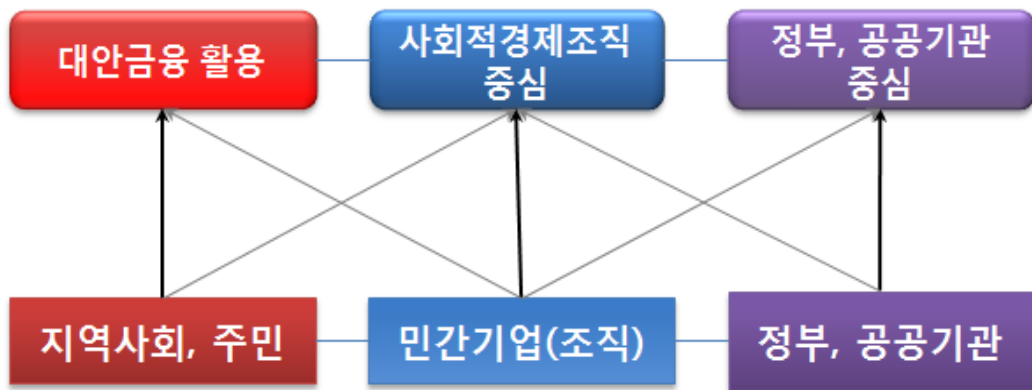
① 의 경우,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금고 등의 사회적경제 금융조직기관들을 활용하여 지역사회의 사회적금융 시스템을 형성하고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접근이기도 하다. 하지만 신탁이나 새마을금고의 본연의 역할과 임무가 있으며,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지역의 사회적금융 역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현실이다.

② 모델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해 사회적금융이 주도되는 모델인데, 정부의 재원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이 높지만, 사회적금융에 대한 공공의 관리와 통제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금융의 자율적 기반을 통한 사회적경제활성화 기능의 확보가 의문시되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정부역할의 기능과 참여수준에 있어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는 그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대안금융을 활용한 형태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규모화되거나 현실적으로 지속가능한 대안화폐 및 금융형태가 매우 부족하고 어렵다는 현실에 있어서 실현의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단점이 있으나, 지역사회 및 공동체 차원에서 다양한 공급주체를 형성하여 자본의 규모화가 가능하다면 기존 사회적금융기관이나 공공의 관련중개기관을 활용하여 민간중심의 사회적금융 모델을 형성할 수 있다.

이렇게 이론적 연구들에서 제시되는 사회적금융 형성의 모델은 다음 [그림-12]와 같다.

[그림 11] 사회적금융 형성의 모델



제 3 절 사회적금융의 사례검토

1. 국내 지원 사례 검토

현재 국내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지원할 수 있는 금융지원제도는 크게 중앙정부와 서울시 차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우선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국내 사회적경제조직 지원제도의 현황

구분	미소금융 소액대출	중소기업 정책자금대출	사회적기업 전용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모태펀드
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사회적기업 • 서울시, 경기도 예비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 사회적기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비) 사회적기업 • 사회적기업 인정예상기업
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1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도권 최대 45억원 • 비수도권 최대 50억원 (대출액의 150% 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대 4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억원 이내 	—
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금리 (연 3 ~ 4.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동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리: 4.6% • 비영리: 3.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 미만 (취급기관별 상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별 상이
상환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치: 1년 • 상환: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치: 2~3년 • 상환: 5~8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치: 1년 • 상환: 4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 4년 • 회수: 4년
취급 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열매나눔재단 • 함께일하는재단 • 민생경제 정책연구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소기업진흥공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은행 • 국민은행 • 신한은행 • 기업은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에셋벤처 • 포스텍기술투자 등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공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수시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상담 및 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보증기금 수시접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시 상담 및 결정

1) 미소금융 지원사업

○ 개요와 목적

- 미소금융 사회적기업지원사업은 미소금융재단에서 저소득층, 취약계층 및 빈곤계층 일자리 제공을 통해 소득창출의 기회와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고, 기존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어렵지만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지원 하는 사업으로, 복지사업자를 선정하여 대출형태로 지원한다.
- 재원은 휴면예금(금융회사가 휴면예금을 미소금융재단에 출연하여, 이를 복지사업에 사용)이며, 6개 기업(삼성, 현대차, LG, SK, 포스코, 롯데)과 5개 은행(우리, 국민, 신한, 하나, 기업)이 미소금융재단을 설치하였다.
- 이러한 미소금융의 목적은 기존 시장에서의 자금조달은 어렵지만 발전가능성이 높은 사회적기업을 발굴하고 그에 대한 지원을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저소득층 취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며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저소득 취약계층 및 빈곤계층 일자리제공을 하여 소득의 기회와 경제적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 업무내용

- 사회적기업 지원 기관을 대상으로 사회적기업의 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형태로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 민간복지사업자(열매나눔재단, 함께일하는재단, 민생경제정책연구소)를 통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간접 지원한다.
- 신청자격은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과 서울시 「사회적기업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서울시 지정 예비사회적기업,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21조에 따라 경기도 지정 예비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 대출사업현황

[표 7] 사회적기업 대출사업 내용

사업자명	대출조건				
	용도	한도	기간	이자율	상환방법
열매나눔재단	임대차보증금	1억원	5년 (12개월 거치)	연 4.5%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시설운영자금				
민생경제정책 연구소	임대차보증금	1억원	5년 (12개월 거치)	연 3%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시설운영자금				
함께일하는재단	임대차보증금	1억원	5년 (12개월 거치)	연 3%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시설운영자금				
	재무구조개선 자자금				
신나는조합	임대차보증금	1억원	5년 (12개월 거치)	연 4%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시설운영자금				

2) 중소기업 정책자금 지원사업

○ 개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적기업을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포함하며, 이로 인해 기업형태로 운영되던 영리형 사회적기업들 뿐 아니라 비영리형 사회적기업들도 중소기업 지원시스템 대상으로 포함한다.

○ 지원 방식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서 융자 신청을 받아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중진공에서 기업의 운전(운영)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직접 대출해주거나, 중진공의 심사후 금융회사에서 신용 또는 담보부 대출을 해주는 방식이다.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조건

- 시설자금의 경우 3년 거치 8년 이내, 운전자금은 2년 거치 5년 이내
- 대출한도는 기업당 연간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이내에서 지원(운전자금은 5억 원)
- 시장자금보다 회수기간도 길고 금리조건도 좋기 때문에 많은 중소기업들은 중진공대출을 선호한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보증을 받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신용평가등급을 받아야 함에 비해, 중진공 대출은 오히려 신용등급이 B+ 이상이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 융자한도

-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45억원(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50억원)까지이며, 매출액의 150% 이내에서 지원한다.

○ 대출금리

- 중소기업진흥채권 조달금리에 따른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분기별로 연동되는 변동금리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자금의 경우 각 사업별로 고정금리를 적용할 수 있다.(기준금리 등 세부사항은 각 사업에서 규정. 청년전용창업자금, 투융자복합금융자금, 재해중소기업, 소공인 특화자금은 세부사업에서 정하는 별도 고정금리 적용)
- 분기별 대출금리(기준금리)는 중소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sbc.or.kr)에 공지한다. 또한 금리는 기업평가등급(협동화 및 협업사업은 승인시의 기업평가등급) 및 담보 종류 등에 따라 차등적용하고, 대출일로부터 3개월 이내 최소 2인 이상 고용계획이 있는 기업은 추가 고용인원 1인당 0.1%p 금리 우대(최대 1%p, 1년간한시 적용) 적용한다.

3)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¹⁹⁾

○ 신용보증제도

- 물적 담보력은 미약하나 사업성, 성장잠재력, 신용상태가 양호한 지역 소기업 ·

19) 신용보증재단중앙회 홈페이지(<http://www.koreg.or.kr>) 내용 참조.

소상공인 등에 대한 채무보증을 통해 이들 기업들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제도이다.

-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중앙정부와 해당 시,도가 재원을 마련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의해 설립한 비영리 특별법인으로 현재 광역자치단체별로 16개 신용보증재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다.

(1) 사회적기업 관련 지원

○ 시행목적

-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전용보증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 창출을 확대하며, 지역사회 이바지하고자 한다.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12.1.26 ~ 사업 종료시
- 대상기업 :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회적기업 중 영리 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혹은 비영리사회적기업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 제2항에 의한 사회적기업)
- 보증한도 : 같은 기업당 4억원 이내
- 보증비율 : 영리사회적기업 90%, 비영리사회적기업 100%
- 보증료 : 0.5%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대출취급기관 : 기업은행

(2) 협동조합 관련 지원

○ 시행목적

-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을 통하여 취약계층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제공, 창업 활성화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할 협동조합에 대한 특례보증을 통해 지역경제발전 도모한다.

○ 사업개요

- 시행기간 : '16. 4. 28 ~ 별도 통보시
- 대상기업 : 중소기업으로서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보증한도 : 출자금의 범위 이내에서 본 건 보증 5천만원 이내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이내
- 보증료 : 연 0.8% 이내

○ 보증 상대처

- 특별출연 협약체결 금융기관 또는 지역재단에서 별도 협약체결 운용중인 금융기관

4) 신용보증기금 특화보증²⁰⁾

(1)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 대상기업

- 「사회적기업육성법」 규정,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지방자치단체, 정부 부처에서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중소기업

○ 대상자금 및 보증한도

- 대상자금: 사업을 위한 운전자금 및 사업장 임차자금, 시설자금
- 보증한도 : 기업당 1억원 이내 (※ 기보, 재단 거래업체 지원 가능)
- 운전자금 : 최근 1년 매출액 또는 향후 1년간 예상매출액 범위내(5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매출액 검토 제외)
- 시설자금 : 해당 시설의 필요자금 범위

○ 보증 및 협약기관

- 보증료 : 0.5%(대출금리 5% 미만 우대금리)

20)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http://www.kodit.co.kr>) 참조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서
-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조정 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 연대보증인 : 신용보증기금 「연대보증인 입보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보증 취급기간 : 2012.03.02 ~ 보증재원 소진 시까지
- 협약은행(금리우대)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2) 협동조합 희망보증(협동조합)

○ 대상기업

-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은 제외)’
- 소매업, 유망서비스업, 콘텐츠산업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요건²¹⁾을 충족하여야 함.
- 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신보의 보증잔액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기업

○ 보증 및 협약기관

-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한도 : 기업당 1억원 이내
- 보증료 : 연 0.5%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협의 조정 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 보증 취급기간 : 2013.09.30 ~ 보증재원 소진 시까지
- 협약은행(금리우대)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3) 협동조합 희망보증(협동조합사업자)

○ 대상기업

- 협동조합 희망보증(협동조합)의 대상요건 중 첫 번째, 두 번째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협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정책자금(협업화자금)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사업자

21) 소매업 : 협동조합의 매입(고정자산 매입 제외) 중 소속 조합원으로부터 매입 비중이 50% 이상인 경우

○ 보증 및 협약기관

- 대상자금 :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 보증한도 : 기업당 5천만원 이내
- 보증료 : 연 0.8%
- 보증비율 : 100% 전액보증
- 보증기간 : 5년 이상 장기 운용 원칙(조정 가능), 근보증의 경우 1년 이내 운용
- 보증 취급기간 : 2013.09.30 ~ 보증재원 소진 시까지
- 협약은행(금리우대)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기업은행

5) 모태펀드

○ 개요

- 모태펀드를 통해 조성한 사회적기업 투자펀드는 자본력과 담보력이 약한 사회적기업 (영리법인에 한정)이 민간자본시장의 투자를 통하여 R&D, 시설비 등 초기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²²⁾을 근거로 운용한다.

○ 규모

- 정부와 대형 비영리재단, 대기업, 민간금융기관 등이 참여하여 제1호 투자조합 42억원(고용부 출자 25억원, 민간출자 17억원, 2011년), 제2호 투자조합 40억원(고용부 출자 25억원, 민간출자 15억원, 2012년), 제3호 투자조합 60억원(고용부 출자 25억원, 민간출자 35억원, 2013년), 제4호 투자조합 40억원 (고용부 출자 25억원, 민간출자 15억원, 2015년) 규모로 조성

○ 투자 대상

- 조성총액 중 60%는 (예비)사회적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의 지원대상 중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 등에 투자한다.

22)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2 : 중기청장은 중진공 등 투자관리기관 중에서 중진기금 등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또는 회사에 출자하는 조합(중소기업 모태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

- 조성총액 중 40%는 일자리 창출 등 사회공헌도가 높은 중소기업 등에 투자한다.

○ 공모기간 및 투자신청

- 공모기간은 별도로 없으며, 회사의 영속성, 경영성과, 사업아이템, 재무상태 등을 검토하여 투자를 결정한다.(자본의 구성, 사업 분야의 전망과 회사의 입지, 재무적 상황 등)

6)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현황²³⁾

(1) 개요

○ 서울시 사회투자기금은 사회구성원 공동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 증진을 위한 사회적 금융 재원으로 총 557억원의 기금이 조성되었다.(서울시 526억원, 민간 31억원)

- 복지, 환경, 문화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적 과제 해결을 위해 활용되며, 사회적 투자를 통한 자금 선순환으로 장기적으로 정부와 시민의 재정 부담을 절감함과 동시에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에 초점을 두고 있다.
- 위탁운영기관은 (재)한국사회투자이며, 위탁기간은 2014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이다.

○ 설치 이후 3년간 70개 기업을 대상으로 347억원의 융자금을 지원했으며, 15년말 현재 기금 잔액은 240억원이다.

- 2013년 109억원, 2014년 83억원(시기금 75억원, 민간기금 8억원), 2015년 155억원(시기금 146억원, 민간기금 9억원)이 집행되었다.
- 기금 잔액은 2013년 503억원, 2014년 348억원, 2015년 240억원 수준이다.

(2) 주요 성과 및 한계

○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기관 중 가장 많은 자금을 가장 낮은

23) 2016년 SFN세미나 자료집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개편방향', 서울특별시, 2016.4.28.

이자로 공급하여 사회적경제 생태계 성장에 기여하였다.

- 사회투자자금 민간 사회투자기관 180억원의 2배 규모인 347억원 융자하였다.
- 민간 사회투자기관의 평균금리는 3.25%이나 사회투자자금은 2%로 가장 낮은 이자로 공급하였다.

○ 상대적으로 큰 융자한도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규모의 성장에 필요한 재원을 공급하는데 기여하였으며, 서울시 정책에 중요한 역할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 주거, 건설분야 사회적기업에 대규모 채원(최대 25억원 융자)이 필요한 건축사업에 진입하여 대안적 주거문화를 실험하고 확대해 나갈 수 있었다.
- 공유경제기업 쏘카에 40억원 융자를 통해 짧은 시간이 인프라를 갖추고 공급을 늘리는데 기여하였으며 서울시 교통 복지정책의 일환인 나눔카 서비스의 주요공급으로 성장할 수 있다.
- ‘한국택시협동조합’에 융자를 통해 기사노동자의 복리를 향상하고 주인의식을 높여 법인택시 공급체계의 새로운 대안으로 제시하는데 기여하였다.

○ 반면, 개선해야할 미흡한 점들도 있다.

- 일부 잘 나가는 기업 대상으로 지원이 편중되어 지원에 꼭 필요한 소규모, 영세, 신생, 미성장 기업에게는 혜택이 돌아가지 못해 낙수효과가 부족했다.
- 대손 책임을 중간지원에 전적으로 전가하다보니 중간지원기관이 엄격하게 회수가능한 곳에만 대출을 실시하였다.
- 사회적경제기업의 실정과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금융상품이 개발되어야 하나, 대출목적, 용도에 관계없이 일률적인 이자율(0~2%)과 상환기간(최대 5년)으로 지원하였다.
-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이 협소하였다.

(3) 주요 개편 방향

○ 민간위탁체제가 아닌 서울시 직영관리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가 직접 사회적 금융기관을 선정하여 투·융자를 실시한다. 다시 말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직접적인 투·융자를 지양하고, 민간의 사회적 금융기관 및 소셜 프로젝트 수행조직을 통해 지원한다.

- 현재 200억원 규모로 지속적으로 자금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180~200억원의 추재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의회의 동의를 얻어 2017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 조례 개정을 통해 대손충당금 적립 및 상각에 대한 절차를 반영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 적정한 대손범위를 설정할 예정이다.
 - 현재는 대손처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이라는 기금의 설치목적 상 대손 발생은 불가피한 실정이다.
 - 민간 사회적금융기관 연체율을 살펴보면, 지역신협은 17%, 사회연대은행은 20% 수준이다.
 - ※ 시중은행 연체율은 1%, 서울시 중소기업기금 연체율은 6.5%이다.
 - 저신용 대상 정책금융의 연체율을 살펴보면, 미소금융은 9.2%, 햇살론은 9.7% 수준이다.
- 자기 자문에 매칭가능한 기관을 우선 모집하며, 크라우드 펀딩 등 모금액량이 있는 기관도 참여 가능하다. 매칭비율은 민간기관의 전문성, 사회적가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심의위원회를 보강하며,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역할을 강화 및 확대하여 시 직영 전환에 따른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고, 기금운영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 사회적경제 실정을 고려한 다양한 금융상품을 개발한다.
 - 기존에 단일기관이 민간위탁 운영하던 기금사업을 사업분야별 전문기관이 참여하도록 구조를 변경한다.
 - 시와 민간 전문기관이 협력하여 사회투자 분야별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단계와 자금수요를 반영한 전문화된 금융상품을 개발한다. 대출기간, 투자형태(융자, 지분투자), 육성 프로그램 연계 등을 통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한다.
 - 분야별 전문기관은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하며, 시와 전문기관이 협의하여 상환기관 및 이자율을 책정한다.

- 2016년말 민간위탁 종료 후 채권관리기관을 선정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지급하면서 관리해야 한다.
 - 2016년말 예상되는 채권 잔액은 400억원으로 상환기간이 5년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관리한다.
 - 기존 한국사회투자자 자기책임 원칙하여 종료시까지 책임지는 방안, 채권 관리기관을 별도로 모집 및 선정하는 방안, 매칭 참여기관이 채권을 분할하여 책임도 맡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
- 2016년 6월 사회투자기금 개편 종합계획 수립하고, 9월 사회투자기금 개편을 위한 조례 개정안 후에 11월에 2017년 예산안 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한다.

(4) 사업현황²⁴⁾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회투자기금의 사업들의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 [표 8]과 같다.

[표 8] 사회투자기금 사업 운영 현황('13~'14, 단위: 백만원)

사업명	사업 내용	합계	市기금	민간기금
사회적경제기업 유자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소셜벤처, 협동조합 등에 재무적 기반 조성에 필요한 운전자금, 시설자금, 경영컨설팅, 투자유치 등의 경영지원 서비스를 유자사업과 함께 지원한다.	972	176	796
소셜하우징 유자사업	건설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공공, 민간임대 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하며 임대주택 수요에 비해 공급실적이 저조한 지역에 우선 추진	4,805	4,805	-
중간지원기관 협력사업	사회적 도매금융을 통해 중간 사회적금융 수행기관을 육성하여 사회투자사업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사회투자사업 지원기관, 사회적금융 지원기관, 사회적기업 지원기관, 협동조합연합회, 사회공헌재단, 마을기업 지원기관 등을 지원한다.	12,100	6,050	6,050
사회적프로젝트 유자사업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적 임팩트가 크다고 판단되는 사회적 프로젝트에 대해 공익성, 사업성 그리고 재무건전성 등을 검토하여 저금리로 민간재원과 매칭하여 융자한다.	15,580	8,540	7,040
사회적금융 인프라 조성사업	국제 컨퍼런스 개최 등	180	180	-
총계		33,937	20,051	13,886

24) 한국사회투자. 사회투자기금 집행 실적(2013~2014). 2015.

2. 국외 사례 검토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적금융을 구축함에 있어서 다양한 해외사례들을 검토한다. 해외사례 검토는 앞서 사회적금융체계에서 수요자와 공급자의 체계에 따라 운영특성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회적금융의 해외사례는 정부(공급자)중심으로 운영되는 사례와 민간의 자조적인 금융활동으로 운영되는 사례, 시민사회 전반에서 운영되는 대안금융 사례로 구분하여 살펴볼 것이다. 우선 대표적인 사례들에 대해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영국에서 사회적금융의 운영사례는 정부주도의 제도적 기반구축과 정책추진이 특징적이며 이를 민간영역에서 수용하여 운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준호(2015)는 영국 사회적금융의 사례가 우리나라가 가장 적절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으며 그 역사가 오래되었고 세계적으로 선진적인 모델을 추진하고 있음을 평가한다. 영국은 정부 차원에서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법제도적 기반마련과 지원조직을 정비하는 등 다양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있었다. 대표적으로 영국중심의 공적투자재원 공급은 'Big Society Capital'에 의해 지원되고 있으며 지역사회재투자법(UK 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통한 사회적성과평가의 기반을 마련했다. 그리고 사회투자은행이나 사회성과연계채권과 같은 다양한 금융운용방식을 통해 사회적금융의 저변을 확산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미국은 정부의 지원과 민간의 활동이 적절하게 융합되고 있는 사례로 볼 수 있다. 미국은 클린턴정부시기에 '제3의 길' 노선으로 공공정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여 시장을 활용한 불평등 해소를 정책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사회적금융의 체도를 마련한다. 대표적으로 1993년 「지역개발금융기관법」을 제출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 이후 1995년 「지역사회재투자법(CRA: Community Reinvestment Act)」을 제정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금융권 확장을 도모하였다. 그리고 「신시장세금감면법(NMTR: New Markets Tax Relief Act)」를 제정하여 사회적금융에 대한 민간의 투융자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정부의 제도적인 기반은 민간의 지역개발금융기관과의 협력속에서 도출된 결과였으며 이러한 정부와 협력속에 지역발전벤처캐피탈기금(CDVC)이나 소액융자기금(Micro-Loan Funds), 지역개발융자기금(CDLF) 등의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기금들이 마련되어 지역사회에서 운용되고 있다(서봉만·서희원, 2014).

다음으로는 순수 민간중심의 사회적금융의 운용사례로서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을 살펴보고자 한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 은행은 무하마드 유누스 교수가 고리대금의 약탈 금융질서로부터 서민의 자활을 돕기 위한 자립형 노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무담보 마이크로대출은행을 정착 시킨 대표적인 사례이다. 단순한 자본의 대출이 아니라 공동책임제나 교육과 소통의 장을 함께 마련하여 탈빈곤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순수 민간중심의 금융을 운영한 사례이다(문진수, 2013).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금융에 있어서 정부지원 및 민간자조활동의 스펙트럼에 있어서 운영형태별로 앞서 소개한 사례들을 살펴보고 충청남도의 사회적금융을 위한 적실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1) 영국의 정부 주도 사회적금융 사례

(1) 영국 사회적경제와 재원조달의 현황

① 영국 사회적경제의 일반현황

영국 정부는 재정압박과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하여 1990년 지방정부주도의 공공부문 사회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게 되는데, 이 시기부터 사회서비스 대행기관으로써 협동조합, 공동체이익회사 등의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였다. 2013년 현재, 영국의 사회적기업은 약 283,500개가 존재하며, 이중 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회적기업은 약 70,000개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 대비 5.9%에 해당하며, 임금 근로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의 5.7%에 해당한다.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총 매출액은 500억 파운드(약 84조원)로 기업 당 평균 20.6만 파운드(약 3억 3,846만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는 전체 중소기업의 연평균 매출액 40.5만 파운드의 50.8%에 해당하며, 임금근로자를 둔 사회적기업의 경우에는 연평균 매출액이 66.5 파운드로 동일 기준의 중소기업(연 평균 매출액 103.3파운드) 대비 64% 정도에 해당된다. 사업으로 인한 이익발생률은 62.8%로 일반 중소기업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② 영국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재무현황

영국의 사회적기업들의 재무 상황은 우선 지난 2012년 동안 자금조달을 추진한

경우는 약 27.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지만, 이는 일반 중소기업의 자본조달 시도율 24.0% 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이다. 영국의 사회적기업들이 자본조달을 시도한 이유로는 운영자금 조달이 55.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자본설비투자(22.3%) 순이었다.

자금조달수단은 은행대출이 42.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이 은행 당좌어음(26.2%)이었다. 다만 사회적기업은 일반기업 대비 정부 등으로 부터의 보조금이 22.5%로 많았다. 따라서, 영국의 사회적 기업들은 매출을 기반으로 한 이익 발생으로 재무건전성이 일반 중소기업 대비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9]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 이유

(단위: %)

구분	일반 중소기업(n=1409)	사회적기업(n=108)
운영자금	55.7	52.6
자본설비 투자	22.6	22.3
부동산 구매	8.8	6.5
빌딩 개조	7.6	12.3
연구개발	4.6	9.1

자료: BMG Research(2013.3),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Cabinet Office.

[표 10] 영국의 사회적기업의 자금유통 수단

(단위: %)

구분	일반 중소기업(n=4768)	사회적기업(n=344)
은행대출	48.6	42.6
은행 당좌어음	34.6	26.2
임대/할부구매	8.5	10.7
보조금	6.6	22.5
부동산대출	5.7	1.5
주택담보대출	3.2	1.1
신용카드 자금	2.7	6.0

자료: BMG Research(2013.3), Social Enterprise: Market Trends, Cabinet Office.

(2) 영국 사회적금융의 시스템

① 영국 사회적금융의 체계

영국은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해 제3섹터 기반의 독자적 금융시스템을 구축하였다. 이는 사회적기업들이 영리추구목적이 낮아 일반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이 어렵기 때문으로, 영국정부는 다양한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하였다. 우선 공공금융시스템으로써 신협과 지역개발기관으로 하여금 설립 자금을 융통시켜주고, 정부와 민간 공동으로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Phoenix Fund(3천만 파운드), Future Builders Fund(2억 1500만 파운드), Risk Capital Fund(1천만 파운드) 등 사회투자기금을 조성한다. 그리고 Big Society Fund를 조성하여 사회적기업에게 자금을 융통시켜주는 사회적 금융기관들의 공공 협동조합은행으로써의 역할을 수행케하였다. 이외에 영국 정부는 국립 복권판매기금 등 공공기금의 이자를 민간기금화(Big Issue Invest)하여 사회목적투자기금으로 활용한다.

금융시스템과 더불어 표준화된 사회서비스의 위탁뿐만 아니라 자체 개발을 위한 시장을 부여해 주었다는 시사점을 가진다. 2009년부터 영국 정부는 사회적기업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거점을 제공하는 방식의 지방정부의 자산이전 모델 사업을 시작하였다. 이는 각 지방정부에는 자체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나 사용 하지 하는 공공건물이나 토지 등의 자산을 사회서비스 개발을 전담하는 사회적기업에게 장기 임대하여 준 것이다. 2009년 10개에 불과하였던 자산이전 모델 프로그램은 3년이 경과한 2013년에 120개로 확대되었다(시민사회청, 2013)

이와 같은 시장조성을 위해서 영국정부는 운영자금 지원을 위한 기금 운영기관인 사회투자은행(Social Investment Bank), 자산이전 전문 지원기관 Locality, 지역사회 창업컨설팅 지원기관(Community Link) 등 민간 중간지원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② 영국 사회목적투자 현황

영국의 경우, 사회투자시장 구성에 적극적으로, 현재 50여개의 사회목적투자 중개조직들이 활동중이고, 2012년 1조 규모의 Big Society Capital을 출범시킨다. 이는 세계최초의 사회투자은행으로, 사회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조직들에게 자금을 제공하는 기금의 기금(Fund of Fund)라 할 수 있다. 현재 영국 사회투자시장에는 전통적인 자선단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사회적 창투사까지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사회투자 중개기관은 소셜인베스트먼트비즈니스로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아 투자펀드를 조성한 후, 공고 방식을 통해 선발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에게 저리 융자 및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성격의 투자를 해주는 기관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300여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지원하였다.

소셜인베스트먼트비즈니스가 운용하는 대표적 기금으로는 1)사회혁신기업가를 위한 기금 2)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기금 3)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등이 있으며, 기금 운영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다. 자금조성 및 지원방법은 구성되는 기금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르며, 규정화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된다.

또한, 2002년에 설립된 브릿지스벤처스(BridgesVentures)는 영국 최초의 사회적 창투자(SVC)이다. 현재 보유자산은 4천만 파운드로, 영국정부와 창투자들이 각각 50%씩 출자하였다.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재무적인 목표(Financial Return)를 함께 가져간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회목적투자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펀드는 3가지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산펀드(Property Fund), 혁신적 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하는 지속가능펀드(Sustainable Growth Fund), 사회적 기업 등 사회혁신기업가들에게 투자하는 혁신기업가펀드(Social Entrepreneur Fund) 등이 있다.

최초 자선단체(CAF)로 출발해 정식 은행으로 변신한 채리티뱅크(Charity Bank)도 대표적인 사례로, 융자 대상은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지역공동체회사(CIC)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일반 개인들이며, 융자규모는 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까지 사업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하고 있다.

③ 영국의 지역개발금융기관(Community Development Finance Institution)

사회적 금융영역 중 최근 주목을 받고 있는 영역이 낙후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의 공동체 금융이다. 지역공동체기금(Community Fund) 혹은 지역공동체재단은 특정한 곳에 뿌리를 두고 지역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쓰기 위한 자금을 모아놓은 집합체라 할 수 있다. 주로 기부나 후원을 통해 자금조달이 이루어진다는 측면에서 금융기관이라기보다 자선단체에 가까우며 재정적인 뒷받침을 할 수 있는 자금원(Resource)이 존재해야만 유지될 수 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사업인 클라우드 펀딩기법을 활용해 마을 만들기 사업이나 지역재생을 위한 자금모집을 추진하는 사례도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영국 CDFI는 주로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소기업들이나 사회적 기업, 비영리단체 및 금융 소외계층에게 자금을 투·융자해주는 일을 하는 비영리 금융기관이다. 2000년대 초반, 미국 CDFI 조직의 성과에 영향을 받은 영국의 지역 활동가들을 중심으로 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현재 영국 전역에 약 70개의 기관들이 활동하고 있다.

영국에서 지역개발금융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는 주류 금융기관 중심의 금융체계에 따른 서민들의 금융배제의 심화와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위기의식 확산에 따른 것이다. 영국인의 신탁 가입률은 약 2% 수준으로 미국, 유럽 등과 비교할 때 현저하게 낮은 수준이며, 서민금융 지원시스템이나 지역금융 기반도 매우 허약해 지역금융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는 관심이 커졌다. CDFI가 사실상 서민 금융기관 및 사회적 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2013년 현재 CDFI는 영국 내 53개가 운영되는데, 5만700건의 대출 집행(총 1억 2,300만 파운드)하였고, 1만7천개의 일자리 창출 및 보호 효과 달성하였다고 평가하고 있다. 영국 CDFIs의 사업대상은 3개로 구분하는데 ① 담보가 부족하거나 신용 점수가 나빠서 주류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힘든 지역 소기업들, ② 비영리 자선단체나 사회적 기업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 ③ 신용상태가 나쁜 개인들을 상대로 소액 자금을 대출이다. CDFI가 산하 CDFI기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사업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년간 CDFI 숫자는 2배 가까이 늘어났으며 융자 금액(2011년 회계 기준)은 총 7억 1,400만 파운드로 2006년 대비 30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역금융 시장은 계속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11] CDFI의 이용 대상자

	비즈니스	개인	소셜벤처	주택 소유자
규 모	약 3/4	약 1/3	약 1/5	5%
대 상	개인사업자, 중소규모 사업체	소외계층	사회적기업, 자선단체 등 NGO섹터	현금이 없는 주택소유자

CDFI의 수입 구조는 운영수익, 보조금, 투자수익으로 운영비 충당하고 있으며, 상당수의 CDFIs는 외부 보조금, 기부금, 투자로 펀딩하고 있다. 690만 파운드

(약 107억)를 보조금과 투자수익으로 확보하고 있다.(보조금으로 약 558만 파운드 조달). 2,700만 파운드(약 482억)가 운영으로 발생하였고, 이자수익 1,500만 파운드(약 267억), 대출 서비스 관리로 5백만 파운드(약 90억) 등 수익의 74%가 대출로부터 발생하였다. 2012년(3,100만 파운드) 대비 운영 수익은 감소했으나 대출활동을 통한 수익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④ 빅소사이어티캐피탈(Big Society Capital)

빅소사이어티캐피탈은 세계 최초의 사회 투자은행(Social Investment Bank)으로, 사회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중개조직들에게 자금을 제공해주는 도매상(Wholesaler)이자 기금의 기금(Fund of Fund)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본인이 직접 지원 대상을 발굴해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어디에 자원을 투입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는 현장조직들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해주는 ‘간접’ 투자방식을 가져가고 있다.

현재 영국 사회투자시장에는 기부를 전문으로 하는 전통적 자선단체(Charity)부터 저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융자 전문기관 그리고 투자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적 창투사(SVC)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특히, 시장 자본을 사회투자시장으로 유입하기 위한 플랫폼으로 만든 사회적 증권거래소(SSE)도 운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회투자 중개기관은 소셜인베스트먼트비즈니스로 정부의 자금지원을 받아 투자펀드를 조성한 후, 공고 방식을 통해 선발된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들에게 저리 융자 및 인내자본(Patient Capital) 성격의 투자를 해주는 기관이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1,300여개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대표적 기금으로는 1)사회혁신기업가를 위한 기금 2)시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현실에 적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만든 기금 3)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사회적 경제조직들의 성장,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등이 있으며, 기금 운영기간은 대략 6개월에서 1년 정도이다. 자금조성 및 지원방법은 구성되는 기금 성격에 따라 각각 다르며, 규정화된 틀에 얽매이지 않고 탄력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2년에 설립된 브릿지스벤처스(BridgesVentures)는 영국 최초의 사회적 창투사(SVC)이다. 현재 보유자산은 4천만 파운드로, 영국정부와 창투사들이 각각 50%씩 출자하고 있다. 이 기관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도 재무적인 목표(Financial Return)를 함께 가져간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사회목적투자 기관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운영 중인 펀드는 3가지로,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주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자산펀드(Property Fund), 혁신적 기술 등을 보유한 벤처기업들에게 투자

하는 지속가능펀드(Sustainable Growth Fund), 사회적 기업 등 사회혁신기업가들에게 투자하는 혁신기업가펀드(Social Entrepreneur Fund) 등이 있다.

최초 자선단체(CAF)로 출발해 정식 은행으로 변신한 채리티뱅크(Charity Bank)도 대표적인 사례이다. 융자 대상은 사회적 기업, 자선단체, 지역공동체회사(CIC) 등 사회적 경제조직과 일반 개인들이며, 융자규모는 5만 파운드에서 100만 파운드까지 사업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되고 있다.

2) 사회적경제조직 주도의 사회적금융 사례(미국)²⁵⁾

(1) AFCU(Alternative Federal Credit Union)

AFCU는 미국 뉴욕주 이타카(Ithaca)시에서 시작된 신용조합으로서 1979년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소외된 이웃들에게 자립과 지역사회의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1979년 이타카시 주민들은 공동체를 형성하여 마을빵집을 운영하고자 지역은행에 대출을 신청하였으나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자체적인 해결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지역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이 힘을 모아 조합을 설립했다. 이들은 설립 초기부터 단순한 금융기관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에게 필요한 자금을 제공함으로써 경제적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다는 목표의식을 확립할 수 있었다.

AFCU의 수익구조는 출자금, 대출이자, 금융서비스 제공 수수료, 개인 기부, 정부 지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정부 공인 CDFI 중 하나이다. 직전 3년간 평균 대손율(Default Rate)은 1.2% 수준으로 매우 양호하다. 지역공동체 발전 및 조합원들을 위한 각종 사업의 추진을 위한 개인 기부나 정부 지원도 받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인증 CDFI 중 하나이다.

AFCU는 개인발전계정(IDA)를 통해 지난 14년 간 조합원 가정의 자산형성에 기여해왔으며, 개인발전계정에 소요되는 매칭 자금을 자체 충당하고 있는 기관 중 하나이다. 2012년도에만 87개의 신규계정이 만들어졌으며, 프로그램 참여자 중 36명이 목표를 완료하고 독립했다.

또한 AFCU는 코넬대학 등 지역소재 주요 대학과 연계하여 절세 프로그램(Free Tax Preparation Program)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 협동조합과 공동으로 지역주민들에게 세금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을 컨설팅하고 있다. 매년

25) 문진수, 2014, 해외 사회적금융 사례로 본 신탁의 사회경제적 역할 제고방안연구, 「신탁연구 제61호」, pp. 157-212. 요약 정리함

3개월 간 진행되며, 주로 경영학을 전공하는 대학생 자원 봉사자들이 참여하는 행사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지금까지 약 2천 명의 조합원들이 뉴욕 주 및 시 정부로부터 350만 불의 세금을 환급받았다.

AFCU는 초등학교 및 홈스쿨 학생을 대상으로 채무와 금융에 대한 기초 지식을 함양하고 저축하는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학생 신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현재 조합에 가입 한 학생 수는 600명 남짓 되며 지금까지 적립한 금액은 84만 달러를 상회한다고 한다.

또한, 지역 소기업 지원서비스를 통해 조합원 중 지역 안에서 창업을 희망하거나 새로운 사업기회를 얻고자 하는 소규모 자영업자에게 사업자금 융자, 컨설팅, 집단토의, 세미나, 워크숍 등의 형식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문 및 교육기회를 제공해주고 있다. 2012년 중 약 200명의 조합원이 AFCU가 주관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 ERDA (East River Development Alliance Federal Credit Union)

ERDA는 2000년 미국 뉴욕시의 대표적인 낙후지역인 Western Queens 권역에서 만들어진 지역신탁이다. EDRA는 저소득층 공공주택 건설 과정에서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 융자를 받기 힘든 주민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주체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이 특징이다.

ERDA가 설립되기 이전부터 이 지역주민의 절대다수가 신용불량이거나 신용평가가 불가능한 조건 속에 놓여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탁을 만들어 직접 신용을 창조하는 것이 대안이었다.

ERDA 지역신탁은 이 지역 거주자들을 위한 협력네트워크 조직인 ERDA연합체에 속한 신용협동조합으로, ERDA연합체는 지역 주민, 비영리단체, 활동가, 학교자선단체, 기업 등이 주민 삶의 질 개선 및 지역개발을 위해 2009년에 공동으로 설립한 협력기관이다.

ERDA는 공공주택 건설 및 보유를 목적으로 설립된 일종의 주택협동조합이 라는 특징을 갖고 있다. ERDA의 주요 사업으로 재정안정 지원, 직업알선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진로지원, 지역재생 사업 등을 들 수 있다.

이 중, 재정안정 지원사업은 ERDA가 추진하는 핵심 사업으로 재정 위기에 빠진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개인 컨설팅을 통해 장기적 관점에서 개인자산을 늘려갈 수 있는 세부 방안을 찾아주는 재무상담 프로그램이다. 2012년도에만 1,180명의

주민들이 해당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 채무청산 및 자산 증식에 성공했다. 직업알선 프로그램의 경우 실업자 등을 대상으로 취업준비 및 직업훈련을 제공하고 있으며, 우수 학생에게는 인턴십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지역재생 프로젝트 사업은 지역사회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젝트로 보급을 위한 유통구조 개선, 근린생활시설 확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현재 ERDA연합체의 재정구조는 대부분 정부지원금, 개인 및 단체 기부금을 통해 충당하고 있으며 중장기적으로는 재정적 자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재정안정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영리 사업을 펼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신탁을 직접 설립하여 금융기반을 조성하려는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별한 사례로 언급되고 있다.

3) 시민사회 중심의 사회적금융 사례(방글라데시 그라민뱅크)

(1) 그라민뱅크 개요

그라민은행(Grameen Bank)은 무하마드 유누스(Muhammad Yunus)에 의해 설립된 세계 최초의 무담보소액대출 전문 은행이다. 1976년 당시 치타공 대학의 경제학과 교수였던 유누스 총재가 대출상환능력이 불분명한 극빈자들을 상대로 소액 신용대출을 실험한 그라민뱅크 프로젝트(Grameen Bank Project)가 시초이며, 1983년 법인화 이후 담보능력 없는 빈민들에게 자체교육 및 소액신용대출을 통해 빈곤 퇴치사업에 주력, 평균 95% 이상의 회수율을 기록하며 재정자립도 100%의 거대은행으로 성장하였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최소 400만 이상의 빈민이 구제받았으며, 유누스 총재와 그라민 뱅크는 빈곤 퇴치를 통한 사회적 약자 구제의 공로를 인정받아 2006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하였다.

그라민 뱅크는 2010년 기준 방글라데시 전역 83,458개 마을, 2,565개 지점에 총 22,225명의 직원이 종사하고 있다. 그라민 대출시스템은 이후 아프가니스탄, 카메룬 등 37개국에 도입되어 무담보소액대출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했을 뿐 아니라, '08년 2월부터는 뉴욕 퀸스(Queens)에 그라민 아메리카 (Grameen America) 1호 점을 설립, 미국 내에서도 영업을 개시하였다

그라민뱅크의 운영모델은 소규모 마을의 인적 네트워크에 기초하는 시스템으로 마을 주민의 연대와 상호부조가 핵심이다. 그라민은 개인 단독대출이 아닌 소규모

그룹 단위로 대출이 진행되며, 상위 조직이 하위 점조직을 관리하는 피라미드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그라민뱅크의 대출자 관리는 그룹(Group)-센터(Center)-지점(Branch)-지역본부(Area)-광역본부(Zone)로 이루어진다.

먼저 그룹(Group)은 무담보소액대출을 위한 최소단위조직체로서, 최소 5명에서 최대 10명으로 구성하며, 그룹 구성원은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빈곤할 것(개인의 전 재산이 1,500TK (약 22,500원) 이하일 것), 둘째, 최소 5명 이상으로 구성할 것(최대 10명까지 구성 가능), 셋째, 그룹 구성원 간 혈족관계가 아닐 것, 넷째, 시골지역에 거주하며, 서로 인접한 이웃일 것이다. 그룹이 구성되면, 이를 대표하는 의장 (chairman)을 선출하고, 1주일 간 은행에서 제공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게 된다. 이 교육 프로그램에서는 일주일간 생활개선에 필요한 기초 교육을 실시하며, 동 기간 중 그라민 뱅크에 계좌를 개설하여 일일 10TK(약 150원)을 입금, 저축의 중요성 및 예금방법, 본인의 이름 및 서명하는 법 등을 교육 받는다.

센터(Center)는 같은 마을 내에 8~10개의 그룹으로 구성되며 주 1회 대출금 상환 및 예금, 추가 대출 상담 등을 위한 모임을 개최한다. 은행 소속 직원 센터 매니저 (center manager)가 매주 센터 모임(center meeting)에 참석하며 예금 접수 및 대출금의 출납 업무를 수행한다. 대출이 필요한 개인은 그룹과 센터에서의 내부 회의를 거친 후, 센터 모임의 대출자 대표(center leader)가 기명날인한 신청서를 센터 매니저에게 제출한다. 센터 매니저는 대출 가능성을 검토하여 대출신청서를 작성, 지점(Branch)으로 이송한다.

지점(Branch)은 실질적인 대출 심사 업무가 이루어지는 곳으로 센터에서 접수된 신청 서류를 검토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한다. 용자를 신청한 개인을 방문, 개인의 생생의지 및 생활환경을 파악하여 대출액을 결정하고 이를 대출지급대장에 기록한다.

마지막으로 일정 지역의 지점을 총괄하는 지역본부(Area)와 지역본부를 관리하는 광역본부(Zone)가 운영되며, 현재 방글라데시 내에 40개의 광역본부와 268개의 지역본부가 영업 중에 있다.

(2) 그라민뱅크 성공요인

그라민뱅크의 성공요인은 거시적 측면과 미시적 측면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거시적 차원에서 그라민뱅크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소자본으로도 개인 창업이 가능한 방글라데시의 경제·사회적 요인 때문이다. 이러한 요인 때문에 소액 대출을 통해 창업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으로 원금을 갚을 수 있었다. 또한, 방글라데시

는 1인당 GDP 676달러, 총인구 1억6천만 명, 인구 밀도 1천명/km², 문맹률 50% 이상('09년 기준)의 저개발국가로서, 국민 대부분이 단순 노동 및 소작 농업에 종사하고 있었다. 때문에 신용융자를 원하는 국민자들은 노상 찻집 운영, 농기구·재봉틀 구입 등을 위한 소액자본이 필요하나, 대출을 위한 최소한의 담보자산이 없는 계층이 주를 이루었다. 그라민뱅크는 이들에 대한 1인 대출한도를 최대 150달러로 제한하여 미상환에 따른 은행 부담을 최소화하였다. 이는 1인당 최고대출액을 150달러(약 17만원) 수준의 소액으로 제한함으로써 대출자의 상환불능에 대한 은행부실화 위험을 낮추고, 높은 금리를 통한 상환 수익으로 은행의 상환 불능 리스크를 축소하는 구조이다.

미시적 차원에서 그라민뱅크의 대출 모형은 동료효과(peer effect)에 기초한 인적 담보를 통해 차용자의 도덕적 해이(moral hazard)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일반적인 은행 대출은 차용자의 상환불능 위험을 해소하기 위해 물적 담보(collateral)를 요구하거나 연대보증 등의 인적 담보를 요구하나, 그라민뱅크는 일반 인적 담보제도와 달리 법적 강제절차를 수반하지 않으며, 대출금 미상환시 다른 그룹 구성원이 연대책임을 부담하지도 않는 구조이다. 그라민뱅크는 개인이 아닌 그룹을 대상으로 대출여부를 심사하고, 대출이 승인된 경우에도 일부에 게만 대출금을 우선지급한 후, 그 상환정도에 따라 기타 구성원에게 추가대출을 허용하였다. 이러한 장치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대출자 선정에 대한 은행의 선택비용(selection cost) 절감 효과이다. 다른 그룹 구성원의 상환 성적에 따라 자신의 대출 여부가 결정 되므로 대출자 스스로 대출금을 성실히 납입할 만한 사람을 선별 하여 그룹을 결성할 수 있었다. 둘째, 상호부조에 따른 대출 상환 가능성 증대 효과이다. 개인이 아닌 그룹 전체의 상환 성과가 중요하므로 최초 대출자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상호부조하며 상환을 독려했다. 마을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그라민 뱅크 대출자 관리 시스템의 핵심은 고객이 은행을 방문하는 것이 아닌, 은행 직원(manager)이 직접 고객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장치를 통해 대출자 간 연대의식 고취, 묵시적 감시 기능 강화가 가능할 수 있었다.

<그라민뱅크 16개 규약(Sixteen decisions)>

1. 규율, 연대, 용기, 근면이라는 그라민 뱅크의 4대원칙을 평생 지킨다.
2. 언제나 가족의 번영을 우선한다.
3. 파손된 주택에서 주거하지 않으며, 주택은 최대한 빨리 개보수한다.
4. 채소를 재배하여 섭취하고, 남은 물품은 판매한다.
5. 농사기간 중 최대한 많은 농작물을 재배한다.
6. 가족계획을 수립하고, 지출을 최소화하며, 자신의 건강을 돌본다.
7. 자녀는 반드시 학교에 보낸다.
8. 자녀 및 주변 환경의 위생을 청결히 한다.
9. 별도의 변소를 짓고 이를 이용한다.
10. 끓이거나 정수작업을 거친 깨끗한 물만 섭취한다.
11. 자녀의 결혼에 대한 지참금은 주지도, 받지도 아니한다.
12.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가하지 않으며, 부정한 짓을 하지 아니한다.
13. 꾸준히 저축하여 돈을 모으고, 부가 쌓이면 더 많은 돈을 저축한다.
14. 서로 도우며 어려움을 함께 극복한다.
15. 규율 위반의 지점이 발견된 경우, 해당 지점의 규율회복을 위해 다함께 노력한다.
16. 사회 활동에 적극 동참한다.

제3장 충남 사회적경제의 현황과 금융수요

제 1 절 사회적경제 지원제도의 현황

1. 사회적경제의 제도적 현황

1) 국내 사회적경제의 법제도적 현황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복지와 일자리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등장하고, 그 이후 정책지원에 힘입어 조금씩 성장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특히 김미곤(1999)에 따르면, 김영삼정부시절 1995년 ‘국민복지기획단’에서 빈곤정책의 일환으로 생산자협동조합 방식이 검토되고 지원기관인 자활지원센터의 사업이 시작된 것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후 사회적경제부문은 1997년 외환위기를 거치면서 대규모 실업극복을 위해 실업자들에게 공익성 높은 사업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공공근로사업을 실시하게 되어 성장하였다고 본다.

이처럼 일자리 제공 중심의 사회적 빈곤층에 대한 지원사업은 2003년 사회적일자리 창출 시범사업으로 연계되어 지속적으로 실시되었다. 나아가 2006년도에는 일자리 유형을 구분하여 정부지원에만 의존하지 않는 사업개발을 촉진하게 되었다. 그리고 2007년에는 본격적으로 시행된 ‘사회적기업육성법’에 의해 사회적 일자리 육성사업의 맥락이 이어져 사회적기업의 형태로 사회적경제부문이 성장하게 된 역사적 맥락을 살펴볼 수 있다(채종현·이종한, 2009).

이후 정부 정책에도 사회적경제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활용되기 시작했고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된 지원정책들이 등장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의 사회적 육성사업(2007), 행정안전부의 마을기업(자립형지역 공동체사업, 2010),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어촌 공동체기업 육성사업(2011), 지식경제부의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2010년 사업중단) 등 주로 정부의 일자리정책과 관련되어 이를 시행하기 위한 외형적

조직으로만 국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정부주도의 사회적경제 사업들은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가 정부 보조금 중심의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낳았고 수적으로 많은 인원을 고용하는 실적에만 매달리는 행정 편의주의적 행태를 형성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다(정관영, 2012).

특히 2008년 들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경제적 위기감이 고조되면서 협동조합까지 정책영역에 통합되었고, 사회적경제 전반이 시장경제의 보완영역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주요한 법적인 조직형태가 요구됨에 따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되어 기존 농협, 수협 등 뿐만 아니라 모든 업종에서 5인 이상이면 설립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도적 기반이 구축되었다. 그리고 지역사회가 직면한 각종 문제해결과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위한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도 가능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에 따른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조직은 다음과 같은 유형이 존재한다.

우선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에게 공공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영리기업으로 ‘예비 사회적기업’과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대해 우리나라는 정부가 인증하는 제도적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담당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에 대해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와 함께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조직)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의 인증을 받은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협동조합’은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하면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그리고 5인 이상의 조합원 자격을 가진 자가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고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 설립할 수 있어 사회적기업처럼 인증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지역자산을 활용하는 ‘마을기업’과 자활자의 재활과 창업을 통한 일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자활기업’이 존재한다. 특히 마을기업은 아직 법적 근거는 없지만 2010년 행정안전부의 지역자립형공동사업으로 시작하여 2011년 마을기업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현재까지 실시되고 있는 정부지원사업이다. 마을기업을 주관하는 행정자치부에 의하면 마을기업은 커뮤니티 비즈니스에서 개념을 차용하였으며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표 12] 사회적경제 ·유형 구분

구분	유형	개념	관련법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사회적기업육성법
	인증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에서 인증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에 기반해 주민의 욕구와 지역문제를 해결하며 마을 공동체의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는 마을 기업	-
자활기업		·자활근로사업단을 통해 근로여건과 의지가 충분하게 높아져 취약계층이 참여하는 형태의 공동창업 모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협동조합	소비자협동조합	·조합원의 소비생활 향상을 위한 물품의 구매·서비스 이용 ※통신협동조합, 공동육아협동조합, 주택협동조합 등	협동조합기본법
	생산자협동조합	·생산자 수익창출을 위한 공동판매·공동구매·공동브랜드 등 ※전통시장상인협동조합, 공동브랜드식당·미용실·숙박업 등	
	직원협동조합	·직원이 조합을 소유·관리·일자리 마련 ※대리운전협동조합, 청소협동조합, 쉼서비스협동조합	
	다중이해협동조합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복리증진 등에 기여하는 행위 ※독거노인도시락배달협동조합(생산, 소비, 직원고용 등)	
	사회적협동조합	전체 사업의 40% 이상 공익사업 수행 ※취약계층에게 육아서비스를 제공하는 보육사회적협동조합 등	

2) 사회적경제 지원제도의 현황

(1) 사회적기업의 지원사업

제도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인증)을 받으면, 다양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우선 보조금지원으로 3가지 지원제도가 있다. ① 일자리창출사업으로서 인건비지원,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를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참여기업은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기간 2년, 사회적기업은 인증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이다.

인건비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의 일부(9.33%)이다. 지원수준은 연차별로 차등적용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70%, 2년차 60%이고,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20%(2년이상 연속고용한 인원)이다.

② 사업개발비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등 R&D비용, 시장진입 및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제품의 성능 및 품질개선 비용 등 재정지원을 통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속적·안정적 수익구조 기반마련을 위한 사업개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개발비의 지원내용으로 약정기간은 12개월이내, 지원기간은 12개월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참여기업은 최대 5년까지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기간 2년, 사회적기업은 인증후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기간은 3년이다. 사업개발비의 연간지원한도는 사회적기업 1억, 예비사회적기업 5천만원 이내이며, 지원한도는 유형별 차등지원을 한다.

[표 13] 사업개발비 유형별 지원내용

유형	정의	연간지원한도액	
		인증	예비
A유형	창업 초기 단계 기업의 인프라 구축지원	1천만원	
B유형	사업정착단계 기업의 경영 실용화 지원	5천만원	3천만원
C유형	사업성장단계의 기업 기술집약형 모델개발 지원	1억원	5천만원
연간최대 지원한도		1억원	5천만원

자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참조

③ 사회보험료지원은 월 50명까지 지원한다. 지원내용은 4대 사회보험료 중 사업주 부담분 일부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이다. 지원수준은 기업규모와 업종과 관계없이 최저요율 기준으로 지원하고, 지원 보험요율은 40시간 근로자 최저임금 수준이다.

④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이외에도, 경영컨설팅, 공공기관 우선구매 지원, 판로개척지원, 프로보노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표 14] 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별 지원내용

구분	일자리창출	전문인력	사업개발비	사회보험료
주요 지원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사업주 사회보험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월 200만원 한도(인증 3명, 예비 1명) * 자부담 20/30/5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인증: 연 1억원 예비: 연 5천만 한도 * 자부담 10/20/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지원한도 50명 *인증기업만 해당
약정기간	지원개시일로 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 부터 12개월	지원개시일로 부터 12개월	-
지원기간	(지정) 지정기간내 2년 (인증) 최초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내 3년(보험료지원 4년)			
지원기간 산정방법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예비)지정일로부터 3년 이내 최대지원기간 2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3년	(인증)인증 후 최초 지원개시일로 부터 5년 이내 최대지원 기간은 4년

자료: 2016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매뉴얼

(2) 마을기업의 지원사업

마을기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최종적으로 지정하여 2차년도에 걸쳐서 일정금액을 지원해주고 있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광역자치단체 차원의 공모에 신청하여 추천을 받아 행정자치부의 최종 심사과정을 통해 지정된다. 마을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한 요건은 총 네 가지 인데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요건의 성격을 살펴보자면, 우선 기업성으로 마을기업은 다양한 사업을 통해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동체성으로 마을기업은 마을과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해야 하며 마을기업의 회원들은 모두 마을기업에 출자해야 하며 공동체 일원으로 마을기업 계획과 운영에 참여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공공성으로 마을기업은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위한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반드시 실현해야 하며 이러한 활동은 민주적 절차에 의해 결정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성으로 마을기업은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 운영되어야 하며 지역에 소재하는 자원을 활용한 사업을 실시해야 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마을기업은 지역 공동체의 주민이 주도하는 기업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자치부의 지침을 살펴보면 마을기업은 공동의 목적을 가진 5인 이상의 구성원이 모여 조직한 법인으로 출자자의 70% 이상이 해당지역 주민이어야 하며, 지역 내 자원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여야 하는 사업체를 의미한다. 또한 지역자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되, 신규사업이 기존지역 상권과 충돌해서는 안되며, 고용인력의 70% 이상을 해당 지역주민으로 채용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행정안전부, 2016)

❖ 지역의 범위

- ‘군’의 경우 거주지가 ‘읍·면’
- 서울 및 6개 광역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 행정구가 있는 ‘시’ 일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구’
- 일반 ‘시’의 경우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시’
- 읍·면 지역이 있는 도농 복합시일 경우, 거주지가 ‘읍·면’이거나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읍·면을 제외한 ‘동 지역 전체’

* 다만, 사업성격, 주민생활권 등의 사유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범위확대가 필요하다고 시·도에서 인정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예외 인정

* 지역주민 비율(70%) 산정방법 : 6인 출자시 지역주민 5인 이상(4.2명→5명), 8인 출자시 지역주민 6인 이상(5.6명→6명)

이러한 자격요건을 갖춘 공동체가 마을기업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심사하여 안전행정부가 마을기업으로 선정하게 되며 2년간 최대 8천만원(1년차 5천만원, 2년차 3천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자격요건을 갖춘 대상자들에 있어서 주요 심사내용은 지역 공동체의 단결 정도와 마을기업 사업모델의 수익성 및 공공성, 지속가능성이며 지역문제를 해결하거나 지역사회의 공헌도가 인정되면 가점을 줄 수 있다. 이러한 마을기업의 요건을 살펴보면 지역공동체 중심의 활동을 강조하고 있으며 주민의 실제 사업참여를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지역성의 특징에서 다른 사회적경제조직들과 차이점이 있다(KB금융지주 연구소, 2013).

-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 보조금 : 마을기업 지원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급한 금액
- ❖ 자부담 : 사업 수행을 위하여 마을기업 회원들이 출자한 금액의 합

예) 보조금이 5,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1,0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6,000만원)
 보조금이 3,000만원인 경우, 자부담액은 600만 원 이상
 (이 경우 총사업비 3,600만원)

충청남도의 마을기업은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사업공모절차와 심의를 거쳐 선정되며, 지정되면 1차년도에 50백만원, 2차년도에 30백만원이 지원된다. 이러한 보조금은 20%범위 안에서 인건비(마을기업 운영을 위한 인력고용)로 활용가능하며 이러한 마을기업의 사업추진으로 인한 수익금은 적립하여 지역에 재투자함이 원칙이며, 충남 마을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는 조건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충청남도의 마을기업 선정심사 및 인증기업관리는 민간지원조직인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소속의 마을기업지원센터에서 담당하고 있다.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당사자 조직들을 지원하고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을 지역차원에서 실시하는 종합적인 사회적경제 지원조직으로서 마을기업 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같은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조직간 교류와 네트워크를 강조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지역중심의 지원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3) 협동조합의 지원사업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에 시행된 이후 설립된 협동조합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 등 일반적인 지원제도를 제외하고 협동조합만의 지원제도를 살펴보면 크게 재정지원, 교육컨설팅 지원, 홍보 및 판로지원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사업

우선 신용보증재단중앙회는 협동조합에 대해 특례보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협동조합은 출자금의 범위 이내에서 본건 보증 5천만원 이내의 한도에서 5년 이내 기간 동안 연 1%이내 보증료 율로 재단에서 보증을 운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용보

증기금에서는 기업 당 100백만원 이내 운전자금 한도사정을 감안하여 보증료 연 0.5% 수준으로 5년 이상 장기운영 원칙으로 보증해주는 협동조합 희망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특징적으로 과학기술분야에 있어서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사업화 지원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는 설립 3년 이내 과학 기술인 협동조합에 한하여 15개 과제 내외로 한 과제당 20백만원 내외로 재원을 차등지원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의 80% 이내(협동조합 자부담이 20%이상, 인건비 및 간접비 불포함)를 지원하고 있다.

② 교육·컨설팅지원사업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과 컨설팅 사업은 대표적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실시하는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사업이 있다. 이는 협동조합 실무자 및 임원에 대한 맞춤형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으로, 협동조합의 실무과정과 임원과정으로 크게 구분된다. 실무과정은 직원 및 조합원을 대상으로 전문역량강화를 위한 업종별 특화교육과 일반교육으로 구성되며, 임원과정은 협동조합 임원 및 이사장 등 관리직 대상 교육과정으로 협동조합의 조직적 특성을 이해하고 안정적 조직운영 위한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는 사회적협동조합 만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임원 교육이 있으며 주로 사회적 협동조합의 운영, 행정절차, 판로활성화 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한다.

특수한 분야로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실시하는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경영지원사업’이 있다. 이는 문화예술분야의 협동조합 경영 역량강화를 목적으로 하며 멘토링을 통한 컨설팅과 기업당 1천만원 이내의 경영자금 지원, 네트워킹, 워크숍을 지원하고 있다.

이와 함께 충청남도에서는 (사)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의 협동조합지원센터에서도 자체적으로 교육 및 컨설팅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2016년에는 10회차 일정으로 ‘찾아가는 협동조합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협동조합의 학습동아리 사업도 진행하였다.

③ 홍보 및 판로지원 사업

협동조합에 대한 판로지원으로선 우선 기획재정부에서 제공하는 사회적협동조합 제품 우선구매제도가 있다. 이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공공기관이 사회적협동조합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적극적으로 우선구매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

기관이며 협동조합 홈페이지에서 상품등록과 승인이 이루어진다.

충청남도에서는 협동조합만을 위한 판로지원 구축보다는 2014년 충남 사회적경제 판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따숨몰을 개점하는 등 사회적경제의 일환으로 협동조합들의 판로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 5월에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2. 충남 사회적경제관련 금융제도 현황

1) 충청남도의 기금 운용 현황

(1) 충청남도 운용기금의 현황

충청남도는 자치단체의 특수한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142조의 규정에 따라 13개 기금을 설치·운용하고 있다. 2015년도 말 현재, 225,325,983천원이 조성되어 있고, 16년 전체 수입은 19,402,255천원, 지출은 17,399,676천원으로, 16년도말 조성액은 227,328,562천원이 조성될 예정이다. 이러한 충청남도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기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자면, 13개 기금의 설치목적과 근거, 소관 부서를 다음 <표-16>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15] 충청남도 기금 운용의 현황

기 금 명	설치연도	설 치 목 적	설 치 근 거	소관부서
통합관리기금	2003	여유자금의 효율적 활용	통합관리기금설치조례	예산담당관실
감채기금	2000	지방채상환재원의 안정적 확보	감채기금조성 및 운용조례	예산담당관실
남북교류협력기금	2012	남북교류 협력 및 통일정책 사업 지원	충청남도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자치행정과
충남도립대학교 장학기금	2014	우수학생유치 및 인재육성	충남도립대학교 운영조례 제4장	충남도립대학교
여성발전복지기금	2000	여성의 사회참여확대 및 모자가정 지원	여성발전기본법 제29조	여성가족정책관실
청소년육성기금	1986	청소년의 건전여가활동 지원	청소년기본법 제56조	여성가족정책관실
사회복지기금	2000	노인복지 및 생활보장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3	사회복지과
재해구호기금	1983	재해구호 및 복구지원	재해구호법 제14조	사회복지과
난치병치료후원기금	2000	저소득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난치병치료후원기금운용조례	장애인복지과
식품진흥기금	1989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수준 향상	식품위생법 제89조	식품의약과
농어촌진흥기금	1990	농어촌지도자 육성 및 농어민소득증대	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	농업정책과
중소기업육성기금	1993	중소기업의 지원 및 지역경제활성화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43조	기업통상교류과
재난관리기금	2004	재난·재해예방 및 응급복구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자연재난과

이처럼 충청남도에서 설치된 기금은 각 목적사업 의거하여 운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본 과제의 연구목적에 비추어 볼 때, 충청남도의 사회적금융 관련하여 참고 가능한 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과 중소기업육성기금으로, 본 사례조사에서는 두 기금의 운용 등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2) 농어촌진흥기금

농어촌진흥기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농어촌지도자 육

성과 농어민 소득증대를 목적으로 1990년 6월 5일 설치되었다. 사업의 목표는 ‘과학영농의 선도실천 및 농업경쟁력 향상의 핵심주체 육성을 통한 농업발전의 경쟁력 확보’, ‘농어촌진흥기금 저리융자지원으로 생산기반시설 현대화 등을 통한 농업경쟁력 제고’이다. 이에 따라, 기금사업은 ① 일반소득, 지역명품, 수출·유통 등 활성화사업에 융자금 저리융자 지원, ②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도연합회 농촌전문인력 육성사업 지원이다.

2015년 말 조성액수는 24,509백만원이며, 2016년 말 조성액은 24,095백만원으로 414백만원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재원은 농어촌진흥기금의 이자수입과 도 출연금이다. 지원기준은 개인당 50백만원이내, 법인은 총자산금액의 30% 이내로 하고 있으며, 지원대상은 농촌지도자, 4-H, 생활개선회 연합회 등 농어민단체,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농업법인), 농어업 관련업체이다.

기금활용사업은 융자사업과 비융자사업으로 나뉘어지는데, 우선 비융자성 사업은 농어민 소득증대를 위한 지역명품, 수출 및 유통활성화(2016년 800백만원), 농촌전문인력육성(2016년 45백만원)이 있으며, 융자사업으로는 농업6차산업화 육성사업이 있다.

농업6차산업화 육성사업은 6차산업의 일환으로 창업한 두레기업 등에 대해 농어촌진흥기금 운전자금을 제공한다. 구체적으로 ① 농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창업한 6차산업화경영체 및 농산물을 원료로 수출확대 가능성이 높은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 ② 성장가능성이 있는 두레기업 등에게 원료구매, 제품개발 등 경영안정화를 위해 운전자금으로 지원, ③ 추가 생산기반구축을 통하여 성장가능성이 있는 두레기업 등에게 시설자금으로 지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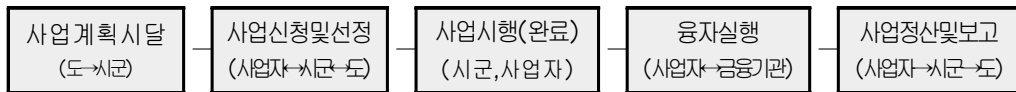
2015년의 경우 총 융자사업비는 1,000백만원으로 책정되었고, 지원은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에 대한 지원이다. 시설자금은 ①농식품의 고급화를 위한 시설현대화 및 최신파인 구축에 있고, 운전자금은 ① 경영정상화를 위한 농산물 원료구입자금, ② 시장환경변화에 대응한 신규기술, 제품개발비 등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표-14>와 같다.

사업시행절차는 다음과 같으며, 사업시행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융자금융기관(농협 또는 하나은행)과 협의를 거쳐 사업을 시행한 후 융자금을 신청하는 전사업, 후 융자지원원칙으로 진행하였다.

[표 16] 농업 6 차산업화 육성사업 지원내용

구 분	내 용	연이율
상환조건	▶ 시설자금:2년거치 3년균분상환 ▶ 운전자금:2년이내 일시상환	협약금리:6.2% 기금보전:4.7% (농가부담:1.5%)
지원 한도	▶ 법인 3억원 이내 또는 총 자산액의 30% 이내	
융자은행	▶ 농협(지역단위농협 포함), 하나은행	

[그림 12] 농업6차산업화 사업시행 절차



(3) 중소기업육성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의 안정적 성장발전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를 목적으로, 1993년 6월 30일 설치되었다. 기금목표는 ‘도내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발굴 육성’, ‘도내 중소기업의 창업활성화 및 성장기반 확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이에 따라, 기금사업은 충청남도내 중소기업의 원활한 설비투자과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개선을 위한 융자지원을 한다.

2015년 말 조성액수는 110,148백만원이며, 2016년 말 조성액은 109,961백만원으로 187백만원의 감소를 예상하고 있다. 재원은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차입금(정부차입금), 이자수입금과 도 출연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이다. 지원대상은 충청남도에 주된 사업장이 소재하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이다.

[표 17]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대상

업종별	세부 지원 업종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중소기업 중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 및 환경복원업
지식서비스산업	○산업발전법 시행령 상의 지식서비스산업(별표2) 중 지원표시 업종이 도내에 소재한 기업
전략산업 및 미래성장산업	○ 도의 5대 전략산업 및 미래 성장산업 영위 기업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화학 및 금속소재, 기계가공부품, 이차전지 청정에너지, ICT융합, 라이프케어, 기능성식품 기업
제조업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중소기업 중 제조업(24개 업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화물운송업(493), 해상운송업(501), 화물 취급업(5294) 화물 자동차터미널 운영업(52913), 화물운송 중개,포장, 검수 (52991·52992), 기타 산업용기계장비 임대업(오락기 및 도박기계 임대업은 제외)(6939), 폐기물수집·운반업·처리업(381·382),기계장비 수리업(9511),자동차 종합수리업(95211) ○공장의 신·증축, 유휴 공장·부지 매입 및 공장을 임차하려는 기업
건설업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지식기반 산업 및 영상산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연구개발업, 엔지니어링서비스업 등 전문분야에서 지식을 기반으로 창의적 정신활동에 의하여 고부가가치의 지식서비스를 창출하는 지식기반산업 ○영상진흥기본법에서 정한 영상산업 중 영상물 제작 분야
소상공인	○도내 소재의 사업자등록 소기업·소상공인으로써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의한 소기업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소상공인 ※ 기 지원받은 소상공인, 이자보전 만료 후 1년경과 업체

융자지원자금의 종류와 조건은 <표-16>과 같다. 자금종류별로 시행주관기관이 다르다. 창업 및 경쟁력강화 자금, 혁신형 자금은 충남경제진흥원, 경영안정자금 및 기업회생자금은 충남도에서, 소상공인 자금의 경우, 충청남도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하고 있다.

[표 18]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융자지원 종류와 내용

지원	내용	금액	비고
창업자금	중소기업 등 창업비용 제조업의 공장신설 등 소요자금 연구개발 및 경영운전자금	25억원 이내 시설자금: 2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연리 3.4%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경쟁력강 화자금		25억원 이내 시설자금: 20억원 운전자금: 5억원	연리 3.4% 시설자금: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운전자금: 1년거치 2년 균분상환
혁신형 자금	벤처기업 기술 및 경영혁신형기업 신기술인증기업 등	10억원 이내	연리 2.5% 3년거치 5년 균분상환
기업회생 자금	천재지변 등 피해기업 구조조정등 경영애로기업 등	5억원 이내	연리 2.0% 1년 거치 2년 균분상환
경영안정 자금	제조업력 2년이상 제조업 전업률 30%이상 기업 등	3~10억원 이내(연간 매출액 범위내)	약정금리중 1.75~2.0% 이자보전 지원

2) 충남신용보증재단의 현황과 사업

(1) 충남 신용보증재단의 개요와 사업현황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을 근거로 설립되었다.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 등과 개인의 채무를 보증하게 함으로서 자금유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지역신용보증재단법 1조). 주요한 업무는 신용보증, 신용조사 및 정보관리, 경영지도, 구상권 행사이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1998년 10월 충남신용보증조합으로 시작하여,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정을 통해 설립되었다. 1998년 10월 26일 1호 보증서를 발급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보증잔액 5,000억원(보증실적 약 3만건) 을 달성, 2016년 현재 재대출연금 1574억원에 달한다.

신용보증은 담보가 부족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금융회사, 기업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상거래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어음상의 채무에 대한 담보가 필요할 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담보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신용보증지원은 신용보증 신청기업의 신용도에 대한 종합심사를 통해 신용보증 지원여부, 지원한도, 연대보증입보 여부, 보증료율 등을 결정한다.

[그림 13] 신용보증 지원제도 기본구조 및 지원절차



자료: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보증지원은 크게 ① 일반보증과 ② 서민금융지원이 있다. 일반보증은 충청남도 소상공인가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가금, 기초지자체 출연부 특례보증과 햇살론이 있다. 서민금융지원은 ① 저금리대출: 제도권 금융기관의 이용이 어려운 저소득·저신용계층에게 창업자금, 운영자금을 대출하는 상품(미소금융, 햇살론 등), ② 고금리 채무전환: 대부업체 또는 캐피탈사 등에서 대출받은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저금리대출로 전환시켜주는 상품(바꿔드림론), ③ 채무조정: 과도한 채무 부담을 줄여 경제적 회생기회를 주는 지원제도(국민행복기금)등이 있다.

이와 함께 창업정보 부족 및 준비부족으로 창업이 어려운 점을 개선하고 올바른 창업을 위해 창업교육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대상은 충청남도에 사업장 또는 주소를 둔 만 39세 이하의 창업예정자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의 사업자이다. 교육제도 수료시, 신용보증과 연계한 지원(이자보전 지원(3.0%), 보증료 일부 감면)과 창업시 필요자금 및 사후관리의 컨설팅을 하고 있다.

[표 19]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지원제도 현황

구분	충청남도 소상공인가금	중소기업청 소상공인가금	기초지자체 출연부 특별보증	햇살론
대출한도	5천만원	7천만원	3천만원	2천만원
대출기간	2년 또는 3년	5년	2년 또는 3년	5년
상환방식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3년: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3년 원금분할 상환 (분할상환 원금 70%, 5년만기 30%)	-2년:2년 거치 일시상환 -3년: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5년 이내 균등분할상 환
대출금리(변동)	은행별 신용에 따른 차등 금 리	자금별 별도 금리 적용 (분기별 변동금리)	은행별 신용에 따른 차등 금 리	은행별 신용에 따른 차등 금리(변동금리)
보증료	0.7%~1.5% (평가등급)	0.7%~1.5% (평가등급)	1%(고정요율)	1% 이내
대상은행	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단, 신협, 새마을금고는 충 남소재 점포에 한함)	시중은행, 신협, 새마을 금고	시중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단, 신협, 새마을금고는 충남 소재 점포에 한함)	농협, 수협, 산림조 합, 새마을금고, 신 협, 상호저축은행
특징	충청남도 2.0% 이자보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12시간 인터넷 교육이 수)	기초지자체 별 운용방법 상이	저신용·저소득 사업 자 대상
지원조건	신용평가시스템 평가한도 내	신용평가시스템 평가한 도 내	신용평가시스템 평가한도 내	서민대출 협약보증 심사기준 적용

자료: 충남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2) 충남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 지원제도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사회적기업을 위한 특별보증하고 있다. 운영목적은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보증지원을 통해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제공 및 일자리 창출 확대’에 있다. 지원대상은 인증사회적기업 중 영리사회적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 비영리사회적기업인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의 사회적기업으로 제한되어 있다. 보증한도는 기업당 4억원 이내, 보증비율은 영리사회적기업 90%, 비영리사회적기업 100%이다. 보증기간은 5년 이내, 상환방법은 5년분할 상환(1년 거치)으로, 영리사회적기업은 4.6%, 비영리사회적기업은 3.7%이다.

3) 지역재단(천안풀뿌리희망재단)의 현황과 사업

(1) 지역재단의 소개

지역재단(Community foundation)은 모금전문기관으로, 지역사회의 변화와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기금을 사용하고, 지역이슈 공론화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기관이다(서울시복지재단, 2014).

지역재단은 면세, 비영리, 자치, 대중적 지원, 비분과적인 특징을 가진 자선기관으로, 수많은 기부자들의 기부금으로 영속적인 기금을 설치하는 것이 장기적 목적이고, 특정지역내의 거주하는 주민들의 광범한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다(미국 지역재단협의회).

지역재단이 가지는 주요한 특징은 기부금은 재단의 사명에 따라 필요한 단체에 배분하여야 한다는 점과, 지역사회에 중요한 이슈에 대해 문제를 해결하고 대안을 개발하는 촉매자(catalayst), 촉진자(facilitator)로서의 역할을 해야한다는 점에 있다(세계지역재단협의회, UKC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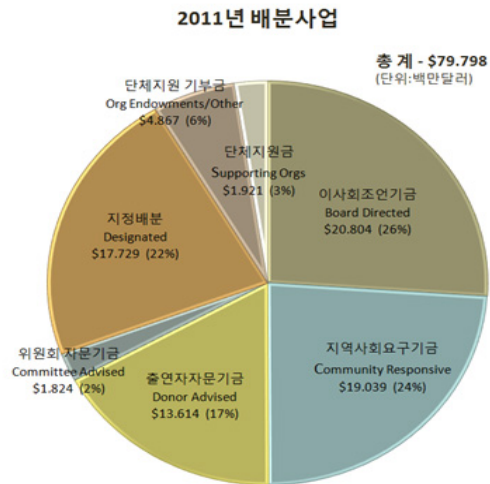
(2) 지역재단의 시작과 현황

세계최초의 지역재단은 클리블랜드 재단(Cleveland Foundation)으로서 프레드릭 고프(Frederick H. Goff)가 1914년 설립하였다. 고프는 지역내 자선가들의 돈을 모아 재단을 만들어 지역사회와 주민의 정신적·도덕적·물질적 삶의 향상을 추구하였다.

현재 클리블랜드재단은 총자산이 18억 달러, 총 기부금 8천만달러 규모의 단체로 성장하였다. 본래의 지역의 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지원역할에서 벗어나, 자체 사회공익프로그램도 시작하였다. 특히 지역의 수요파악을 중점을 두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지역재생프로젝트(Greater University Circle Initiative)가 대표적이다.

클리블랜드 재단의 기부금조성은 시대별로 특징적인 변화가 나타나는데, 초기에는 은행지원 기금에서 출발하여, 1969년 세제혜택법 제정과 함께 출연자 조연기금, 1997년 이후 이사회 기금조성, 상업적 기금 등이 조성된다. 기부금경쟁이 심해지자 기부금 선택기금 등의 새로운 전략을 세운다. 조성과 배분은 크게 3가지로 나뉜다. ①이사회주도기금은 중장기 사업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고, ②지역사회 요구에 대응하는 지역사회 기반 기금, ③ 출연자들의 조언을 받아 시행하는 출연자선택 기금이다. 2011년 배분은 <그림-16>과 같다.

[그림 14] 클리블랜드재단의 기금 배분사업(2011 년)



자료: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지역재단에 있어서 이처럼 클리블랜드 재단의 영향은 매우 커, 클리블랜드 재단이 설립된 5년내 시카고, 보스턴, 밀워크 등 재단이 설립되었고, 2011년 현재 미국 734개 지역재단 활동하며, 2011년 기준 지역재단이 지원한 금액은 42억달러(약 4조 7,700억원)으로 전체기부액(459억달러)의 약 9%수준에 이른다(미국 재단센터Foundation Center의 보고서). 전 세계적으로도 확산추세에 있다. 2000년 905개소에서 2010년 1,680개소로 증가했고, 특히 독일의 성장세가 현저하다. 독일의 경우, 2000년 10개소에서 2010년 240개소로 증가하였다. 금후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지역재단 설립 확대가 나타날 것을 예상하고 있다.

(3)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의 설립과 현황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은 2006년 8월에 설립한 국내 최초의 지역(사회)재단²⁶⁾이다. 그 시작은 1990년대 후반부터 재정적 어려움을 겪었던 천안지역 시민단체들이 지역재단의 필요성을 고민하면서부터이다. 그러던 중 2005년 천안에서 활동하는 윤혜란 복지활동가가 막사이사이상 수상금 5만 달러를 기탁하면서 재단설립의 발판이 마련된다. 2006년 600명의 시민이 기부한 3억4천만을 기금으로 재단이 설립되었다.

26) 천안풀뿌리희망재단 연간보고서에서는 지역재단(communitry foundation)을 지역사회재단으로 표현한다.

2007년 3월 충청남도 공익재단법인으로 법인설립 허가를 받았다.

2015년 천안풀뿌리희망재단 연간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의 수입은 기부금 236백만원(72%) 등 328백만원의 수입이 있다. 기부금의 세부내역은 행사기부금 83백만원(35%), 정기기부 64백만원(27%), 비정기기부 51백만원(22%), 기금기부 37백만원(16%)로 구성되어 있다. 총지출 중 77백만원(24%)이 배분사업, 즉 지역활동지원 사업이다. 주요사업을 보면, ① 신규공익단체 조직지원(38백만원, 49%), ②공익활동가 역량강화 지원(18%, 13백만원), ③ 미래세대 희망교육 지원(11백만원, 14%), ④ 지구촌 나눔지원(7백만원, 10%), ⑤ 결식아동조식 지원(7백만원, 9%) 등이다.

세부사업내용을 살펴보면, ① 신규공익단체 조직지원은 새로운 지역사업에 대한 인큐베이팅사업으로, 청소년센터센터 설립지원(천안 원도심 청소년센터), 아동그룹홈 설립지원, 청소년오케스트라 창단지원 등 지역문제 해결형 단체에 대한 지원으로 볼 수 있다. ② 공익활동 역량강화 지원은 매년 공익을 위해 일하는 활동가들이 선진지역 연수를 통한 역량강화하는 사업과 활동가들에게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활동가가족여행 프로젝트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천안풀뿌리희망재단의 활동은 지역사회의 성공적인 모금가능성과 지역밀착형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의 지역재단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역재단의 롤모델이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서울시복지재단, 2014). 이러한 성공사례는 지역문제를 중앙정부나 지자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논리에서 벗어나 지역재단을 중심으로 지역의 문제를 지역이 자발적으로 해결해 보자는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다. 부천희망재단(2011년 3월)을 비롯하여, 성남이로운재단(2012년 4월), 안산희망재단(2013년 5월) 등 전국적으로 지역재단이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제2절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수요 실태조사

1. 조사설계

본 연구목적인 충청남도의 사회적금융 지원체계와 실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금융 수요자들의 현황파악과 실제 어떠한 종류와 규모의 재원이 필요한지의 수요파악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실제 충남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금융수요를 파악하고 이와 함께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을 묻고자 한다.

본 조사를 위해 설문은 다음과 같은 주요 내용을 포함한다.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일반현황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금조달 현황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금 수요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금융 인식

위와 같은 목적과 내용을 바탕으로 본 설문조사는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금조달의 현황과 수요를 파악하여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설문내용은 다음 [표-21]과 같다.

[표 20] 설문조사 주요내용

분 류	조사 내용
일반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법인형태 -고용정보 및 매출정보 -기업의 업무공간과 업종형태
자금조달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외부자금조달방법 파악 -자금조달의 규모와 주요 용도 -조달자금의 상환기간 -자금조달시 겪는 어려움과 환경 변화
자금의 수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금조달의 필요성 -선호하는 자금조달 방법과 규모 -조달한 자금의 용도와 필요 시기 -자금의 상환기간 -자금조달 시 물적담보 제공여부 및 가능 담보액 -자금조달 시 이자상환 부담액과 인적보증 의견
사회적금융 인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앙(지방)정부 지원제도 인지도 -금융기관의 지원제도 및 인식 -민간기관의 관련제도 및 인식

이러한 조사를 위한 조사대상은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직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특히 충남의 인증(예비)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중에서 판단표본추출을 통해 조사대상을 구성하였다.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 중에서 협동조합은 실제 활동여부를 비롯하여 명확한 실태파악의 어려움이 있으며 사회적가치와 일반 영리추구의 폭 넓은 스펙트럼에 존재한다. 그리고 협동조합은 조직형태에 속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회적금융에 대한 주요내용에 대한 대상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이러한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 대해 충남의 각 지역별, 조직형태별로 구분하였고 이러한 기준에 의해 실제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조직들을 98개로 선별하였다. 이러한 조사대상의 판단표본추출에 있어서 「2015 마을기업 실태조사」, 「2015 사회적기업 실태조사」의 자료를 참조하였다. 그리고 조사방법은 연구자 및 관련된 중간지원조직의 협조를 얻어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형태로 실시하였다.

연구의 실현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한 다각적인 정보파악과 종합의 과정이 필요하나, 충청남도에서 관련된 선행연구가 미흡하기 때문에 질적 방법이 적합한 방법론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설문조사와 함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FGI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는데, 이는 새로운 연구주제를 위한 탐색적 연구(Exploratory Research)에 적절하며, 이를 통해 연구주체에 대한 더욱 정교한 가설과 구체적 질문들을 만들어 낼 수 있고, 양적데이터의 한계를 보완하는 심층적 자료들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업들의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표-22>와 같다. 우선 조사대상 기업들의 법인형태를 보면 영농조합법인이 32.7%로 가장 많으며 그 다음으로 주식회사가 27.7%를 보이고 있다. 협동조합은 전체의 18.4%를 보이고 있다. 기업의 설립연도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되고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이 시행된 시점과 맞물려 2006년 이후에 대부분 설립된 것을 알 수 있다. 조사대상의 기업들의 전체 연간매출규모를 살펴보면 1억에서 5억원 사이 기업들이 32곳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는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직원규모도 6명에서 10명 사이의 영세한 규모가 많이 분포하고 있다.

[표 21] 설문 응답기업의 특성

구분	내용	빈도	비율
기업형태	사회적기업(인증, 예비)	59	60.2
	마을기업(인증)	39	39.8
법인형태	주식회사	27	27.6
	사단법인	8	8.2
	협동조합	18	18.4
	영농조합법인	32	32.7
	농업회사법인	8	8.2
	비영리법인	2	2.0
	기타	3	3.1
설립연도	2001년 이전	6	6.1
	2001년-2005년	7	7.1
	2006년-2010년	19	19.4
	2011년 이후	66	67.3
지정연도	2010년 이전	13	13.3
	2011년	11	11.2
	2012년	11	11.2
	2013년	27	28.5
	2014년	27	28.5
	2015년 이후	9	9.2
매출규모	3천만원미만	12	12.2
	3천만원-5천만원	17	17.3
	5천만원-1억원	21	21.4
	1억원-5억원	32	32.6
	5억원-10억원	13	13.3
	10억원 이상	3	3.1
직원규모	5명 이하	32	32.6
	6인-10인	52	53.1
	10인-30인	11	11.2
	30인 이상	3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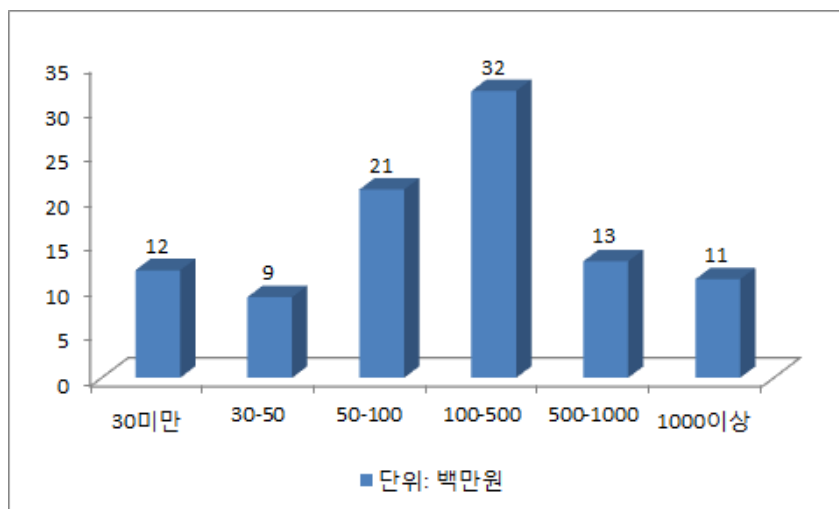
2. 사회적금융 인식실태 조사결과

1) 일반 현황

본 설문조사는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사회적금융의 수요를 조사하고자 한다. 우선 조사를 실시한 98개 기업의 일반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내용과 같다.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의 조직형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98개의 기업중에서 영농조합법인이 32개로 가장 많았으며 주식회사가 27개, 협동조합형태가 18개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설문조사를 실시한 기업들의 연평균 매출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체의 33%정도가 1억~5억 사이의 연평균 매출액 규모를 보이고 있고 다음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가 분포해 있다. 대부분의 기업들이 매출 10억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인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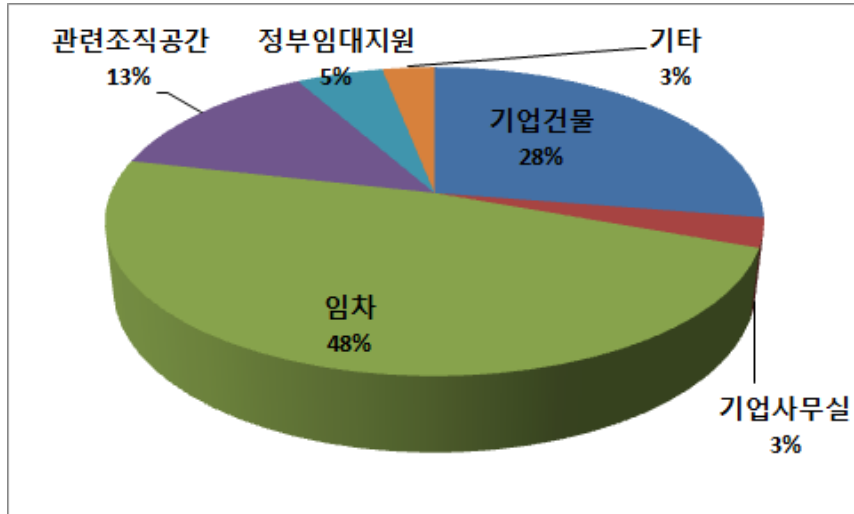
[그림 15] 조사대상기업들의 연평균 매출규모



- 다음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사무공간 형태에 대해 조사하였다. 기업비용 중에서 공간임대 관련 비용의 비중이 상당하다는 점에 있어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사회적경제기업들도 사무실 임차가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

되어 공간임대료로 인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6] 조사대상의 사무공간 형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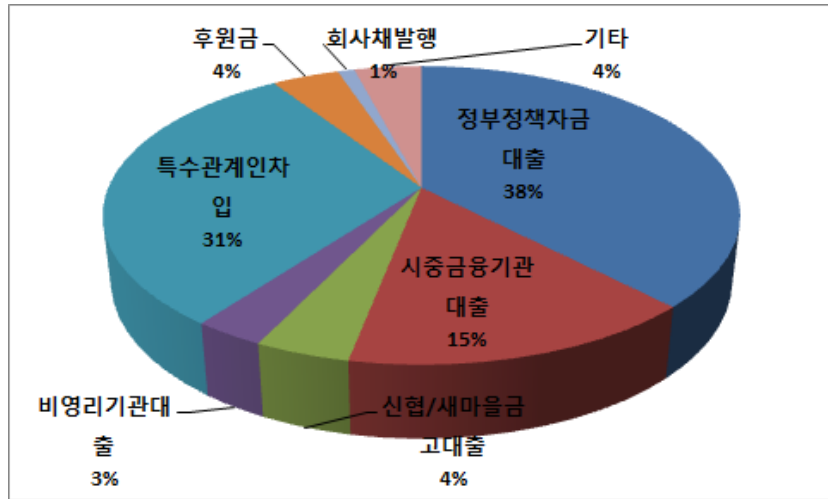


2) 조사 기업들의 자금조달 현황

다음으로는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실제 자금 조달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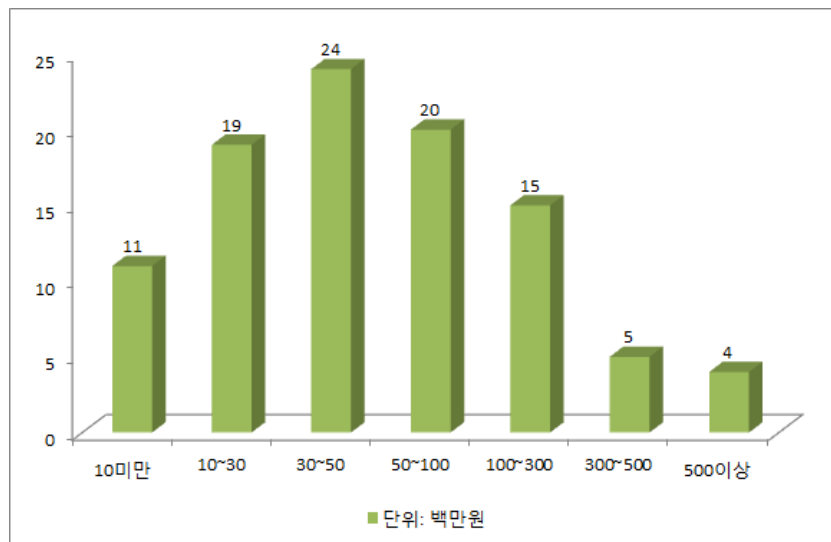
- 우선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38%정도는 정부의 관련 정책자금을 대출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표에 의한 특수관계인 차입이 31%로 나타나 시중금융기관대출(15%)보다 배 이상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에 비영리기관이나 신탁, 새마을금고로부터 대출은 3-4%로 매우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정부정책자금을 대신할 새로운 대안으로 사회적금융이 매우 절실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7] 조사대상의 자금조달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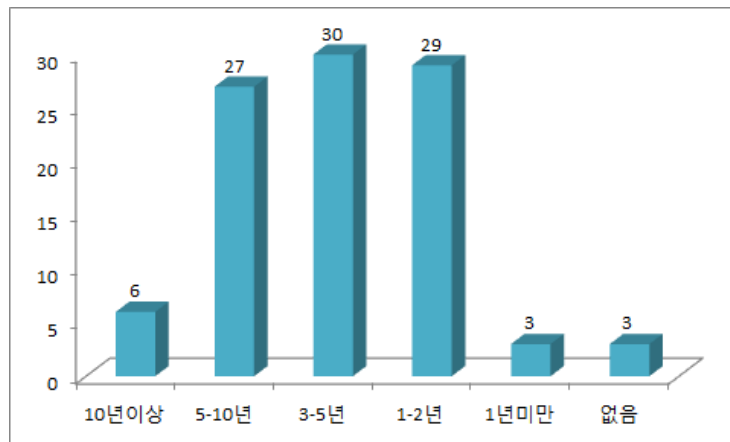
- 다음으로 조사대상 기업들에 대한 자금조달 규모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대부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규모는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 비교적 소액의 재원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반면에 3억원 이상의 자금을 조달하는 기업도 9곳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그림 18] 조사대상 기업들의 자금조달 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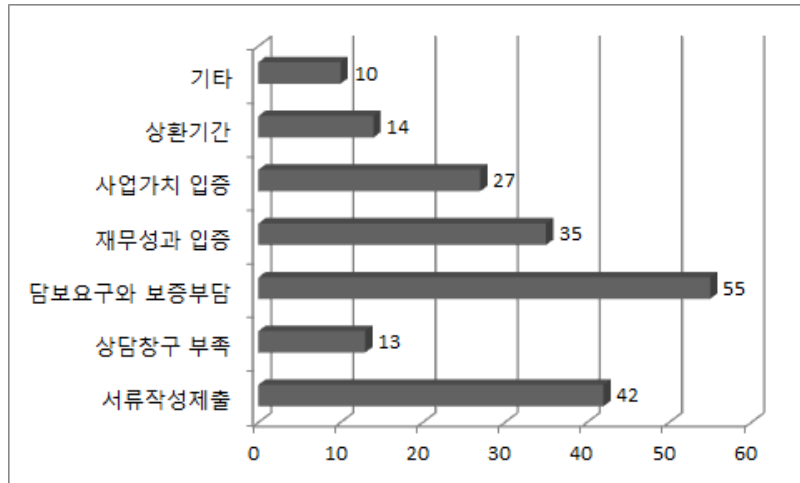
- 이러한 기업들의 운영자금은 주로 어떠한 용도로 활용되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자금(62%)로 활용되며 시설설비 구축을 위한 설비자금으로 30%정도 활용하며 나머지 8%는 사업개발비로 활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건비와 같은 운영자금의 활용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는 대출 등으로 마련한 자금을 상환하는 기간은 보통 얼마나 소요되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출 등 상환자금이 없는 3곳의 기업을 제외한 95개 기업들의 응답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 기업의 상환기간은 1년이상에서 10년 미만으로 자금을 상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9] 조사대상의 자금상환기간



- 이와 함께 대출을 받는 등 자금을 조달하기 위한 행위에 있어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이나 어려움에 대해 조사하였다. 많은 기업들에서 제시하는 애로사항은 대출에 있어서 담보를 요구하는 것이며 보증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실제 물적담보제공이 취약한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있어서 이를 고려한 대안적 금융제도가 요구된다고 본다. 다음은 대출행위나 자금을 지원받기 위한 다양한 서류제출 등의 행정절차에 대해서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심사에 있어서 재무성과를 입증해야 함은 사회적성과나 가치를 함께 추구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있어서 매우 불리한 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20] 조사대상의 자금조달의 어려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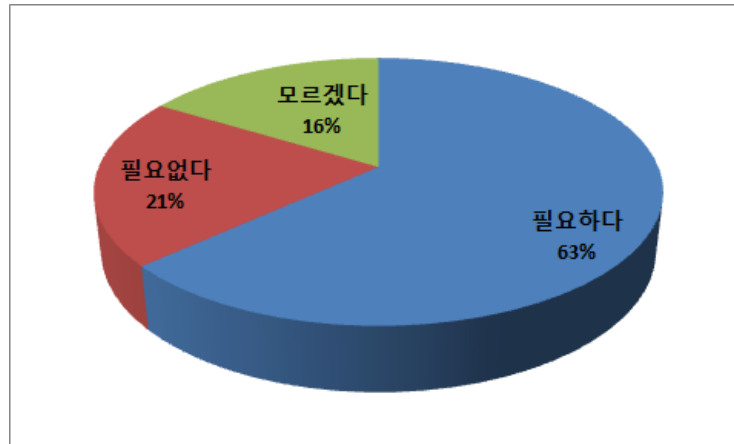


- 나아가 전체적으로 전년도와 비교하여 외부 자금조달의 환경에 대한 변화여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좋아졌다는 대답은 10%에 불과하였고 변화가 없다는 응답이 78%로 대부분을 차지하여 자금조달의 환경은 충남에서 변화 없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자금조달 환경이 악화된 이유는 대출 가능금액이 축소되거나 금리가 높아진다는 이유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 반면에 자금조달 환경이 좋아졌다는 응답의 이유는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조달처가 과거에 비해 확장되었고 대출절차가 조금은 간편해졌다는 의견도 있다.

3) 자금수요인식의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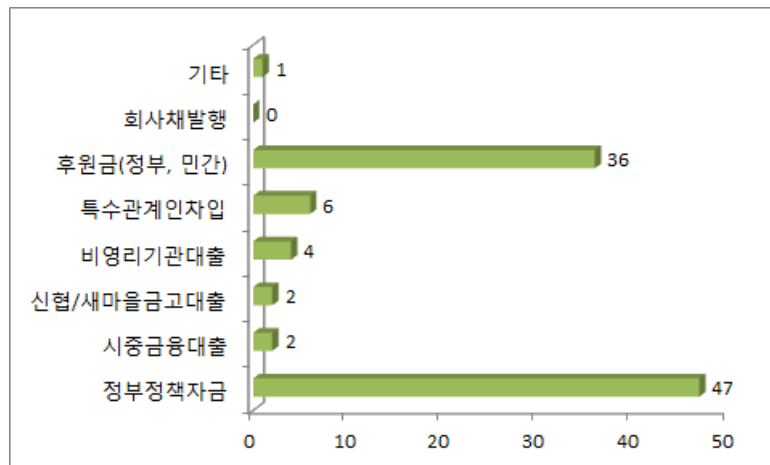
- 다음으로는 충남에서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조달이 실제 어떠한 수요를 내재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자금의 형태와 기간, 방법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러한 자금의 수요조사는 현장에서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요구하는 사회적기금과 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들을 보여줄 수 있다.
- 우선 실제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이 외부로부터 자금의 수요가 필요한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 필요하다는 응답이 6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지만 필요없다(21%), 모르겠다(16%)의 응답도 존재하여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현 상황에 따라 금융지원의 차별적 접근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그림 21] 조사대상의 외부자금조달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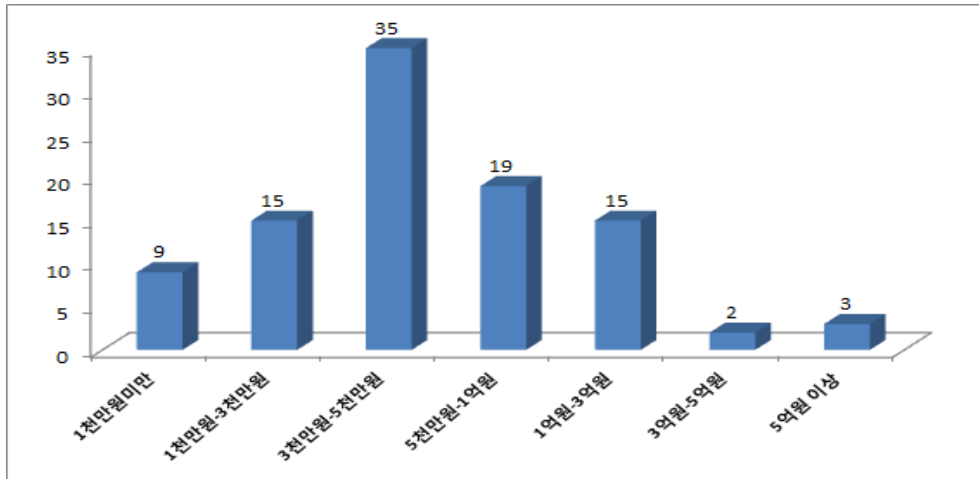
- 그리고 조사대상들이 선호하는 자금조달의 방식들에 대해 질문하였다. 사회적경제 영역이 정부의 제도적 틀 안에서 성장하여 정부의 정책자금지원(47)이나 후원금(36)에 주로 의존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2] 조사대상의 선호하는 자금조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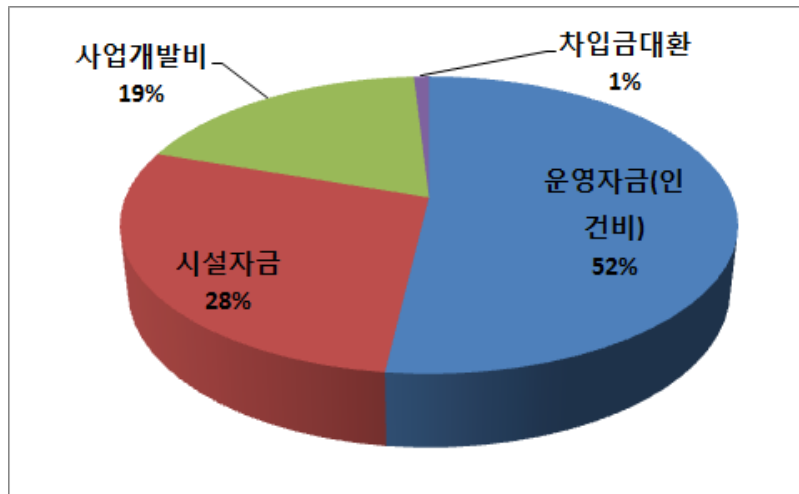
- 이와 함께 자금조달에 있어서 조사대상들이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규모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부분 3천만원에서 5천만원 사이의 자금을 조달하려는 수요가 있으며 다음으로 5천만원에서 1억원 사이로 대부분 소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3] 조사대상의 자금조달규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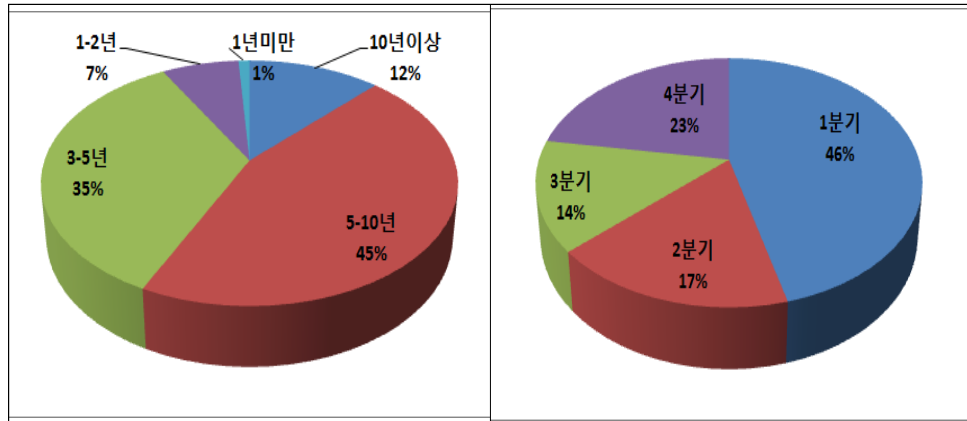
- 그리고 충남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자금조달 용도에 있어서는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자금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시설자금과 사업개발비가 필요하다고 나타났다. 조사대상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인건비의 운영자금이 시급한 상태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4] 조사대상의 조달자금 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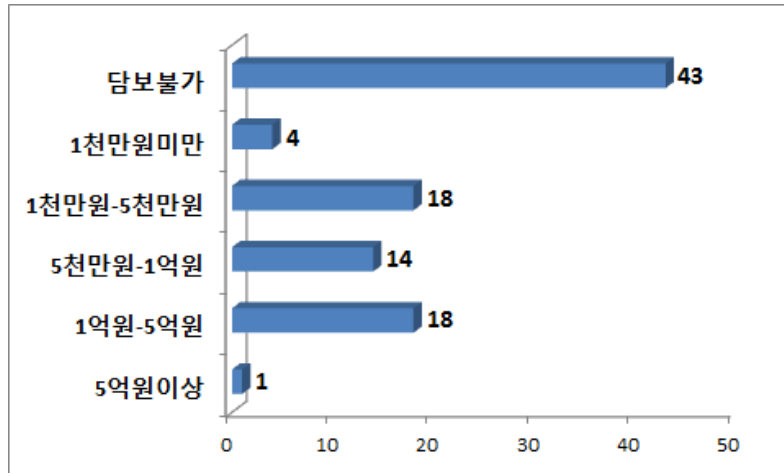
- 이와 함께 조달자금의 상환기간은 3년에서 5년(35%), 5년에서 10년(45%) 사이와 10년이상도 12%정도로, 대부분이 중장기간의 대출기간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함께 대출을 위한 자금이 가장 필요한 분기는 대부분 한해의 사업이 시작하는 1분기에 가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5] 조사대상의 자금상환기간과 자금필요분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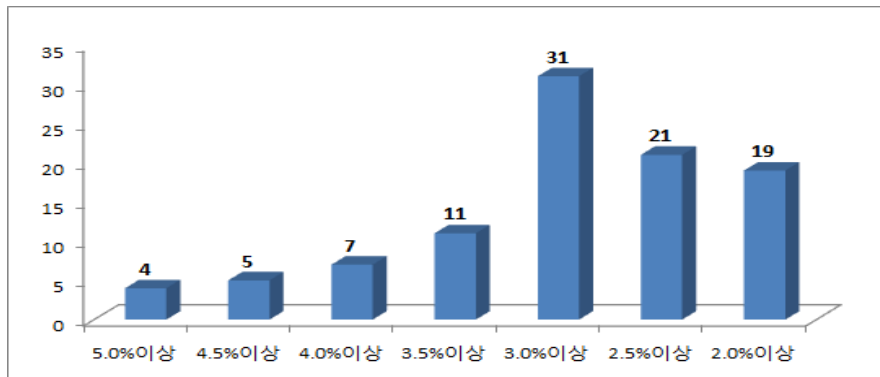
- 그리고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금조달 및 대출에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이 물적담보의 부분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물적 담보 여부가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느 정도의 금액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우선 물적 담보는 절반이상이 불가능하고 가능한 곳은 10%에 지나지 않아 실제 담보가능여부가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담보가 가능 기업들에 있어서는 1억-5억 사이도 18여 곳이나 있는 만큼 편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6] 조사대상 물적담보 제공 여부와 수준



- 대출한 자금에 있어서 상황에 부담이 되는 이자의 수준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2016년 현재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25%이며 일반 시중은행의 중소기업 신용대출 금리는 5% 수준인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실제 대출을 요구함에 있어서 이자의 부담수준을 살펴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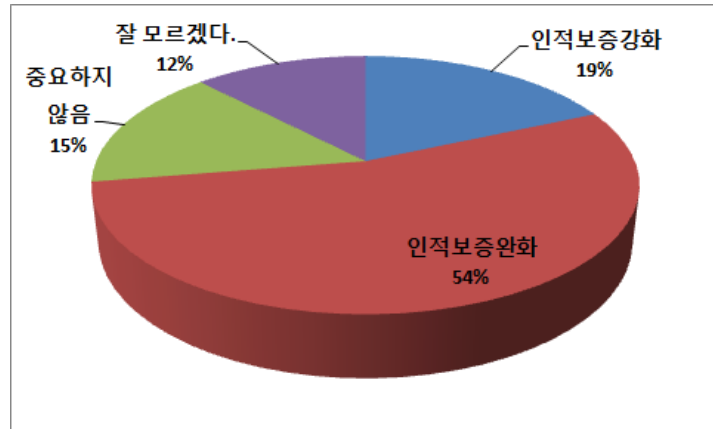
[그림 27] 조사대상 이자상환 부담금리



- 또한 대출과정에 있어서 물적 담보가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인적보증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인적보증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의견을 살펴보았다. 예상대로 인적보증완화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54%로 절반을 넘어섰지만, 반면에

인적보증제도가 대출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견해가 15%이고 오히려 인적보증을 강화해야 한다는 응답도 20%가까이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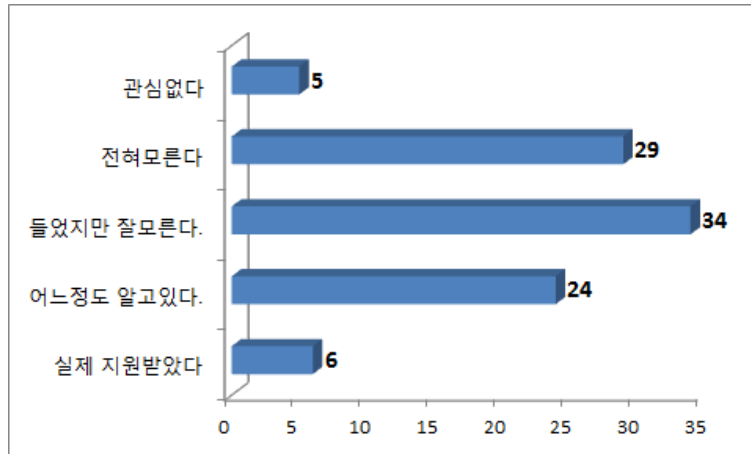
[그림 28] 조사대상의 인적보증제도의 의견



4)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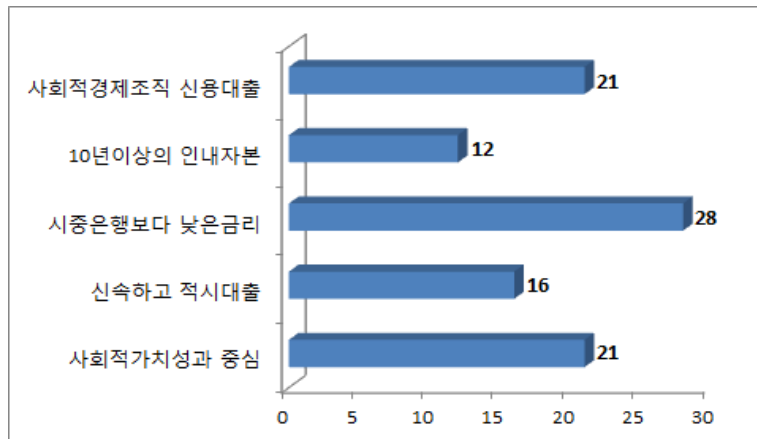
-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실제 사회적금융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우선 기업들에게 사회적금융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는데, 가장 많은 응답이 사회적금융에 대해 듣긴 했는데 무엇인지 잘 모른다(34%)였다. 그리고 다음으로 전혀 모른다가 29%로 보이고 있음에 따라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사회적금융에 대해 대체적으로 인식이 미흡한 상태라 볼 수 있다. 실제 잘 알고 있으며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는 응답은 6건에 머물렀다.

[그림 29] 조사대상의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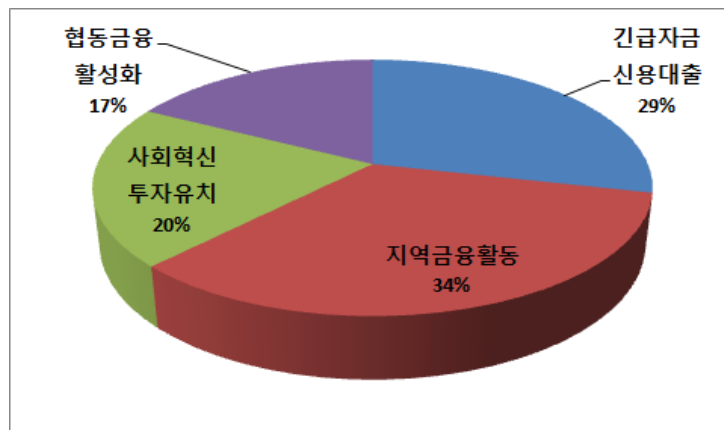
- 그리고 사회적금융에 대한 인식은 높지 않지만, 시중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사회적금융이 차이가 있다면 어떠한 부분에 있어서 사회적금융의 특수성을 가져야 하는지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조사에 의하면 사회적금융은 일반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를 가장 많이 요구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대출의 기준을 사회적 가치성과중심으로 시행하거나 다른 기업보다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대출을 시행하는 특징적 요인을 가져야 한다고 보고 있다.

[그림 30] 조사대상의 사회적금융 특징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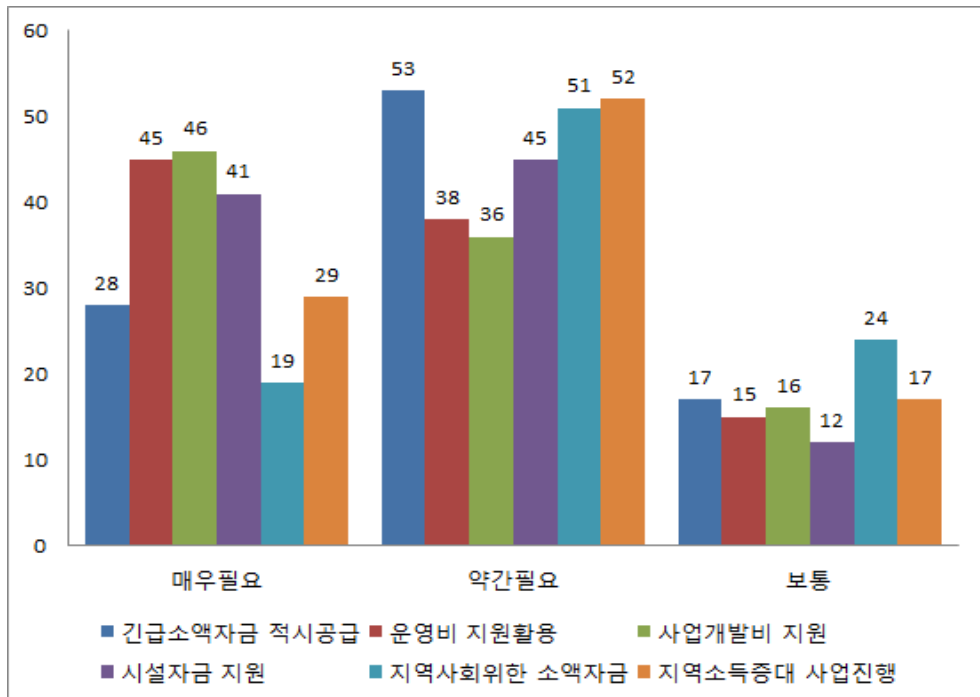
- 이러한 사회적금융이 시중금융기관과 다른 특징과 함께 가장 우선시해야할 목표가 무엇인지에 대해 응답을 분석하였다. 우선 충남에서 사회적금융은 지역공동체와 주민의 문제해결을 위한 지역금융활동(34곳)이 가장 우선적인 활동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들에 대한 긴급자금 신용대출(29곳)이 중요한 목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조사대상의 사회적금융의 최우선 목적활동



- 다음으로는 조사자들에게 사회적금융이 수행하는 각각의 주요한 역할과 기금의 활용에 있어서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이론적 논의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회적금융의 역할과 기금활용은 6가지로 구분된다(①사회적경제조직 긴급 소액자금의 적시공급, ②사회적경제조직 인건비 등 운영비의 지원활용, ③사회적경제조직의 사업개발비 지원 활용, ④사회적경제조직의 시설자금(설비, 임차료 등) 지원, ⑤지역사회 문제해결을 위한 긴급 소액자금 대출, ⑥지역 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의 사업 진행).
- 조사결과 6개의 모든 항목이 보통 이상으로 필요한 역할임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각 항목중에서 그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늠할 수 있는데, 우선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과 운영비지원, 시설자금지원이 우선적인 사회적금융의 역할로 보인다. 다음으로 약간 필요하다는 응답이 많은 역할들은 긴급소액자금의 적시공급, 지역사회를 위한 소액자금과 지역소득증대 사업진행의 요인들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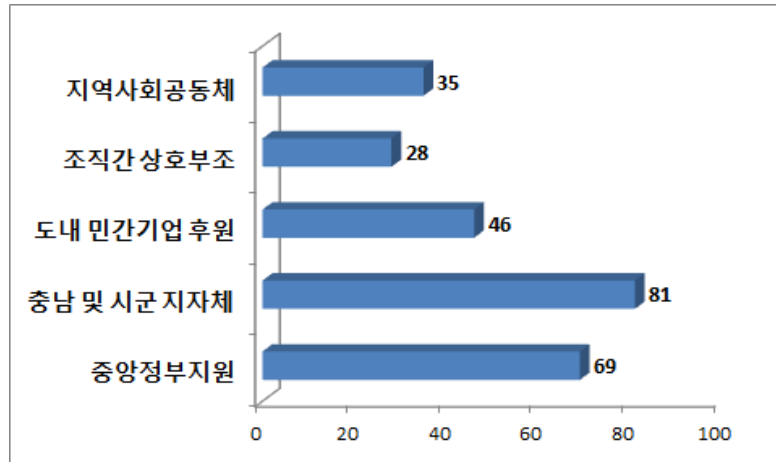
[그림 32] 조사대상의 사회적금융의 역할과 기금활용의 의견



5) 사회적금융의 운영과 시스템 인식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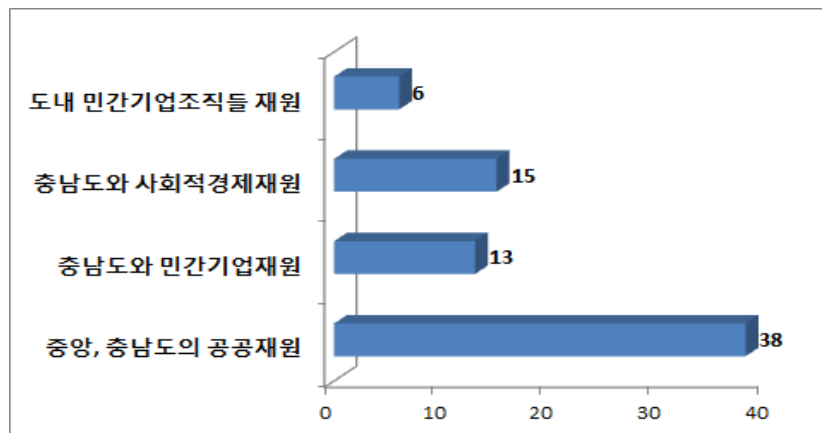
- 이번에는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에게 사회적금융의 재원마련이나 운영의 시스템에 대한 의견을 조사하였다. 그중에서 충남의 사회적금융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는 중복으로 선택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우선 충청남도 및 시군 지자체(81건)가 주도적으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중앙정부지원(69건)에 의한 재원으로 나타나 공공자금에 의한 사회적금융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나타났다. 공공자금을 제외하고는 도내 민간기업들의 후원(46건)으로 마련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3] 사회적금융의 가장 효과적인 자원마련 응답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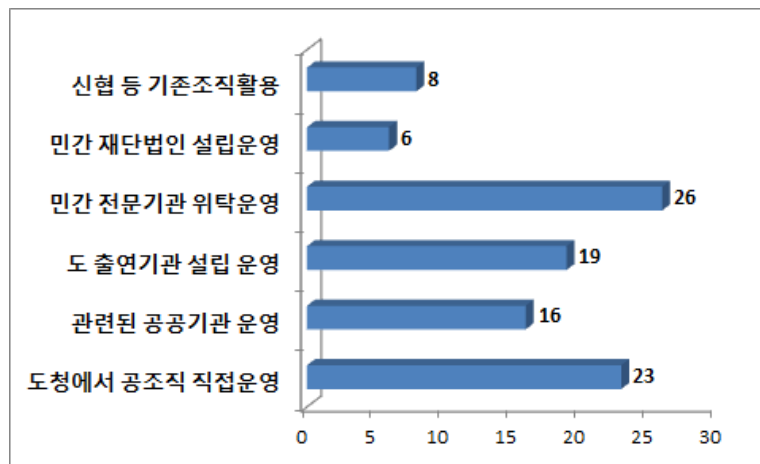
- 이와 함께 사회적경제기업들을 대상으로 충남의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금융 재원을 마련한다면 어떠한 주체를 조합할 것인지 선택하도록 하였다. 다양한 사회적금융의 자원마련에 대한 의견을 취합한 결과 위의 내용처럼 중앙과 충청남도의 공공재원 마련을 가장 많이 선택하였으며 충청남도과 도내 민간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원조합이 다음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4] 충남 사회적금융 자원마련 위한 이상적인 방법 조합



- 마지막으로 충남에서 사회적금융을 지원하는 조직이 구축된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응답을 분석하였다.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사회적금융 지원조직은 이와 관련된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26곳)과 도청에서 공공조직이 직접운영(23곳) 하는 형태를 선택하였다. 다음으로는 도 출연기관이나 관련 공공기관 운영을 선택하였고 신용협동조합 등 기존 사회적금융조직을 활용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8곳에 그쳤다.

[그림 35] 사회적금융 지원조직의 운영 형태 응답결과



3. 실태조사 분석소결

본 조사는 충청남도에 사회적금융의 도입과 정책의 설계를 위한 기초자료로 실시한 자금조달에 관한 실태 및 수요조사이다. 조사대상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인증, 예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지원을 받은 기업들로 한정하여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어느 정도 매출이나 고용인원 및 자금조달에 대한 규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충청남도에서 어느정도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에 관한 인식 및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첫째, 응답기업들은 사회적금융에 있어서 정부자금과 같은 공적재원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실제 자금조달 현황에서도 정부 정책자금을 가장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충남의 사회적금융 재원조달에 있어서도 중앙정부 및 충청남도의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2007년 이후 사회적경제의 제도화로 인한 다양한 정부 지원정책 실시와 수혜에 의한 인식의 영향과 금융 및 보험업에 대한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진출의 한계에 따른 활동의 공공 종속화의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활동과 사회적금융에서도 지나친 공공의 의존에 대한 비판이 존재하지만 사회적금융의 초기구축단계에서는 공공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금융을 운영하는 지원조직에 대해서는 민간의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있음에 따라 사회적금융에 있어서 실제 기금의 운용과 활용에 있어서 전문적인 민간조직에 의한 형태가 수요자의 시각에서 부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충청남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은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지역 사회에 가치있는 사회적 활동과 성과를 위한 금융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자금수요의 조사 결과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은 기업운영에 있어서 적시에 필요한 1억미만의 소액자금이 필요하며 특히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자금을 가장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자금수요조사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결과로 충남에서도 사회적경제기업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사회적금융이라면 사회적 가치성과 중심의 성격을 가져야 한다는 응답도 많은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사회적금융의 최우선 목적활동에 있어서 긴급자금대출보다 지역금융활동으로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아직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영세한 규모이지만 경제적 성과와 함께 사회적성과와 지역에 가치 있는 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자금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수요조사 결과를 종합해보면 3천만원-5천만원 정도의 소액자금을 5-10년 정도의 장기간 대출에 대해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소액자금에도 필요한 물적담보나 인적보증에 대한 어려움에 대해 부담을 갖고 있는 상태이다. 이는 규모가 영세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대출 상환기간이 비교적 길고 신용의 기준이 낮은 인내자본

(Patient Capital)과 같은 대안적 금융제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다양한 수요자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출과정에 있어서 복잡한 행정절차의 간소화 및 관련 지원과 함께 대출 및 지원과정에서 투명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대출의 보증이나 심사에 있어서 사회적경제기업들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사회적 성과나 가치의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영리기업처럼 이윤을 추구하는 경제활동에 전념하기보다 지역사회를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기업의 특성상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사회적 활동을 평가하여 지자체나 공동체 기업을 보증할 수 있는 제도가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기업들 및 지역 공동체와 함께 상호보증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이나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사회적활동을 다면적으로 심사하는 융자보증의 심사절차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사회적가치활동을 평가하고 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준거들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겠다.

제4장 충청남도 사회적금융 구축과 실행방안

제1절 충남 사회적금융 구축을 위한 선결과제

1. 공급자: ‘의지가 있는 자금’의 필요²⁷⁾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조달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에 중요한 요소이다. 이로 인해 국내외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쉽게 풀지 못하는 근본적 어려움이 있다. 그것은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지는 조직목적과 연관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적경제조직(주식회사포함)은 영리 극대화를 목적으로 한 조직이 아니다. 그러므로 기존의 ‘영리’를 기준으로 두는 심사평가로는 이를 판단할 수 없다.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지는, 그리고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회적 가치성’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금융조달의 중요한 이슈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지는 사회적 가치성을 평가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이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조직의 사회적 성과에 대한 투자수익률, 즉 비용대비 사회적 가치를 파악하는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라는 평가방법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했던 영국의 사회적기업들은 시행 4~5년 후 평가방법의 어려움을 표시하였고, 이후 사회적영향평가(Social Impact) 등 대안적인 평가방식을 제안한다. 그러나 그 역시도 평가방식의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즉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가치성결과를 수치적으로 나타내어 비교한다는 것은 완벽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회적가치에 대한 수치적 평가·비교하는 방법(정량평가)만이 아닌 정성적인 평가에 대한 중요성을 인정하는 전환적 사고가 필요하다. 물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성평가는 현재에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금융조달에 있어서 그 의미는 다르다. 금융조달은 자금공급자(투자자)의 대부자금에 대한 대가를 약속받는 계약과 같다. 그러므로 자금공급자는 더 많은 대가를 기대하고, 이러한 기대를

27) ‘의지가 있는 자금’은 이노우에 아리히코(井上有弘)의 意思があるお金라는 표현을 번역하여 사용하였음

충족할 만한 근거가 필요하며, 이런 측면에서 정성평가보다는 정량평가(담보 및 인적보증)의 확실성을 선호할 수 밖에 없다.

이와 같이 정성평가에 대한 전환적 사고는 단순한 문제가 아닌 자금공급자로서 위험성(risk)을 지는 일이다. 그러므로 자금공급자가 사회적 가치성과의 정성평가 방식을 인정하고 동의하기 위해서는 위험성을 넘어선 가치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 즉 ‘나의 예금(투자)은 단순히 이윤 획득만이 아닌 사회문제(환경, 복지, 지역 등)를 해결하는 데 쓰였으면 한다’는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지를 가진 자금공급자가 많아질수록 사회적금융의 성공과 성장가능성이 커진다. 그리고 의지를 가진 자금공급자가 적절하게 자신의 자금을 공급(투자)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로 사회적금융 구축의 시작이 된다.

2. 수요자: 자립의지와 사회적경제 원리에 대한 동의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정의가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사회적경제를 정의할 때 자본보다는 사람을 우선하는 경제, 또는 사익보다는 공익을,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호혜와 연대방식을 언급한다.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공유하고 동의하는 것은 사회적금융 구축에 있어 중요한 규범으로 작용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사회적금융 구축은 기존의 금융체계의 구축방안과 달리, 공급자의 가치에 대한 의지가 필수적이다. 여기에 더해 수요자(사회적경제조직) 역시 사회적경제와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동의와 의지가 없으면 사회적금융은 활성화 될 수 없다. 사회적경제의 당사자인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사회적 가치에 대한 동의와 의지필요를 논하는 것은 어딘가 맞지 않는 논리이지만, 실태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결과로서는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이 사회적경제의 원리에 대한 동의가 되었는지 의문을 품게 한다.

실태조사의 결과,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자금조달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경제조직의 영세성(매출1~5억원, 33%)은 일반적인 중소기업 대출기준(10억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시중은행의 대출을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따라 특수관계인(주로 대표)의 개인신용에 따른 차입(31%)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사회적금융의 필요

를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선호하는 조달방식으로 정책자금(47%), 후원금(36%)을 선택하여 높은 공공의존도를 보여주었던 반면,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신협 및 새마을금고 선호 2%)를 보여주지 않았다. 또한 사회적금융의 채원과 운영에 있어서도 높은 공공의존도를 보여주어, 과연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가치에 대해 동의하는가를 반문하게 된다.

그러나 실태조사에서 나타난 이러한 선호는 사회적경제조직들만의 문제가 아닌 정부정책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의 경우 인건비지원, 사업개발비지원 등 보조금형식의 지원이 존재한다. 이러한 보조금은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더욱 공공에 의존하게 하는 인식을 가지게 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물론 보조금이 모두 적절하지 않다고 규정지을 수 없고, 복지형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우 보조금지원은 사회적으로 적절하다고 인정받는다.

현 상황에서 사회적경제조직 보조금제도 재검토와 함께 사회적금융의 구축은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제고, 자조에 대한 노력, 연대의 필요성을 재정립하게 할 것이며, 정책자금과 보조금에만 의존하는 사회적경제조직이 아닌 건강한 사회적경제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는 하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지속성 : 위험(Risk)분산 시스템

금융은 수요와 공급을 매개하는 것이고, 사회적금융 역시 이를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사회적금융은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열위성)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공급방식)를 하고 있으며, 본 연구 역시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을 극복하기 위한 방식과 방법을 탐색하였다. 특히 사회적금융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는 중요한 이슈이다. 여기에서 말하는 지속성이란 금융 유통을 말하고, 금융이 유통되지 않으면 이는 정책적 실패라고 판단할 만 하다. - 즉 이용하지 않는 금융상품은 만들어 무엇하겠는가? - 연구를 통해 얻어진 사회적금융의 지속성의 열쇠(KEY)는 ‘누가 그리고 어떻게 위험(risk)을 안고, 감내할 것인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기업(조합)으로 영리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기업과는 다르다. 즉 이익을 내기 쉽지 않다. 그러므로 공공부문의 금융 이외의 사적부분의 금융은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을 꺼릴 수 밖에 없다. 그들에게는 공적 가치(사회문제 해결)에 대한 효용

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무리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다양한 금융조직과 금융상품을 만든다하더라도, 몇몇 혁신적인 사회적경제조직들은 이익을 낼 수 있겠지만, 금전적 이익에 기반한 시스템상에서는 원활한 작동과 확산을 기대할 수 없다.

그러므로 사회적금융은 투·융자시 잃을 수 있는 기회비용 또는 손실에 대한 보완 없이 작동할 수 없는 시스템이며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누가 그리고 어떻게 위험을 안고, 감내할 것인가?’를 동시에 고민하지 않으면 사회적금융의 지속성과 확장성은 담보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국내의 공공기금을 활용한 사회적금융의 경우, 만약에 있을 수 있는 투자(융자)손실에 대한 부담을 지지 않고, 중개기관(민간 등)이 책임을 지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사회적금융의 목적인 충분한 자금공급은 쉽지 않은 정책목표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유는 중개기관 등이 확실한 투자처에만 투(융)자를 실시하거나, 담보 등 까다로운 심사절차 등을 실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제2절 충남 사회적금융의 구축방향

1. 공급측면

1) ‘의지가 있는 자금’의 유입경로 구축

충남의 사회적금융 구축을 위해서는 ‘의지가 있는 자금’의 존재가 필요하다. ‘의지가 있는 자금’은 개인 또는 법인 등으로부터이며, 이는 단순 기부금과는 다른 성격이 다른 자금이다. 이러한 자금은 투자손실 등을 상정해 볼 수 있지만, 최소 원금이 보장되고 적지만 이자 또는 배당이 필요하다²⁸⁾. 이러한 자금이 유입되기 위해서는 믿고 들어올 수 있는 ‘규모’와 ‘보장성’이 필요한데, 이 때 사회적금융에 대한 지원 의지가 필수적이다. 구체적으로는 지자체로부터의 공급자금이 된다. 이 공급자금은 기금의 형태도 가능하며 매칭자금의 형태도 가능하다. 기반이 되는 공급자금은 단순히 사회적금융의 ‘규모 확대’만이 아니라 지자체의 지원 의지로 임혀져, 충남도의 도민, 기업 등에 사회적금융에 대한 지원 의지가 있음을 보여주는 정책적 시그널이 된다.

그러나 충남도의 자금은 가능한 어느정도 손실을 감내할 수 있는 자금으로 역할을 하여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투자는 언급한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속성상 이익창출 가능성이 낮고, 사회적가치 창출은 높다(전문가에 따르면 10% 전후). 초기단계에서는 충남도의 자금은 이러한 손실에 대한 너그러운 자금이 되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위험부담을 지지 않으면, ‘의지가 있는 자금’은 융·투자를 주저하게 되어 결국에는 사회적금융은 공공기금의 형태를 벗어날 수 없다.

2) 사회적금융 공급자 구축

‘의지가 있는 자금’들을 운영할 공급자로서 사회적금융기관의 발굴이 필요하다. 현재 충남에는 정책자금의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금융상품은 전무한 실정이다.

28) 영미 등에서는 ‘의지가 있는 자금’의 금융수익(이자 및 투자 등)을 위한 제도적 장치(세제혜택)가 존재하며, 이는 지자체 차원이 아닌 중앙정부 및 국가적 차원의 지원필요가 있음. 이 부분에 대한 상세는 후술

‘의지가 있는 자금’의 충남도 및 개인, 기업 등 법인이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금융 상품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사회적금융기관의 발굴과 함께 다양한 상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적금융기관으로 활동할 수 있는 주체로서, 우선 신협·새마을금고와 같은 금융협동조합(상호금융)을 들 수 있다. 이들 기관은 명시적으로 지역과 조합원의 이익을 위한 지역금융조합으로 현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지역의 사회적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는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을 하는 것은 그들이 추진해야 할 주요한 업무이기도 하다. 이러한 금융활동은 단지 금융협동조합으로서 해야 할 의무로 작용하는 것이 아닌 지역공헌차원에서의 이미지개선, 그리고 마케팅에 큰 효과를 가진다. 두 번째로는 민간자조적 금융이다.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필요성 또는 금융을 통한 사회적문제해결을 고민하는 시민, 사회적경제인들이 구성할 수 있다. 다양한 금융형태를 상정할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4가지 형태를 상정할 수 있다. ①사회적경제은행(융자), ②시민펀드(투자), ③ 소셜렌딩형(융투자), ④클라우드펀딩형을 들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공제조합(기금)이다. 사회적경제조직(또는 종사자)간 일정한 목적(긴급자금 대출 등)을 위해 조합(기금)을 결성하는 것으로, 사회적금융으로 역할을 할 수 있다.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중앙협의회에서 사회적기업공제기금을 조성하여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한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기금은 사회적기업이 납부한 공제부금, 한국수출입은행 출연금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네 번째로는 중간지원조직이다.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경영컨설팅 등을 동시에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서울시의 경우 (재)한국사회투자를 통해 연계투자 및 협력사업을 하고 있다.

2. 수요측면

1) 지역기반형 평가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조직의 금융조달에 있어서 기존의 ‘영리’를 기준으로 두는 심사평가로는 사회적경제조직이 가지는, 그리고 목적으로 두고 있는 ‘사회적 가치성’을 평가할 수 없으며,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금융조달의 중요한 이슈로 작용한다. 이러한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기 위하여 SROI(Social Return On Investment), 사회적영

향평가(Social Impact) 등의 기법들이 소개되었으나, 사회적경제조직이 만들어 내는 ‘다양한’ 가치성과를 수치적으로 비교하기에는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었다. 이러한 수치적 평가제도 보다는 정성적인 평가방법의 필요가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정성적인 평가방법으로 지역기반으로 한 심사위원회제도를 주목할 만하다.

교토현의 긴기노동금고(近畿労働金庫)는 일본의 노동금고로는 처음으로 2000년 NPO용자제도를 시작하였다²⁹⁾. 또한 긴기노동금고는 활동기간이 적은(2년 이내) NPO법인에 대해서도 교토노동자복지협회의 예금을 기반으로 포괄적보증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러한 NPO법인에 용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시민운동(NPO활동 또는 사회적경제활동) 중간지원조직인 교토NPO센터에 설치된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사전 공익성심사를 통과하도록 하였다. 긴기노동금고는 2년 이내의 NPO법인에 대해 운전자금, 설비자금, 초기비용 등 5천만원 한도내 용자를 해준다. 2013년말 현재 48건, 약 20억원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심사제도를 통해 금융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적절한 자금대출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융투자를 지역사회와 공유·협력함으로써 지역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금융수요에 적절하게 대처함은 물론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마케팅 효과도 얻어낼 수 있다.

2) 지역기반형 보증시스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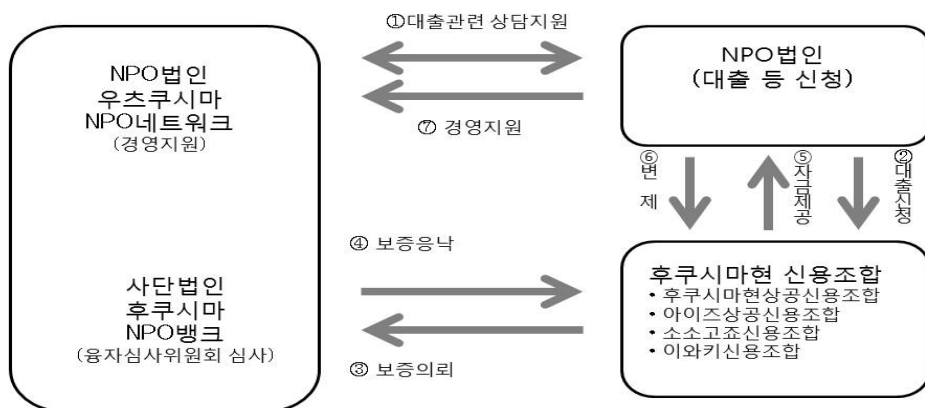
신용보증제도는 ①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초래하는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 이를 해소하기 위한 ②담보요구, ③거래비용수반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구축된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신용보증제도를 통해 중소기업 등의 신용위험손실을 국가가 흡수하여 금융기관의 안정성을 유지하며 일조하였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용보증제도는 고비용구조로, 신용보증재단의 대위변제율은 5.48%이다. 이는 일본 2.25%, 대만의 5.23% 보다 높으며, 구상권의 회수율 역시 일본 34.7%, 대만이 30.8%에 비해 우리나라 신용보증재단은 9.6%에 그쳐 손실률이 높다. 또한 과도한 신용보증 공급은 금융시장 발달을 제약하였다. 즉 공공부문의 비대로 인한 민간금융부분의 축소로 이어졌다(강동수 2012). 특히 사회적경제조직의 긴급자금과 같은 소액금융보증에 대한 지역신용보증기금의 활용은 심사기간 및 비용 등 제약조건이 많다. 실제 지역

29) 2013년말 현재 303건, 약 600억원 용자실적이 있음

신용보증기금의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제도를 활용하는 건수도 거의 없다³⁰⁾는 점에서 신용보증기금이 긴급자금대출에는 맞지 않는 제도라는 판단을 하게 된다³¹⁾.

그러므로 사회적금융에 맞는 보증제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그 대안으로 상정할 수 있는 것이 지역기반 보증제도의 구축이다. 지역기반 보증제도로는 일본의 후쿠시마의 NPO원기지원론(loan)과 상호보증제도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후쿠시마의 경우, 은행 등에서 이루어지는 NPO법인의 자금대출요청에 대해 후쿠시마NPO뱅크 및 우츠쿠시마NPO네트워크의 융자보증심사위원회³²⁾가 융자보증심사를 거치는데, 심사는 NPO법인 발전가능성의 관점에 실시하여 가능하면 보증을 해주고 있으며, 만약 보증심사에 떨어져도 이후에 경영지원 등을 실시한다.

[그림 36] NPO 원기지원 loan 대출 및 보증심사 흐름도



자료: 일본내각부 NPO홈페이지, 활동사례집

30) 2016년 10월 현재, 충남신용보증재단 관계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사회적기업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하는 건수가 거의 없다고 밝힘

31) 양준모(2014), 박종현·김낙현(2015) 등은 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기업 특례보증 활성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소액 긴급자금인 경우 적절치 않다고 판단됨

32) NPO활동에 조예가 있는 전문가, 금융위원(금융기관지점장 등), 경영위원(경영컨설턴트) 3인의 심사위원으로 구성됨

상호보증제도는 사업의 유사성 또는 지역적 근접성을 기반으로 소기업간 연대를 통한 보증이며 대출기피하는 소규모기업 등에 신용대출을 돕는 중개역할을 한다. 대표적인 예로, 1950년대 등장한 이탈리아의 Confidi를 들 수 있는데, 현재 700개가 넘는 상호보증제도가 운영중에 있다. 이러한 상호보증제도의 장점은 ①정보 비대칭성 감축(차입자와의 사회적 친밀성 활용 조사평가, 사후회수 등 경쟁우위), ②규모의 경제 가능(대출기관과의 협상시 개별기업보다 높은 협상력)하다는 점이다. 단점으로는 부실징후 인지에도 불구하고 보증서를 발급하는 정실보증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보증심사의 객관화, 감독강화, 재보증 등을 통해 해결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역기반 보증제도는 제도화된 보증제도의 한계인 정보비대칭성과 비용문제를 해결하는 동시, 신뢰를 기반으로 한 지역 및 업종을 통한 감시시스템이 작동하여 대출금 회수율을 높일 수 있다. 현재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들의 업종 및 지역네트워크로 활용하여 이러한 지역기반형 보증제도를 구축하여 활용할 수 있다.

3.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 및 운영방향

1)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와 거버넌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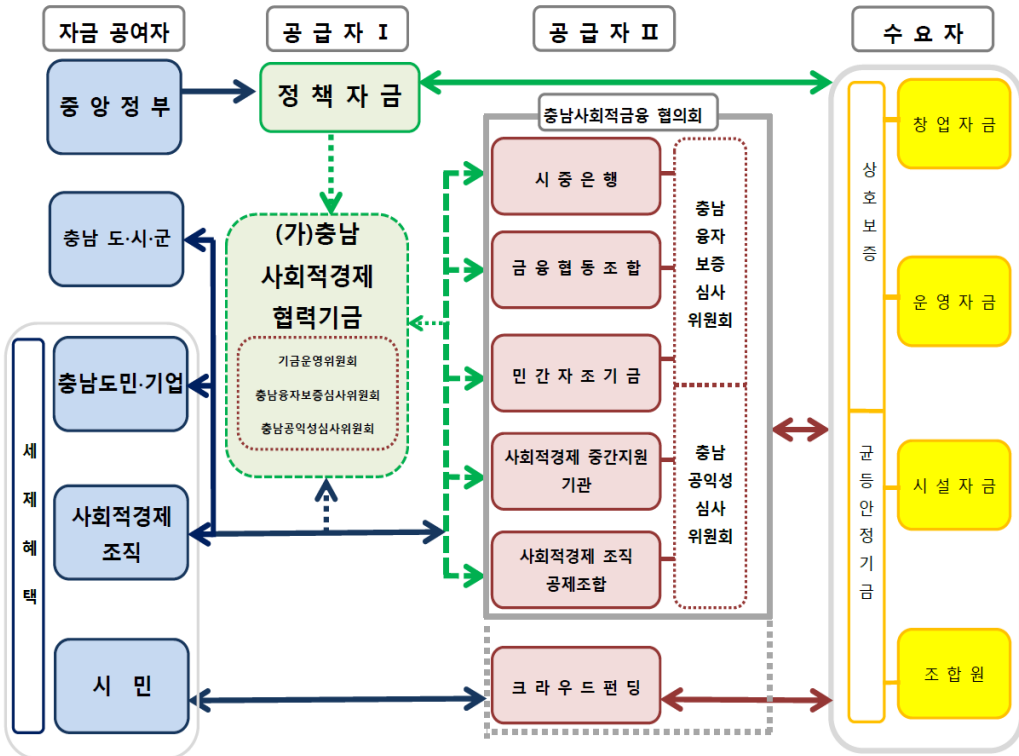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충남의 사회적금융 구축체계는 아래 그림과 같으며, 충남 사회적금융의 특징은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안전장치)³³⁾으로, 이를 통해 사회적금융의 원칙³⁴⁾을 실현해 나간다.

우선 ‘의지가 있는 자금’이 다양한 공급자를 통해 금융수요자에게 공급된다. 자금은 예금-대출, 투자상품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공급된다. 공급자는 일반은행, 금융협동조합, 민간자조기금, 중간지원조직 등으로 다양한데, 이를 중심으로 충남 사회적금융 협의회라는 네트워크를 구성한다. 대출 및 투자를 위한 보증 및 공익성은 충남 사회적금융 협의회 지역의 지역기반 심사위원회(①충남융자보증심사위원회, ②충남공익성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받는다.

33) 다음 페이지의 ①~④가 안전장치임.

34) 2장의 2.사회적금융의 특성과 운영원리 참고

[그림 37] 충남 사회적금융 구축의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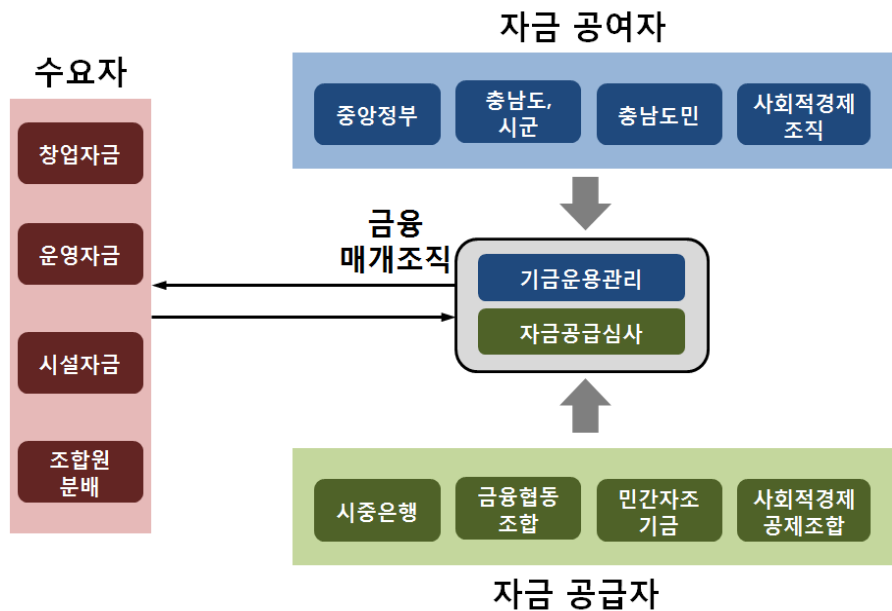
공급자는 2개의 심사위원회를 통해 보증과 공익성(사회적가치 등)의 업무를 맡겨
비용지출을 최소화한다. 이를 통해 자금공여자와 자금수요자에게 최상의 금융상품을
제공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지역전문가(사회적경제 및 주민자치, 마을만들기 등
전문가), 금융전문가(신협 및 새마을금고 지점장), 경영전문가(경영지도사, 컨설팅,
중간지원조직 등) 등으로 구성된다. 지역기반 심사위원들은 평소의 자금수요자(사
회적경제조직)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며, 특히 지역 평판과 사회적 공익성, 사업능력
등에 대해 인지하고 있어 적절한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수요자는 다양한 공급자로부터 금융상품을 선택하는데, 지역 및 업종기반의 ③상호보증제도(조합)을 통해 보증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또한 대출 또는 투자된 금액의 일정금액(0.1%)을 ④균등안정기금에 적립하여, 동료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에 빠져 만약에 있을지 모를 대출금 상환불이행을 위한 대손충당금으로 적립한다.

공급자와 수요자는 각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네트워크 내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상호신뢰를 구축해 나간다. 각 네트워크내에 존재하는 평가시스템(①, ②)과 보증시스템(③,④)은 충남 사회적금융의 안전장치로서 기능한다.

이러한 상호신뢰와 경험들이 축적되고, 다양한 사회적금융조직(공급자)들의 숫자가 일정수준에 이르면, 민관의 재원출연 및 출자모금을 통해 충남사회적경제협력기금을 설치한다. 사회적금융의 사회적금융, 즉 자본공급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구체적인 기금구성 및 운영에 관해서는 ‘(2)사회적기금의 제도적 설치방안’에서 논의한다. 기금구축시, 기존 ①충남융자보증심사위원회 및 ②공익성심사위원회의 역할을 기금운영위원회와 함께 추진한다. ①, ②는 금융매개조직로 자금공여자들에 의해 형성된 사회적기금을 관리·운용하며 자금공급자들이 수요자들에게 기금을 공급하기 위한 심사 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중간지원 및 매개조직이다.

[그림 38] 충남 사회적금융의 거버넌스 체계



본 연구에서는 충남 사회적금융의 운영과 사회적기금의 실제적인 관리와 활용을 위해 중간지원조직인 금융매개조직의 필요를 제안하며, 초창기에는 충남의 광역차원의 전문지원조직이 업무를 수행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자금공급의 역할이 시·군단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충남사회적경제협력기금의 제도적 설치방안

기금은 법제의 형식적인 측면이 성공적으로 결합되어야 운영이 가능하다. 특히 법제형식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내용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2016년부터 시행된 법률로 행정자치부(2015)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 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의하면 지자체의 기금에 대한 민간위탁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서울시의 사회투자기금을 (사)한국사회투자가 위탁하여 사업 및 관리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의미한다.

그러므로 현재 기금의 위탁은 충남도 조직 및 유관 공공기관에게 위임이 가능하므로, 충남신용보증재단이나 충남경제진흥원, 지방중소기업청 등에 위임할 수 있다. 다른 대안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중간지원조직에 기금운용TF를 구성하여 전문 공무원 영입을 고려할 수도 있다. 최근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³⁵⁾’에 따르면 사회적기금의 설치 및 운용의 내용을 명시하고 있지만 법률안이 통과하여 시행되기 전에 사회적기금의 실제 설치와 운영을 위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4. 새로운 금융시스템 탐색: 지역화폐

사회적금융은 비단 용·투자의 문제로만 한정할 수 없다. 새로운 금융시스템의 구축은 사회적금융의 또 다른 모색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것이 지역화폐일 것이다. 충남에서는 홍성과 서천에서 이루어졌다. 서천의 서천레츠(Local Exchange Trade System:LETS)는 2009년 퍼머컬처교육을 통해 시작하였고, 서천레츠카페를 중심으로 운영되었으나 현재는 중단된 상태이다. 홍성에서는 ‘뜰’라는 지역화폐를 사용하는데, 지역화폐에 대한 관심은 약 15년 전부터 시작되었다. 2001년 11월 홍성 YMCA, 사회보험노조, 한우협회, 홍성사회복지관, 풀무생협, 참교육학부모회 등이 ‘홍성두레은행’이라는 레츠방식의 지역화폐 운동을 시작하였다. 운영주체로 홍성 YMCA, 홍성여단협, 풀무생협, 홍성사회복지관, 홍성신문 등이 맡았으나 오래가지 못했다. 이후 2006년에는 홍동면 마을주민 30여명이 레츠방식의 지역화폐를 시작했으나 이 역시 오래 유지되지 못하고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최근 ‘홍동거리축제’, ‘동네마실방 뜰’ 등 홍동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지역화폐를 활용하고 있다.

35) 더불어민주당 사회적경제위원회 윤호중의원 대표발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의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어려움을 보여주고 있다. 즉 한정된 지역에서 통용되는 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하는 동시에, 붕괴되고 있는 지역공동체의 회복에 있으나 그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아직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유럽에서는 지역화폐의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지역경제회복의 방안으로 지역화폐를 주요정책으로 삼아 유럽연합 지역개발기금(European Regional Development Fund: ERDF)은 400만유로를 출연하였다. 이 자금을 통해 지역화폐 시범사업이 시작되었고, 그 중 브리스톨파운드(사회적기업 운영)가 가장 활발하다.

2012년부터 브리스톨시는 다양한 지원책(위탁운영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 현재까지 11만5000파운드(약2억원)가 발행되었다. 주거래은행인 신헤에 브리스톨 파운드 전용계좌개설은 1,500명정도, 가맹점은 370개 수준이다. 아직 그 영향력은 크지 않다. 그러나 지역화폐에 대한 효용성과 관심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으로, 프랑스의 경우 지역화폐로 공공서비스 비용과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하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제3절 충남 사회적금융 구축을 위한 정책과제

1. 단기과제(∼5년)

1) ‘충남 사회적금융 공급자’ 시범사업 실시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구축의 시작은 사회적금융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것이다. 자금공여자인 충남도민, 기업은 물론 당사자인 사회적경제조직조차 사회적금융에 대해 2/3이상의 조직들이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 사회적금융을 알리는 것은 홍보방식이 아닌 직접 체험케 하는 것이 유의미하다. 사회적금융을 경험하게 하는 방법으로 사회적금융 공급기관을 지정·운용하게 하는 것은 효과적인 방법으로 판단된다(양준모 2014, 박종현·김낙현 2015)

충남 사회적금융 공급사업은 1~2개 금융기관과 MOU를 체결하여 추진하되, 시범사업의 대상자는 신협·새마을금고 등 금융협동조합이 적절하다. 신협 등은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협동조합으로서, 사회적경제조직(협동조합 등)을 지원·후원을 해야 할 원리적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일본의 노동금고(예, 긴기노동금고)는 협동조합으로서 지역사회와 협동조합에 대한 융·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시중은행에 비해 예대율면에서 크게 낮은 상황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을 새로운 융·투자처로서 개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중요한 마케팅전략으로 판단할 수 있다(박종현·김낙현 2015).

그러나 실제 사회적금융 상품을 판매하여도 큰 실익이 없는 상황이다. 예를 들어 햇살론의 경우 100%의 정책자금보증이 되어도 상품판매가 쉽지 않다.³⁶⁾ 이러한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는 단지 ‘충남 제1호 사회적금융 공급자’로서 명분만 준다고 하여 사회적금융상품 개발·판매를 원활히 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므로 명분과 함께 사회적경제조직 관련 시책사업비의 주거래은행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조직들이 보조금(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을 받는 계좌를 열게 하거나, 또는 사회적경제금고(예, 군금고)로 지정하여 시책사업 전반의 권리를 동시에 주는 것이다.

36) 2차 전문가연구자문회의의 금융전문가의 의견

이러한 명분과 혜택을 동시에 주어, 시범사업자로 하여금 사회적금융상품을 개발하게 하고 실제 적극적인 영업활동을 독려하여 시범사업이 실질적인 효과성을 발휘케 하는 방식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충남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지원

최근 충남 사회적경제조직들의 공제조합 설립 움직임은 가시화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천안의 00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 여러 사회적기업들과 같이 사회적기업의 보조금인 사업개발비 등을 종자돈으로 하여 공제조합 설립을 꾀하였으나 사업개발비의 취지와 맞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지 못하였다. 공제조합은 사회적경제조직의 상부상조(연대)를 기반으로 하므로, 사회적금융을 논하기 앞서 필요한 자조의 노력이다. 이러한 자조의 노력은 정책대상자인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사회적경제의 원리를 학습케 하는 중요한 마중물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제조합의 설립시 충남도는 매칭으로 자금지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작년 10월 충남도는 ‘충남엔젤투자매칭펀드’를 결성하여, 벤처 및 중소기업의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50억규모의 펀드는 엔젤투자자 투자금액의 1~2배수에 따라 매칭하여 투자하는 것으로, 충남도는 10억원을 투자하였는데, 20여개 업체 2억원 씩이다. 매년 벤처기업수를 50개씩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이 사회적경제 공제조합의 출자금에 매칭하여 자금을 지원하고, 공제조합의 활동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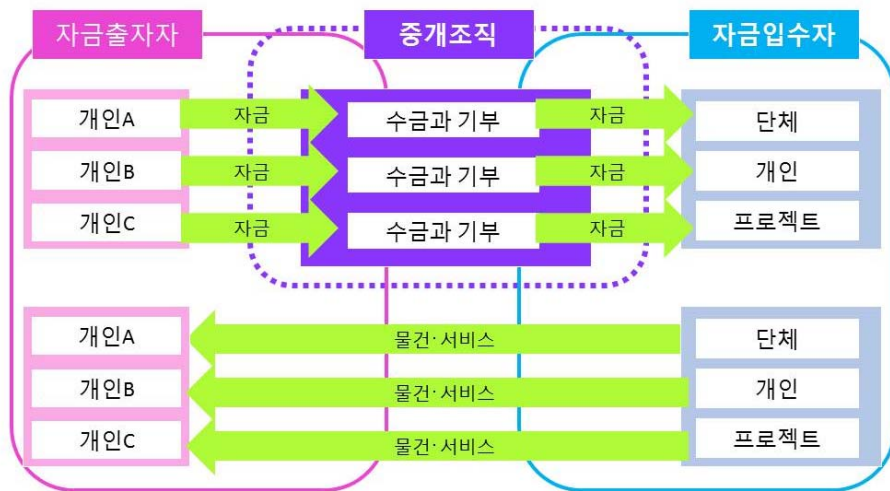
공제조합은 사회적경제조직, 충남도 출연금외 다양한 조직과 기업(충남내 대기업) 등의 출연금 및 출자금으로 기금을 확보한다. 공제조합은 사회적경제조직의 긴급자금, 공동구매, 사업자금지원, 종사자 등에 대한 무이자 소액대출 등을 실시하여,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을 추진한다.

3) ‘충남 사회적경제×크라우드펀딩’ 시범사업 실시

크라우드펀딩은 군중을 뜻하는 크라우드(crowd)와 재원마련을 뜻하는 펀딩(funding)이 합쳐진 단어로, 일반적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기업가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사업을 온라인을 통해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크라우드펀딩 법안이 통과하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다.

일반적인 크라우드펀딩은 금융의 기본적인 방식을 사용하지 않는 일종의 기부라고 할 수 있다. 자금공급자는 자금을 제공하는 이전의 자금수요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원금 변제나 이자 등의 금전적 수익은 전제되지 않는다. 비금전적 수익으로서 프로젝트 등이 실시된 결과로서 [물건·서비스] 또는 프로젝트와는 무관계의 [물건·서비스]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는데 어느 것이나 반드시 사전에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그림 39] 클라우드펀드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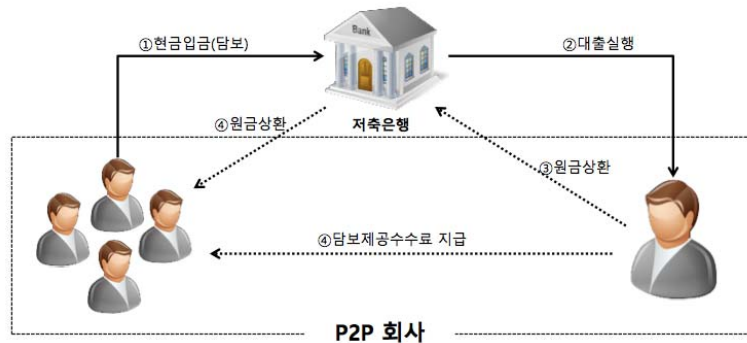
자료: Daiwa Institute fo Research, ソーシャル・ファイナンスについて `9 페이지

그러나 크라우드펀딩 중 새로운 형태의 펀딩으로, 팝펀딩과 같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이 있다. 팝펀딩은 2007년 시작한 대출형 크라우드펀딩 업체로, 신용등급이 8등급 아래로 매우 낮아 대부업체도 거부한 취약계층을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돈을 모아 빌려준다.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이 아니라, 저축은행과 연계하여 빌려주며, 신용은 작은 거래를 축적하면서 쌓게 하는 시스템이다(그림참조). 이 팝펀딩과 같은 대출형 크라우드펀딩은 소액의 긴급자금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적절한 지원이 가능하다. 실제 팝펀딩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자금공급의 역할을 하기도 하였다³⁷⁾.

37) 예비사회적기업 '자리'는 위기청소년 자립을 돕는 기업으로, 중고 로스팅기를 사기위해 팝펀딩에서 1천만 원 모금했고, 이후 3천만원을 모아 사회적기업의 자금으로 활용하였다.

충남 사회적경제×크라우드펀딩 시범사업은 사회적금융 공급자 시범사업자와 연계하여 추진가능하며, 시너지효과도 누릴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림 40] 팝펀딩의 금융기관 제휴모델



자료:http://www.bloter.net/wp-content/uploads/2015/03/ShinHyeonUk_CEO_Popfunding_03_BusinessProcess.png

2. 중장기과제(5년~)

1) ‘충남 사회적금융 공급자’ 시범사업 확대실시

충남 사회적금융 공급자 시범사업의 경험을 토대로, 중장기적으로 많은 수의 사회적금융 공급자와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금융이 생기도록 독려할 필요가 있다. 시범사업을 통해 얻어진 사회적금융의 노하우(성공과 실패의 경험)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적금융 공급자를 선정하되, 1단계(~3년)에는 권역별(2~3시군) 공급자를, 2단계(3년~)는 시군별 공급자를 선정한다.

공급자는 금융협동조합으로 한정하지 않고, 일반은행, 중간지원조직, 민간자조기금(은행), 공제조합 등으로 확대한다. 시중은행과 금융협동조합의 경우, 시범사업의 혜택, 즉 계좌설정, 사회적경제금고 지정 등의 권역별 또는 시군별 지정을 통해 명분과 실리를 제공하고, 매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중간지원조직, 민간자조기금(은행) 및 공제조합의 경우 출자금 등에 대한 매칭자금을 지원하고, 매년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2) '충남사회적금융협의회'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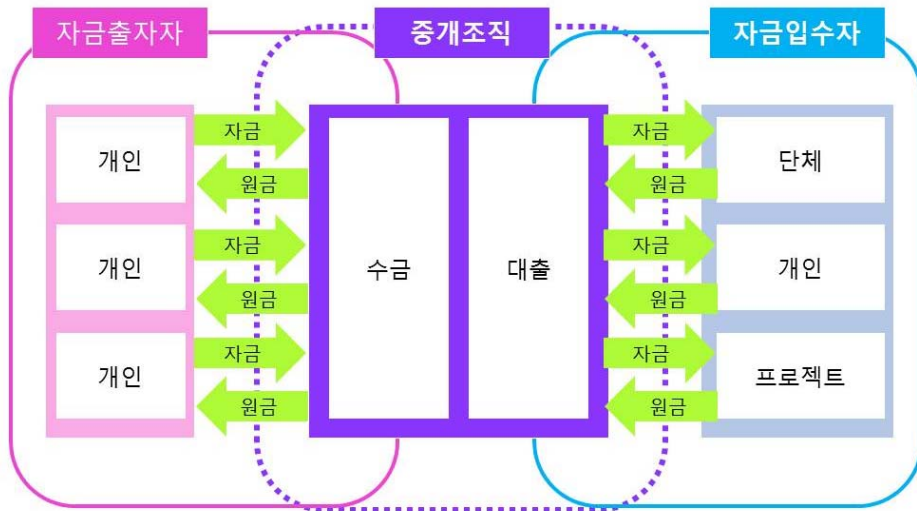
충남 사회적금융 공급자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충남사회적금융 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축한다. 협의회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의견교환의 창구이자, 사회적금융 시책협의를 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특히 협의회는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의 특징인 '충남 용자보증심사위원회'와 '충남 공익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한다³⁸⁾. 이를 통해 충남 사회적금융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한다.

3) 민간자조활동 지원: '충남 사회적경제은행', '사회적경제펀드' 구축지원

충남 사회적경제은행(이하, 사회적경제은행)은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비영리민간금융기관을 말한다. 일본의 NPO은행이 대표적이다. 사회적경제은행은 은행법상 은행은 아니지만, 대부업으로 가능하고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소액융자를 해주는 은행과 유사한 활동을 하기에 사회적경제은행으로 명명한다. 사회적경제은행은 사회적경제조직들이 개인 등에게 모은 자금을 사회적경제조직에게 융자하는 것이다. 단지 사회적경제조직만이 아닌 환경보전과 에너지전환, 지역재생 등 프로젝트에 융자한다. 다음과 같은 형태를 가진다.

38) 상세내용은 본 연구 4장 2절 3. 제안: 충남사회적금융 체계 및 운영방향을 참조

[그림 41] 사회적경제은행 흐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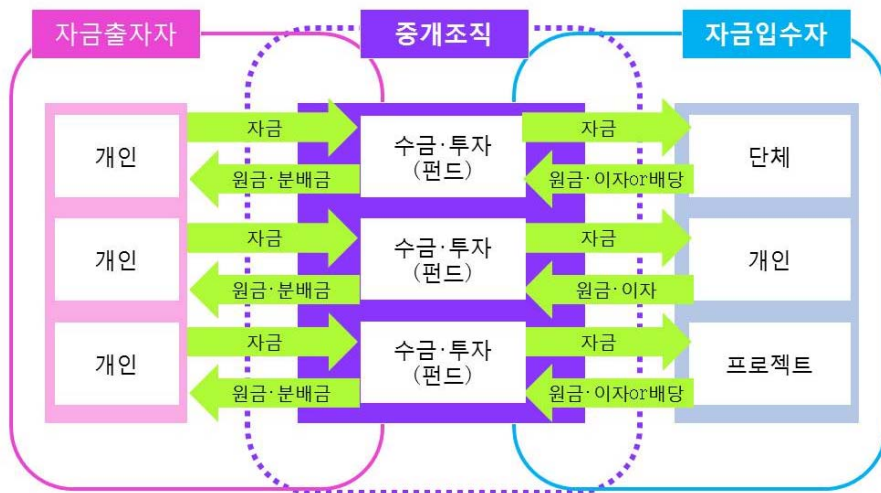


자료: Daiwa Institute fo Research, ソーシャル・ファイナンスについて `6페이지

사회적경제펀드는 일반시민에게 자금을 모아, 개인, 단체, 프로젝트 등에 투·융자하는 금융조직이다. 앞서 말한 사회적경제은행과 다른 점은, 자금수요자인 개인, 단체,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개별로 펀드를 조성함으로써, 자금공여자가 자금수요자를 지정할 수 있는 데 있다. 기존 펀드투자자와 같은 방식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원금보증은 없지만 원금상환이 예정되어 있어, 배당 등의 형태로 금전적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일본의 시민펀드의 경우, 풍력발전소 프로젝트를 추진시 자금공급자의 이름이나 의견을 프로젝트 웹사이트에서 공개하는 등, 자금공급자와 자금수요자의 생각이나 의사를 연결하는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있다. 자금공급자의 의견에는 재생가능 에너지 도입에 공헌 할 수 있는 생각을 담은 것도 있어, 투자처인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나 공감을 갖는 투자공급자가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다.

[그림 42] 사회적경제펀드 흐름도



자료: Daiwa Institute for Research, ソーシャル・ファイナンスについて `7페이지

이와 같은 민간자조적인 노력에 대한 지원을 통해 충남의 사회적금융의 다양성과 활성화는 담보된다. 예를 들어 일본 나가노현의 NPO은행의 경우, 2003년 설립되어 출자금 1억3천만엔으로 크지 않지만, 누적융자실적이 30억엔이 넘을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러한 활동에 대해 나가노현 등의 지자체에서 출자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원하였고, 그 성과를 내고 있다.

4) ‘충남사회적경제협력기금’ 구축

위와 같이 과제들을 추진하게 되면, 다양한 사회적금융조직과 사회적금융상품들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제 남은 정책과제는 이러한 기반에 충분한 자금(seed money)를 조성하고 배분하는 공공기금을 구축하는 것이 마지막 정책과제가 될 것이다. 이 기금은 다양한 사회적금융 공급자에게 충분한 자금을 유통시키는 임브렐러 기능, 즉 사회적금융의 기금으로 역할을 할 것이다.

공공기금은 ‘(가칭) 충남사회적경제협력기금(이하, 협력기금)’을 제안한다. ‘협력’을 명칭에 넣은 이유는 기금재원이 ‘공공’만이 아닌 충남도민·기업·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구성되는 기금에 대한 희망을 담았기 때문이다. 다양한 방식의 재원들로 구성될 것이지만 재원의 중심은 충남도가 될 것이다.

공공기금은 법적근거가 있어야 한다. 현행 충청남도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19조 1항에 기금조성에 대한 언급은 있으나 명확한 법적근거가 필요하다. 최근 윤호중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의 26조에 사회적경제공제 기금 설립을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민간 전문기관이 기금의 위탁운영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제27조, 28조), 이 조항은 지방보조금법과의 법률 충돌이 있어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협력기금의 운영 등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진행하고 매년 기금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운영심사를 한다. 심사 및 선정기준 등은 융자보증심사위원회 및 공익성심사위원회의 조직을 설치하여 수립한다. 이외 기금사업 집행하는 사회적금융 공급자들에 대한 평가와 관리 등을 실시한다.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실제 기금사업 집행은 위탁하는데, 충남의 다양한 사회적금융 공급자들이 그 역할을 수행한다. 위탁기관은 상품기획 및 마케팅, 심사, 사후관리까지 실시하되, 지역의 사회적금융협의회의 융자보증심사위원회 등의 협력을 통해 추진한다.

마지막으로 협력기금은 위험을 부담하지 않으면 자금공급 기능을 다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매년 협력기금의 운용자금의 10%정도의 대손충당금으로 설정하여, 실제 기금사업을 추진하는 사회적금융 공급자들이 위축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금융공급을 할 수 있도록 제도설계와 합의가 필요하다.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 요약과 결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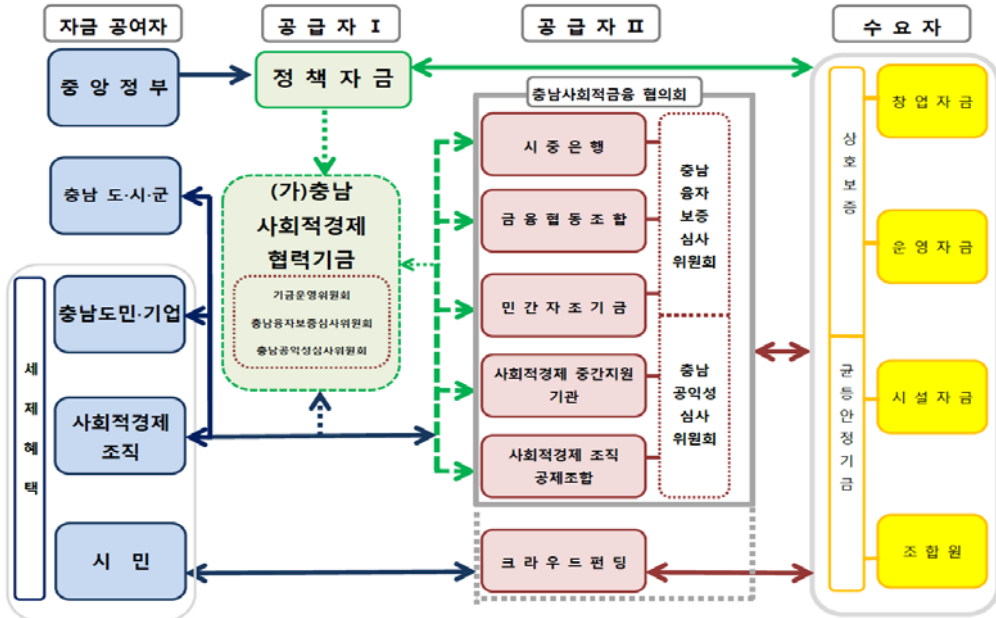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충남의 사회적경제조직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공급과 이를 위한 가장 적절한 전략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선행연구와 사례조사를 실시, 사회적금융의 필요성과 방식에 대한 리뷰를 검토하였고, 사회적금융의 모델화를 통해 주체별(정부·사회적경제·시민사회)로 분류·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조사를 통해 국내외적으로 사회적금융 구축현황과 사례를 확인하였다. 또한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을 대상으로 자금조달의 필요와 현황, 어려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사회적금융의 필요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연구과정을 통해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을 위한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과 정책제안을 한다.

1) 정책방향

우선 사회적금융 공급측면에서, ① ‘의지가 있는 자금’의 유입경로 구축, ② 사회적금융 공급자 구축을 통해 공급시스템을 확보한다. 두 번째 수요측면에서 ①지역기반형 평가시스템 구축과 ②지역기반형 보증시스템 구축을 통해 제도화되고 경직된 금융시스템의 변화를 꾀한다. 이를 기초로 충남의 사회적금융체계와 운영방향은 지역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안전장치)이며, 이를 통해 사회적금융의 원칙과 활성화를 실현하도록 한다.

[그림 43] 충남 사회적금융의 체계



2) 정책제안

충남 사회적금융 체계구축을 위한 정책과제는 3가지의 단기과제(~5년)와 4가지의 중장기과제(5년~)를 제시하였다. 단기과제로는 ① ‘충남 사회적금융 공급자’ 시범사업 실시, ② ‘충남 사회적경제 공제조합’ 설립지원, ③ ‘충남 사회적경제×크라우드펀딩’ 시범사업 실시를 제안하였고, 중장기과제로는 ① ‘충남 사회적금융 공급자’ 시범사업 확대실시, ② ‘충남사회적금융 협의회’ 구축, ③ 민간자조활동 지원: ‘충남 사회적경제은행’, ‘사회적경제펀드’ 구축지원, ④ ‘충남사회적경제협력기금’ 구축을 제시하였다.

2. 정책제언

‘의지가 있는 자금’이 사회적금융으로 유입하게 하기 위해서는 걸맞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센티브로 가장 유력한 것은 세제혜택이다. 예를 들어 벤처

투자의 활성화에는 세제혜택이 큰 기여를 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투자에는 세제혜택이 없다. 이와 같이 혁신형 사회적기업 또는 장기적인 수익을 얻 두한 사회적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필요하다(박찬임외 2014)

미국의 경우, 프로그램 투자(Program Related Investments)를 하는 비영리민간 재단 등에게 영국은 2002년 지역진흥세제공제(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CITR)와 함께 지역진흥세제공제계좌(Community Investment Tax Relief Account:CITRA)를 통해 낙후지역에 투자하는 개인이나 법인을 대상으로 예금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5년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하고 있다. 공제 대상은 최저예금액 1,000파운드, 최고액은 1,000만파운드이며, 세금공제와 동시에 예금이자에 기부할 수 있게 했다. 이러한 상품을 통해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낮은 조달비용으로 자금획득하고, 저리로 융자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리고 자금을 공여한 개인과 법인은 세액공제는 실제이익으로 이어진다.

네덜란드의 그린펀드스킴(The Green Funds Scheme: GFS)의 제도 역시 벤치 마킹할 만하다. 이 제도는 사회적금융으로 유명한 트리오도스은행의 규모가 성장한 이유이기도 하다. 펀드운영을 통한 민관연계의 정책기능을 도입이 큰 역할을 하였다. 1995년부터 시작된 이 제도는 그린프로젝트 투자(자연, 경관, 유기농업, 온실가스 절감, 재생에너지투자 등)에 대해 세제혜택을 부여하여 참여자의 수익을 보장했으며, 나아가 개인, 은행, 정부, 환경에 이득을 주었다. 개인들이 투자처로서 그린펀드를 선택하게 했다.

이 제도의 핵심은 세제 혜택으로 투자자의 수익을 보장해줌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이 그린펀드에 투자하게끔 유도하는 것이다. 개인이 예금(Green saving) 또는 투자(Green investment)할 경우, 연간 53,421유로 한도(2007년기준)까지 양도소득세(1.2%), 소득세(1.3%) 등을 포함해 2.5%의 세금을 감면된다. 그린펀드에 투자할 경우, 순수익률은 시중 펀드에 비해 1~2% 낮은 편이지만, 2.5%의 세금 감면 효과로 시중펀드와 같은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수익성이 보장되는 것이다.

그린펀드가 개시된 후, 은행 등 금융기관은 평가기관을 통해 그린인증을 인정받는데, 통상 5주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발행된 그린인증은 통상 10년간 유효하다. 트리오도스은행의 경우, 그린뱅크라는 조직을 만들어, 개인을 대상으로 예금(Green saving) 및 투자 상품을 만들어 판매하고 있다. 은행의 입장에서는 환경문제에 적극적인 사회적평가와 함께 저금리로 조달자금을 일부(예금 및 펀드의 30%까지 일반투자 가능)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3. 연구의 한계 및 향후과제

연구계획상 해외 사회적금융 관련기관 현지조사(일본)를 실시하기로 하였으나, 시간적 한계로 인해 자료조사로 대체한 것은 아쉬움이자 연구의 한계이다. 특히 최근(2014~) 일본의 경우 사회적경제조직 등에 대한 자금지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우리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금융지원에 대해 구체적인 비교연구를 실시한다면 좀 더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였을 것이라 생각한다.

또한 충남 사회적경제조직 실태조사를 전수조사하지 못한 점과, 실태조사 후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면밀한 보강조사를 하지 못한 점은 아쉬움으로 남는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제기한 ‘수요자들이 과연 자립의지와 사회적경제 원리에 대한 동의를 하는가’에 대한 사회적경제의 근원적 질문과 연결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연구적 한계와 질문들은 향후 연구에서 밝혀보고자 한다.

참 고 문 헌

- 강동수(2010). 서민금융활성화를 위한 상호보증제도 활성화방안.
- 곽관훈(2014). 금융소비자 보호와 크라우드펀딩의 활성화.
- 김미곤(1999). 공공근로사업의 평가 및 개선방안, 도시와 빈곤 27호, 한국도시연구소.
- 라준영(2014). 사회적 자본시장과 성장자본: 보조금 연계형 사회영향투자, 한국협동조합연구 제32권 3호.
- 문진수(2013). 금융, 따뜻한 혁명을 꿈꾸다.
- 민병길(2015). 경기도 도민은행 추진방안 마련을 위한 해외 사례 연구.
- 박동규(2010). 금융환경 변화와 서민금융 활성화 방안. 실험연구. 제55호.
- 박상하(2015). 광주지역 사회적금융 활성화를 위한 탐색적 연구, 지역개발연구 제47권 제2호.
- 박정희(2014). 협동조합금융기관은 소득불평등 해소에 기여하는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를 중심으로.
- 박종현·김낙현(2015). 경남지역 사회적경제 육성을 위한 사회적금융 발전방안, 경남경제리뷰 2014.12.7.
- 박종현·장종익(2014). 마이크로파이낸스의 조직모형과 한국적 시사점.
- 박찬임·박종현·장종익(2014). 따뜻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소셜펀드 활성화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 서봉만·서희원(2014). 인천시 사회적 금융 도입을 위한 기초연구, 인천발전연구원.
- 심상달 외(2010). 자본시장을 통한 사회적기업의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 KDI 정책연구.
- 양준보(2014). 강원도 사회적금융 도입 및 효율적 운영 방안, 한국은행 강원본부.
- 오운해(2013). 저소득 저신용 계층을 위한 서민금융상품에 대한 연구: 정책적 서민금융 상품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원.
- 이기송(2013). 사회적금융의 운영현황 및 시사점,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 이인우(2014). 충청남도 사회적기금구축 포럼 발표자료.
- 이요섭(2003). 금융시장의 이해. 연암사..
- 이중수·유병선 외(2013). 보노보 은행.
- 이준호(2015). 사회적금융의 법제화 방안 연구.
- 장구보·이혜정(2015).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자금조달에 관한 연구, 인천학연구 22호.
- 장종익·박종현(2013). 사회적금융의 현황과 한국에서의 발전방향.
- 정관영(2012). 이제는 사회적경제다. 공동체.
- 채종현·이종한(2009).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역할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한국사회투자(2015). 사회적경제기업 자금조달 조사보고서.

Daiwa Institute of Research 環境調査部/金融調査部(2013), ソーシャル・ファイナンスについて
European Commision(2008). Financial Services Provision and Prevention of Financial Exclusion.
Nicholls, A. & Pharoah, C.(2007). The Landscape of Social Finance. Skoll Centre for Social Entrepreneurship
井上有弘(2008),欧州ソーシャル・バンクの現状と信用金庫への示唆、SCB金融調査情報19-11
宮下恵子(2016),NPO法人の資金調達の現状～ソーシャルビジネスの資金的課題、ゆうちょ資産研レポート.

[부 록 1] 전문가 FGI 자료

■ 전문가 대상 초점집단면접(FGI) 1, 2차 조사 자료

1) 조사개요

본 연구는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금융을 도입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연구에서 출발하며 이에 관련된 기반이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들의 집단토론의 의견과 정보교환의 과정을 실시하여 연구분석의 관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1차 전문가 FGI는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금융이 나아가야할 방향 및 초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충남의 사회적금융에 대한 탐색적 조사의 기능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제2차 전문가 FGI는 사회적경제 경제조직의 금융수요 및 사례조사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인 충남 사회적금융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교환을 실시하였다.

제1차 FGI는 2016년 5월 30일(월)에 약 2시간 30분 정도 실시되었으며 충청남도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과 당사자조직의 대표들을 비롯하여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의 공무원, 서울의 사회적기금 실행조직 대표 등 7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관련된 의견과 정보를 교환하였다. 제2차 FGI는 2016년 10월 19일(수)에 약 2시간 정도 실시되었으며 충청남도의 새마을금고 관계자, 서울시 사회투자기금 연계협력기관 겸 신용협동조합 관계자, 사회적기금 실행조직 대표 등 5인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의견교환을 하였다.

2) 1차 전문가 초점집단(FGI) 조사 결과

(1) 충남에서 사회적금융과 관련 연구의 필요성

▶ 종합결과: 충남에서 그동안 기금수요와 공급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 공감하였다. 다만 각각의 입장에 따라 금융에 대한 수요가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연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는 충남의 금융체계의 목적과 범위를 보다 명확히 하고 시작할 필요가 있고 수요기반의 금융 설계가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 이상진: 충남에도 다양한 금융수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보다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 자금의 목적으로서는 긴급자금으로서의 포지셔닝이 우선 가능하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수요들이 있는데 적절하게 충족시켜주는 금융기관, 금융이 많지 않은 상태이다. 금융사각지대를 해결하는 것부터 고민하면 상이 그려질 것이다.
- 박성호: 민간의 힘으로든 공적 자금의 힘으로든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는데 쓰이는 금융체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는 사회적 금융 중에 임팩트투자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있다. 앞으로 향후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이 연구를 통해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
- 박춘섭: 금융문제는 자본주의 핵심 문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금융문제를 지역사회와 밀착시켜서 지역에서 가치있는 일들을 지역사람들이 어떻게 이룰 것인지를 도와주는 측면에서 접근하면 좋겠다. 투자, 인내자본 등을 함께 고민하고 있는데 특히 크라우드 펀딩 방식이 작동가능할 것인지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 전지훈: 크게 4가지를 고민할 수 있다. 즉 마이크로크레딧, 관계 협동금융, 지역개발금융, 사회목적투자. 특히 관계적 협동금융은 공동체와 맞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한다. 지역사회와 사회적경제의 영역에서 금융이라면 관계형 협동조합과 지역개발금융의 수요가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 정인철: 신탁이 사회적으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 고민을 하고 있다. 앞으로 신탁이 지향해야 될 정체성은 무엇이나. 지역사회와 공생하는 지역금융, 상호금융, 취약계층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서민금융,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 금융이 그 역할일 것이다. 충남에서 지역 내 파트너를 만

든다면 신탁이 가진 자원들을 통해 상생하는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 박찬무: 실제 사회적경제 기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재원에 대한 필요가 있다. 그런데 기업마다 그 차이가 굉장히 있다. 구멍가게 수준부터 큰 기업까지 차이가 있다. 성장에 대한 고민들의 차이도 매우 크다. 우리가 '사회적'이라고 쓰는 이유는 도약에 대한 고민 때문일 것이다. 사회적금융은 지역화의 강점을 가져야 한다. 지역에 맞는 기금, 금융시스템이 되면 좋겠다. (충남의 사회적 금융체계는) 제도로서 만들어지는 부분과 함께 당사자들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져야 한다. 지속발전에 대한 부분을 고민하더라도 당사자들의 고충들을 서로 논의하는 방식으로 되어야 한다.
- 전은호: 금융은 일종의 혈액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이다. 현재 정부 주도의 사회적경제 구조에서 자원의존적인 경향이 기본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의존적인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사회투자기금과 같은 금융은 반드시 필요하다. 기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수요자 풀을 미리 확보하면서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나가는 것도 함께 병행할 필요가 있다.

(2) 금융 수요에 대해서

- ▶ 기금 수요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나왔지만 대체적으로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기금의 미션을 명확히 하는 것이 모금을 하거나 수요를 대처할 때에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였다.
- 박찬무: 사회적경제 기업들 또한 사업체들이 고도화단계로 가면 큰 금액이 필요하게 되어 있어서 금융의 수요가 증가하게 된다.
- 박성호: 사회적협동조합, 재단, 사단법인, 지역기업, 당사자 계좌를 모으고 기금을 내면 뭉치돈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부분을 협업을 통해 만들었으면 좋겠다. 노동조합까지 포함하면 좋은 수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 김종수: 충남의 금융은 지역을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을 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 정인철: 수혜자는 불특정 다수더라도 목적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만약 기부금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면 기부 당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논리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인식은 솔직히 모르겠다. 너무 의존적인 것이 아닌가 싶다. (미션을 정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전은호: 수요파악을 위해서 지금 충남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해결하려는 이슈들이 충남의 분들에게 실제 필요로 한 것인가를 공무원, 주민에게 조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꾸 이슈를 제기하고 공감을 이끌어냈으면 좋겠다. 의제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3)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할 것인가

- ▶ 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사회적기업들의 십시일반을 통해 지역을 바탕으로 기금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금융체계는 명확하게 수요와 공급이 연결되어지는 부분이 있어야 하지만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신뢰와 사회적자본을 한편으로 이용해야 된다는 관점도 존재하였다.
- ▶ 금융의 지속가능성은 금융을 운영하는 조직(사무국)을 어떻게 유지할지와도 문제와도 연결된다. 우선 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금 사무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 필요하다면 기금이 안정될 때까지 민관위탁의 방식으로 조직을 유지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만 하다.
- ▶ 실험의 경험을 통해 금융체계의 상을 잡을 수 있었다. 결국 기금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에게 대출과 동시에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컨설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 ▶ 충남은 다양한 방식으로 금융체계를 구성해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산재한 자원들을 모아내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지역에서는 소규모

의 움직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를 모아낼 수 있는 플랫폼이 필요하다는 전문가의 의견이 있었다.

- 이상진: 현재 공동체 기금을 위탁운영하고 있다. 70개 이상의 사회적기업이 2억 정도 출자금을 마련하였다. 기금은 운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달을 어떻게 할지도 중요하다. 원금보장의 측면도 고민해야 하고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들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결국 기금운용은 기업가들이 공동의 책임을 질 필요가 있다. 기금 사무국 운영비의 부분은 연회비 등을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사무국 운영은 연구나 용역, 교육이나 인재양성으로 진행하고 있다. 기업의 재무상황에 대한 실질적인 컨설팅을 통해 단기적인 운영비를 확보하고 있기도 하다. 운영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특히 복제가능한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에서 어떻게 할지 충남과도 같이 고민했으면 한다.
- 정인철: 신탁의 사회공헌 기금의 경우 단위신탁 등 7,000여명이 참여하여 1년에 30억 정도 모금을 하고 있다. 우리 재단의 경우 경제, 교육, 윤리운동의 측면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 경제운동 측면에서 볼로냐나 몬드라곤과 같이 융복합협동조합 모델을 논의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융복합을 시도하고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신탁을 플랫폼으로 해서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 고민 중이다. 그런데 이러한 융복합을 시도할 때 지역의 자발적인 결사체의 대표조직을 찾는 것이 매우 어렵다. 예를 들어 협동조합을 지원하는 서비스를 설계하려고 해도 지역의 대표 조직이 누구인지 판단하는 것이 고민이 된다. 충청남도의 경우도 사회적경제의 최종적인 컨트롤타워를 결정해주어야 일을 추진할 수 있다.
- 빌려준 돈들을 못 갚으면 불행한 일이다. 사업체가 지속발전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인식확산이 필요하다. 현재 사회적경제 사업체를 성장발전시키는데 역량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이러한 부분들을 채우고 금융 안정성을 위해서는 대출과 동시에 컨설팅이 필요하다. 이와 동시에 왜 사회적경제 조직인지, 왜 사회적경제 기금인지 응답을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한 분명한 논리가 필요하다.

- 전지훈: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매개주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면서 공급주체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
- 전은호: 사회투자기금 형태를 고민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업 시에 자금조달의 루트로서 작동해야 한다. 우리지역의 신탁을 통해 안정성과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충남 안에서 자금을 스스로 모아보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현재는 누가 기부를 한다고 해도 그 플랫폼이 될만한 곳이 존재하지 않는다. 공격적으로 기부창구를 빨리 만들었으면 좋겠다. 신탁에서 신탁상품과 연계하여 이윤의 몇 %는 지역을 위해 쓰게 하는 방법도 고민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논의를 총괄할 수 있는 지역재단이 있으면 좋겠다.
- 이상진: 매개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관으로서 작동하면 좋겠다. 그리고 초기에는 이러한 중간지원의 운영비를 관에서 위탁사업으로 확보해주어야 한다.
- 박찬무: 금융설계 시 사회적경제 조직들에 대한 유의미한 지원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단순히 돈만 빌려주는 것이 아닌 사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컨설팅이 함께 가야 한다.
- 이상진: 사회적경제 영역과 기존 제도권은 다른 설계가 필요하다. 기금심사와 관리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리스크를 떠안을 수 있는 플레이어들이 모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신뢰를 사회적기업가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금융설계는 인내자본의 관점이 있어야 한다.
- 박성호: 지속가능성을 위해 자조연대금융으로 가야 한다. 기부와 대출과 투융자가 복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임팩트 투자 영역들이 점점 더 커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
- 박성호: 산재해 있는 마을단위 기금들을 어떻게 엮을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 작은 규모의 장학회, 흥동의 도토리회와 같은 자발적인 기금과 관련된 사회적 자본의 조직들을 조사해야 할 필요가 있다.

3) 2차 전문가 초점집단(FGI) 조사 결과

(1) ‘지역밀착’형 사회적금융 및 상품개발

▶ 현재 우리나라에서의 ‘지역밀착’형 사회적금융은 활동하기 시작했거나, 계획하고 있으며, 상품개발은 피드백단계와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는 단계이다.

－ 전재홍: 서울에서 위탁자금을 받아 20억원의 사업을 진행중에 있다. 특성화고등학교 적금, 설계 판매 등 진행하고 있으며, 적금을 가입하는 것만으로도 위안부 할머니를 돕는 상품을 개발하여 진행하고 있다. 그밖에 공동체 어린이집에 대한 대출, 소셜 하우스 등을 개발하고 진행 중이다. 이와 같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를 시도하고 피드백하는 과정에 있다. 사회적금융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자리잡게 할 것인지 고민하는 단계이다.

－ 홍순경: 지역주민들과 같이 밀착해야 한다. 새마을금고가 토착 금융기관인데 지역에 대해 기여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이것 역시 기업의 CSR로 진행하는 부분도 있다. 예를 들어 사회적기업화 하려는 H 영농법인에 출자 5,000만원, 지속적인 관리 중이다. 7년 정도 회계 감사를 통해 관리를 진행할 생각이다. 7년 정도면 기업자립이 이루어졌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향후 지원금으로 전환도 생각하고 있다.

(2) 추진시 제도적 한계 존재

▶ 공공기금, 그리고 지역의 한계 등 사회적금융을 추진함에 있어 제도적 제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 및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홍순경: 사회적금융의 취지는 좋으나, 쉽지 않다. 예를 들어 햇살론과 같이 100% 정부보증이 있어도 상품판매가 쉽지 않다. 이익이 없으면 잘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새마을금고의 경우 읍면단위의 공동유대권이라는 지역적 제한 때문에 그 단위의 수요자는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정치적 정책적 판단을 통한 제도개선, 인센티브가 필요하다.

－ 전재홍: 현재 서울시 한국사회투자의 기금을 받아 사회적금융상품을 판매하고 있으나, 서울시 자금의 경우, 대손충당금의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 만약 손실이 났을 경우, 조직(신협)이 책임을 져야 하는 구조이다. 손실이 나면 나 자신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적극적인 상품기획이나 판매가 어렵다.

(3) 다양한 포트폴리오의 필요

▶ 공급자(신협, 새마을금고 등)의 상품개발 및 판매, 매칭기금의 필요, 공조직의 신용창출 역할 등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제시하였다.

－ 이상진: 기금의 형태는 공공재원만이 아닌 대기업 CSR자금, 개인투자자, 사회적경제조직 등의 매칭으로 만들어나가야 한다. 공공재원의 경우, 손실발생이 불가능하나 투자소득은 불필요. 이에 반해 대기업 자금은 손실발생하여도 CSR차원의 자금으로 인정가능하다. 개인투자자는 어느정도 손실발생은 감내가능하고, 투자소득이 발생시에는 지급필요하다. 이러한 여러 주체의 특징을 고민하면서 기금구축을 시도 중이다. 기금은 여러 사회적기업에 융·투자될 것이다.

－ 전재홍: 정부가 정부가 자체적으로 기금을 만들어 공급자에게 주는 방식은 현재 어렵지 않을까 한다. 정책자금이기 때문이다. 손실불가능하다. 오히려 지자체는 신용을 빌려주고 명분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조직형 햇살론은 어떨까 한다. 담보가 없는 사회적경제조직들에게 충담신용보증재단이 출연하는 구조로 말이다.

(4) 신뢰를 통한 금융가능성

▶ 지역에서의 신뢰를 통한 자금조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 홍순경: 서천은 또 다른 H사에게 장기분할상환(15년) 대출을 해 주었다. 조직에게는 아니라 구성원 개개인에게. 그 H사를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사업지속성가능성과 평판등에 대한 신뢰가 있었다. 그래서 대출을 해 주었다.

4) FGI가 가지는 함의

① 사회적금융의 구축을 위한 연구의 방향

전문가들은 현재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금융에 대해 관심을 갖고 연구를 비롯한 실행을 추진하려는 것에 대해 시의적절함을 공감하고 있다. 하지만 각 분야에 따라서 사회적금융의 형태와 규모 등 수요가 일치되지 않는데, 결론적으로 공급자가 아니라 사회적금융의 수요자 중심의 설계가 필요함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특히 이상진 전문가는 다양한 금융형태의 수요를 반영하여 세분화가 필요한데, 서울의 경험으로는 사회적금융의 역할은 금융사각지대의 해소임을 강조한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방법적인 면으로는 사회적가치를 확장하는 목적과 지역사회 공동체에 밀착한 금융형태를 중심으로 충청남도 사회적금융의 방향설정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결국 사회적경제조직들이 활동하고 기반으로 삼는 공간은 지역사회인 만큼 지역에서 가치있는 일들에 대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활동을 위한 금융 지원과 함께 이를 성과로 인식하는 금융지원 시스템과 임팩트 투자가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의미에서 충청남도에서 대표적인 지역사회 밀착형 사회적경제조직들과 이를 지원하는 금융시스템의 대표적인 관계들의 사례가 발굴될 필요성이 있으며 특히 신용협동조합과 같은 지역 금융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사회적경제조직들의 대표적인 파트너가 필요하다.

특히 충청남도의 사회적금융에 있어서 ‘지역화’의 강점을 공통적으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지역재단이나 풀뿌리 금융기관에 의한 지역개발금융의 형태가 있다. 또한 충청남도의 사회적금융이 공공이나 특정 자본의 성향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련된 사회적경제조직과 관련 이해관계자들이 만들어내는 관계적 협동금융의 형태가 적합하다는 의견에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충청남도의 사회적금융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개발금융의 형태와 사회적경제조직을 비롯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한 자조적 관계를 강조하는 관계형 협동금융 방식에 대한 적절한 혼합의 형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② 사회적금융 수요의 방향과 대응

사회적금융의 수요에 대해서는 수요에 대한 명확한 포지셔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기금의 확보나 수요대처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특히 현재 충청남도의 사회적금융은 금융사각지대에 있는 사회적경제조직들 대상으로 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며 금융운영이나 공급을 지역사회 시각에서 보아야 함을 강조한다. 특히 사회적경제조직(기업)들에 있어서도 기금확보를 위한 설득과 노력을 위해 주요 활동에 대한 사회적가치 부분에 있어서 사업목적과 미션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금확보를 위한 노력과 함께 금융에 대한 명확하고 세분화된 수요파악이 지속가능한 사회적금융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그리고 이러한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수행하는 사업의 미션과 목적이 과연 도민들에게 필요하며 도움이 되는지의 조사는 금융의 활성화와 기금의 활용에 있어서 함의를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충청남도의 사회적금융은 지역사회와 도민을 위한 사회적가치의 미션을 수행하는 사회적경제기업(조직)들의 수요에 충실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들이 필요로 하는 형태의 기금을 제공해줄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들에게 지속적인 금융을 지원해줄 수 있는 근거 자체가 지역사회의 사회적 가치실현과 주민의 만족도와 연관되는 순환적 신뢰관계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구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충남의 사회적금융의 수요와 방향은 지역사회 중심의 플랫폼을 적극 고려해야 함을 알 수 있다.

③ 사회적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방향 설계

일반 제도권 금융과 다른 사회적금융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견은 지역사회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조직들을 비롯한 주체들간의 신뢰와 사회적자본에 기반해야 한다는 기본을 강조하고 있다. 공공과 같은 한 주체의 주도적인 기금은 기금에 대한 관리와 통제가 강화되며, 공공성의 가치가 훼손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에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의 공통된 목적과 이를 위한 역량들을 결집하는 작업이 요구된다. 또한 자생적인 지역의 금융체계를 구성하기 위해 지역에 산재해 있는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들을 모아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사회적금융의 수요자들을 대표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 성격의 조직화가 필요하다. 이는 지역사회 중심으로

기금 확보와 금융 운영에 있어서 수요자의 공통된 목소리를 낼 수 있으며 다양한 금융활동의 플랫폼의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함을 전문가들은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사회 수요자들의 중심조직들과 함께 수요자와 공급자를 연결하는 매개조직이 사회적금융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매개조직은 사회적금융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수요자들에 기금을 제공하는 자금조달의 루트로 기능하면서 공급자들을 통해 기금을 충당하는 금융의 순환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매개조직의 성격은 사회적금융의 성격을 규정짓게 되는데, 다양한 전문가들은 다양한 기금심사 및 금융관리방향에 있어서 제도권 금융기관보다 경제적 리스크를 수용하고 인내자본의 성격으로서 사회적금융의 기금을 운영해야 함을 주장한다.

[부 록 2] 금융 수요조사 설문지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금 및 금융 수요조사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금 및 금융 수요조사

A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는 충청남도 출연 지원기관인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하는 박춘섭 센터장입니다.

센터에서는 「충남 사회적금융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연구 과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금융의 시스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기업 여러분들의 재정 현황이나 금융 수요를 조사하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제공하는 본 정보는 통계법 제33조에 의거하여, 익명으로 처리되며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을 약속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진정한 충청남도 사회적경제를 위해 필요한 사회적금융의 의견 조사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본 설문조사와 관련하여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연락처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설문에 협조해주셔서다시한번감사드립니다.

2016년 9월

※ 본 조사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다음으로 문의하여 주십시오.

▶ 조사담당 :
충남연구원 사회적경제연구센터 박춘섭, 전지훈

※ 응답자

- 1) 기업명:
- 2) 직 위:
- 3) 이 름:

PART 1.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일반현황

문1) 귀사의 법인형태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주식회사 | ② 재단법인 |
| ③ 사단법인 | ④ 협동조합 |
| ⑤ 영농조합법인 | ⑥ 농업회사법인 |
| ⑦ 비영리법인 | ⑧ 기타 () |

문2) 귀사의 현황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2-1) 직원규모: 임직원()명 일반직()명 취약계층()명

2-2) 조직 설립연도: ()년

2-3) 사회적기업, 마을기업의 경우 최초지정 연도 : ()년

2-4) 연간 매출 규모

- | | | |
|-------------|-------------|--------------|
| ① 3천만원 미만 | ② 3천만원-5천만원 | ③ 5천만원 - 1억원 |
| ④ 1억원 - 5억원 | ⑤ 5억원-10억원 | ⑥ 10억원 이상 |

문3) 귀사의 업무공간은 어떠한 형태 입니까?

- | | |
|-------------|-------------------------------|
| ① 기업소유 건물 | ② 기업소유 사무실 |
| ③ 사무실 임차 | ④ 관련 조직내 사무공간 활용 |
| ⑤ 정부의 공간 임대 | ⑥ 기타 () |

문4) 귀사의 업종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농업 | ② 제조업 |
| ③ 재활용 | ④ 건설업 |
| ⑤ 도소매·음식·숙박 | ⑥ 사업서비스 |
| ⑦ 시설관리사업지원 | ⑧ 교육 |
| ⑨ 보건 | ⑩ 사회복지 |
| ⑪ 문화 | ⑪ 기타개인서비스() |

PART 2. 충남 사회적경제기업들의 자금조달 현황

문1) 사회적경제 자금조달과 관련하여 알고 계시는 외부 자금조달 방법을 모두 골라주세요.

- | | |
|---------------------------------------|--|
| <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 정책자금 대출 | <input type="checkbox"/> 미소금융 사회적기업 시설운영비 대출 |
| <input type="checkbox"/> 고용노동부의 모태펀드 | <input type="checkbox"/> 신용보증재단의 사회적경제기업 보증 |
| <input type="checkbox"/> 크라우드 펀딩 | <input type="checkbox"/> 기타 비영리기관 대출 |
| <input type="checkbox"/> 타 지자체 투융자사업 | <input type="checkbox"/> 기타 () |

문2) 귀사의 주요 자금조달 방법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 ② 일반시중 금융기관 대출 |
| ③ 신협 및 새마을금고 활용 대출 | ④ 비영리기관 대출 |
| ⑤ 특수관계인(대표자 포함)의 차입 | ⑥ 후원금(정부, 민간 포함) |
| ⑦ 회사채 발행 | ⑧ 기타 () |

문3) 귀사는 운영을 위해 조달한 자금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십니까?

- | | |
|------------------|------------------|
| ① 1천만원 미만 | ②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
| ③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④ 5천만원 ~ 1억원 미만 |
| ⑤ 1억원 ~ 3억원 미만 | ⑥ 3억원 ~ 5억원 미만 |
| ⑦ 5억원 이상 | |

문4) 귀사가 외부에서 조달하는 자금의 주요 용도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운영자금(인건비 등) | ② 시설자금(설비 및 임차료 등) |
| ③ 사업개발비 | ④ (고금리)차입금 대환 |
| ⑤ 기타 () | |

문5) 외부에서 조달한 자금의 상환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10년 이상 | ② 5년 - 10년 |
| ③ 3년 - 5년 | ④ 1년 - 2년 |
| ⑤ 1년 미만 | |

문6) 대외적 자금조달 시 겪는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최대 2개까지 골라주세요)

- | | |
|-----------------|-------------|
| ① 서류 작성 및 제출 | ② 상담 창구의 부족 |
| ③ 요구 담보 및 보증 부담 | ④ 재무 성과의 입증 |
| ⑤ 사업 가치의 입증 | ⑥ 상환 기간 |
| ⑦ 기타 () | |

문7) 전년도와 비교하여 외부 자금조달을 위한 환경은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 | | | |
|---------|---|------------|
| ① 좋아졌다. | » | 좋아진 이유 () |
| ② 악화됐다. | » | 악화된 이유 () |
| ③ 변화없다. | | |

PART 3. 충남 사회적경제조직의 자금 수요

문1) 귀사는 1년 이내에 외부로부터 자금조달이 필요하십니까?

- | | |
|------------|---------|
| ① 필요하다 | ② 필요없다. |
| ③ 아직 모르겠다. | |

문2) 귀사가 선호하는 자금조달은 무엇입니까?

- | | |
|---------------------|------------------|
| ① 정부의 정책자금 대출 | ② 일반시중 금융기관 대출 |
| ③ 신탁 및 새마을금고 활용 대출 | ④ 비영리기관 대출 |
| ⑤ 특수관계인(대표자 포함)의 차입 | ⑥ 후원금(정부, 민간 포함) |
| ⑦ 회사채 발행 | ⑧ 기타 () |

문3) 조달하고자 하는 자금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 | | |
|------------------|------------------|
| ① 1천만원 미만 | ② 1천만원 ~ 3천만원 미만 |
| ③ 3천만원 ~ 5천만원 미만 | ④ 5천만원 ~ 1억원 미만 |
| ⑤ 1억원 ~ 3억원 미만 | ⑥ 3억원 ~ 5억원 미만 |
| ⑦ 5억원 이상 | |

문4) 조달자금의 용도는 무엇입니까?

- | | |
|---------------|--------------------|
| ① 운영자금(인건비 등) | ② 시설자금(설비 및 임차료 등) |
| ③ 사업개발비 | ④ (고금리)차입금 대환 |
| ⑤ 기타 () | |

문5) 선호하는 상환기간은 어느 정도입니까?

- | | |
|-----------|------------|
| ① 10년 이상 | ② 5년 - 10년 |
| ③ 3년 - 5년 | ④ 1년 - 2년 |
| ⑤ 1년 미만 | |

문6) 귀사에서 1년중 자금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는 언제입니까?

- | | |
|-------|-------|
| ① 1분기 | ② 2분기 |
| ③ 3분기 | ④ 4분기 |

문7) 귀사는 대출시 물적 담보제공이 가능하십니까?

- | | |
|----------|----------------|
| ① 가능하다. | ② 부분적으로는 가능하다. |
| ③ 불가능하다. | |

문7-1) 물적담보제공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담보액은 어느정도입니까?

- | | |
|-----------------|------------------|
| ① 5억원 이상 | ② 1억원 이상 ~ 5억원 |
| ③ 5천만원 이상 ~ 1억원 | ④ 1천만원 이상 ~ 5천만원 |
| ⑤ 1천만원 미만 | |

문8) 한국은행의 현재(8월) 기준금리는 2.5%, 시중은행의 대출금리(중소기업 신용대출)는 5.8% 수준입니다. 귀사는 신용대출 시 이자상환의 부담에 대해 느끼는 포인트를 선택해주세요

- | | |
|-----------|-----------|
| ① 5.0% 이상 | ② 4.5% 이상 |
| ③ 4.0% 이상 | ④ 3.5% 이상 |
| ⑤ 3.0% 이상 | ⑥ 2.5% 이상 |
| ⑦ 2.0% 이상 | |

문9) 대출 시 인적 보증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기업가에 대한 보증제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높은 사회적책임이 필요하므로 인적보증을 강화해야 한다.
- ② 경영 부담을 가중시키므로 보증을 완화해야 한다.
- ③ 보증은 중요하지 않다.
- ④ 잘 모르겠다.

PART 4. 사회적금융의 인식

문1) ※‘사회적금융’에 대해 알고 계십니까?

- ① 잘 알고 있고 실제 지원을 받은 적이 있다.
- ② 교육 등을 통해 기본 개념은 알고 있다.
- ③ 들어는 봤으나 잘 모른다.
- ④ 전혀 모른다.
- ⑤ 관심 없다.

※ 사회적금융이란 ? 금융기관의 ‘경제적 이익’보다 ‘사회적 가치 실현’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금융으로,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공동체적 가치를 실현하는 자금수요자에 대한 대출·투자부문을 일컬음 (KB금융지주경영연구소, 2013)

문2) 사회적금융은 시중 금융기관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가 있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 ① 사회적 가치성과 중심의 대출
- ② 신속하고 적시의 대출 절차
- ③ 시중은행보다 낮은 대출금리
- ④ 10년 이상의 장기신용대출(인내자본)
- ⑤ 사회적경제조직(기업)에 대한 신용대출
- ⑥ 기타 ()

문3) 충남에서 사회적금융의 최우선 목적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 ①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긴급자금 신용대출
- ② 공동체와 주민의 문제해결 위한 지역금융활동
- ③ 사회문제해결, 사회혁신 위한 투자유치
- ④ 상호부조와 같은 협동금융의 활성화 지원
- ⑤ 기타 ()

문4) 사회적금융 역할과 기금활용 대한 질문입니다.

질문내용		매우 필요	약간 필요	보 통	다소 불필요	매우 불필요
4-1)	사회적경제조직 긴급 소액자금의 적시공급					
4-2)	사회적경제조직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활용					
4-3)	사회적경제조직 사업개발비 지원 활용					
4-4)	사회적경제조직시설자금(설비,임차료 등) 지원					
4-5)	지역사회 문제해결 위한 긴급 소액자 금 대출					
4-6)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과 소득증대 사업진행					

문5) 사회적금융을 위한 재원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가장 효과적이라 생각하십니까?

(모두 고르시오)

- ① 중앙 정부 지원
- ② 충청남도 및 시군 자치단체 지원
- ③ 도내 민간기업의 후원과 투자
- ④ 사회적경제조직들간 상호부조 기금
- ⑤ 지역사회(공동체) 및 기초지자체들의 재원
- ⑥ 기타 ()

※ 위 보기를 토대로 가장 이상적인 사회적금융의 재원마련 조합을 만들어주세요(2개이상 조합)

()

문6) 충남의 사회적금융 지원조직은 어떻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충청남도에서 공공조직으로 직접 운영한다.
- ② 관련 공공기관(충남신용보증재단 등)에서 운영한다.
- ③ 충청남도에서 출연하여 운영기관을 설립한다.
- ④ 전문성 있는 민간조직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 ⑤ 민간 재단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다.
- ⑥ 신협 등 기존 사회적경제조직이 운영한다.
- ⑦ 기타 ()

■ 충남 사회적금융 구축과 활성화를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 귀하의 자유로운 의견 부탁드립니다.

◆ 긴 설문을 끝까지 마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

■ 집 필 자 ■

연구책임 · 박춘섭 충남연구원 전임책임연구원

공동연구 · 전지훈 충남연구원 연구원

이홍택 충남연구원 전임연구원

외부연구 · 김종수 사회적협동조합 공동체세움 상임이사

이상진 한국사회혁신금융(주) 대표

전략연구2016-22 · 충남 사회적금융체계의 구축과 운영방안

글쓴이 · 박춘섭, 전지훈, 이홍택, 김종수, 이상진

발행자 · 강현수 / 발행처 · 충남연구원

인쇄 · 2016년 12월 31일 / 발행 · 2016년 12월 31일

주소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73-26 (32589)

전화 · 041-840-1217(사회적경제연구센터) 041-840-1114(대표) / 팩스 · 041-840-1219

ISBN · 978-89-6124-365-0 03350

<http://www.cni.re.kr>

© 2016. 충남연구원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기하면 자유로이 인용할 수 있습니다.
- 무단전재하거나 복사, 유통시키면 법에 저촉됩니다.
-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